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토론회

문화로 기상 역상

문화도시
새로운
프레임짜기

 문화체육관광부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Program

기억의 재구성

시간	내용	발표자
09:00~10:00	등록	
10:00~10:05	식순소개 및 개회사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좌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10:10~11:30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추진 성과와 비판, 그리고 발전과제	발제 이윤이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토론 라도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학예실장) 권고섭 (부천예총 연극협회 지부장) 손영철 (나눔소리 대표)
11:30~12:00		종합토론

상상의 발현

시간	내용	발표자
좌장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4:00~15:00	[①지역문화일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축	발제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토론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신정호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대리)
15:00~16:00	[②문화예산안정화]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발제 조정운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토론 김명희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획팀장)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차장) 이형복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16:00~16:15		휴식
16:15~17:15	[③예술의 사회적 가치] 생활문화 10년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발제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토론 정종은 (메타기획컨설팅 부소장) 임승관 (문화바람 대표)
17:15~17:30		종합토론
17:30		폐회



Part I 지역문화진흥	1
발 제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 구상	3
토론 1 15년 전 그리고 다시 15년 후, 부천문화재단 미래를 위한 방향 제언	12
토론 2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 구상에 대한 제언	16
토론 3 부천문화재단 지금 해야할일	18
토론 4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구상'을 중심으로	21
Part II 지역문화일꾼	27
발 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축	29
토론 1 지향가치, 공공의 역할, 방법론 측면에서	37
토론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수급 ≒ 고도화 인가?	42
Part III. 문화예산 안정화	47
발 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49
토론 1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62
토론 2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역할	66
토론 3 기초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지역문화발전기금)	69
Part IV. 생활 예술의 사회적 가치	76
발 제 예술의 사회적 가치('삶의 예술'을 위하여)	77
토론 1 '삶의 예술'을 위한 비전, 뒤집기 그리고 전략	83
토론 2 우리에게 생활예술은 왜? 아름다운가	86
붙임	101
붙임 1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103
붙임 2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08
붙임 3 예술의 사회적 가치('삶의 예술'을 위하여)	126

Part |

지역문화진흥

- ❖ 발제자: 이윤이(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 ❖ 토론자
 - 라도삼(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 양원모(경기도미술관 학예실장)
 - 권고섭(부천예총 연극협회 지부장)
 - 손영철(나눔소리 대표)

발제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 구상

※ 이윤이(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1. 부천시 문화정책과 사업

1) 문화분야 조례

분류(장)	제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문화예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15. 08.03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과	13. 09.30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문화예술과	12. 03.2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문화예술과	15. 02.16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과	12. 08.13
	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문화예술과	10. 01.1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15. 08.0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과	12. 05.07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예술과	13. 09.30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14. 10.13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문화예술과	14. 10.13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과	15. 01.19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문화예술과	14. 10.13
	문화산업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문화산업과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산업과	05. 09.30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산업과	15. 01.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산업과	15. 08.03
도서관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상동도서관	11. 12.30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상동도서관	12. 10.0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상동도서관	14. 02.03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상동도서관	14. 07.28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원미도서관	15. 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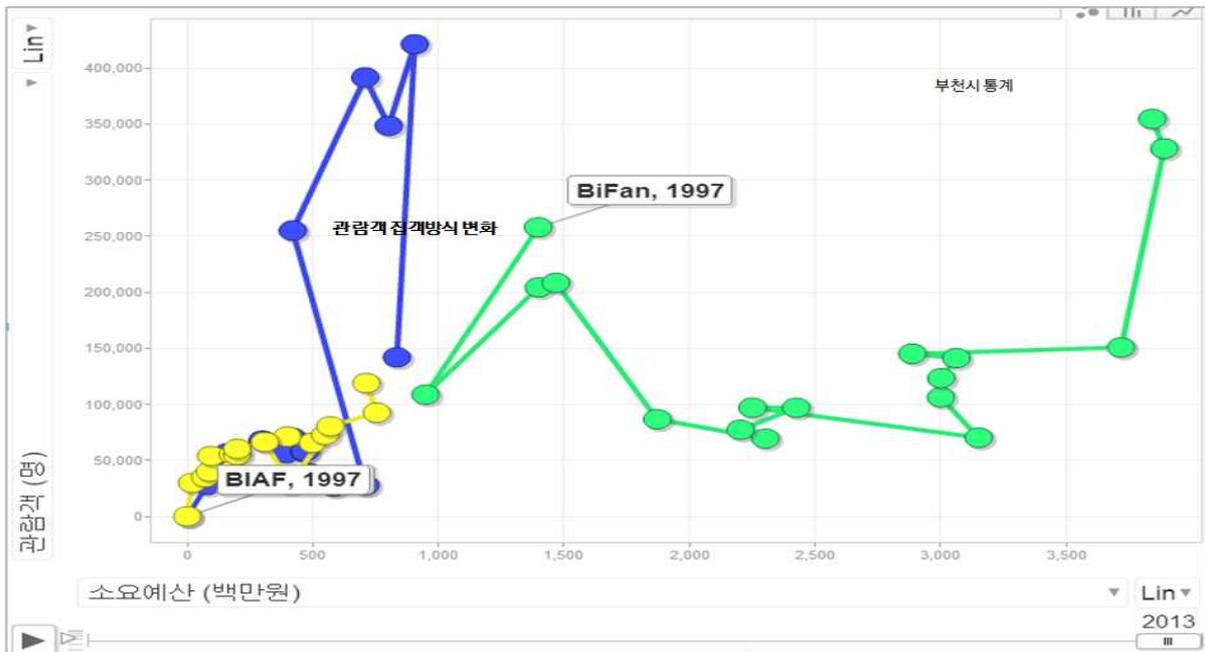
2) 부천시 시기별 주요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

구분	기간	주요 사업
1. 문화예술진흥 기초 마련	● 지방자치제 이전 1985-1994년)	● 복사골예술제 개최(1985년) ● 부천시립예술단 창단(1988년)
2. 문화도시 정책 도입 (문화도시 마케팅)	● 민선1기(1995-1998년)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1997년)
3. 문화도시 공간 조성 만화영상 콘텐츠 육성	● 민선2기(1998-2002년) ● 민선3기(2002-2006년)	●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1998년) ●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1999년) ● 부천영상문화단지 조성(2001년) ●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1999년) ● 부천문화재단 설립(2001년) ● 동춘서커스장 건립 무산(2004~)
4. 문화산업 진흥 기반 구축	● 민선4기(2006-2010)	● 부천무형문화엑스포 (2008년, 2010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2009년)
5. 생활문화진흥정책 추진 문화도시 공간 개편	● 민선5기(2010-2014년) ● 민선6기(2014년-현재)	● 생활문화예술진흥 추진 (2014) ●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추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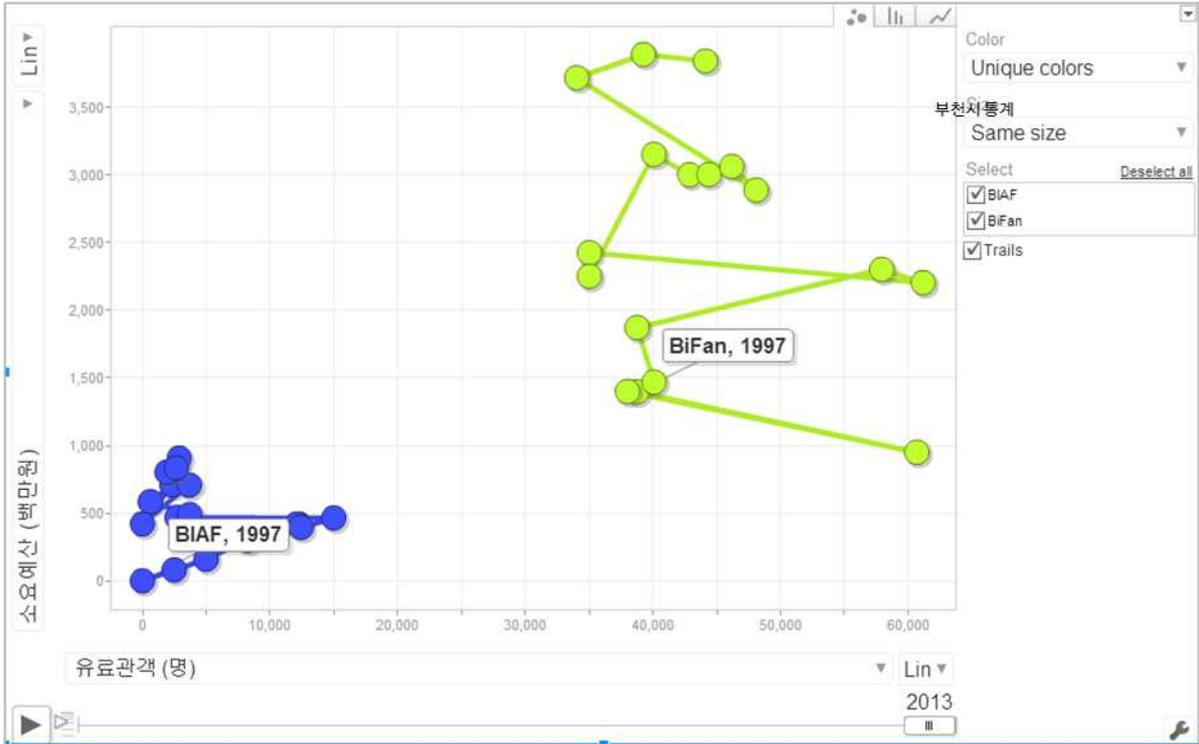
3) 부천시 문화분야 기관 단체 설립 및 지원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설립시기)	인원	기관예산 (억원)	예산구성 참고(억원)	관련 법
부천시 산하기관	부천문화재단(2001)	63명 (현원 53명)	61.9	출연금 43 자체수익 18.4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한국만화 영상진흥원(2009)	49명 (현원 44명)	114.5	출연금 46.3 국비 보조금 37.1 도비 보조금 44 시비 보조금 10.2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33포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인가 특수법인	부천문화원 (1966)	이사회 21명 사무국 7명 향토문화연구소 8 명	6.7 (2014)	분권교부세 1.4 시비 4 국비(기금) 0.2 자체수익 1	지방문화원진흥법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2005)	74명 (현원 51명)	233.8	도 출연금 91 시 출연금 11 외부보조금 123.5 자체수익 8.3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	부천시민 미디어센터(2009)	6명		민간위탁금 4.1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박물관 (2004) (교육,수석,유형자기 ,활,웅기,필벽)	22명 (현원 16명)		민간위탁금 13.9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운영	시립예술단 (1988)	사무국 9명 (현원 8명) 부천필 89명 합창단 51명		운영비 73.3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부천시 지원 민간단체	한국예총 부천지회	-	-	운영비보조 7,600만원	-
	부천시어머니합창단	-	-	운영비보조 3,500만원	-
	부천 비보이	-	-	운영비보조 3,000만원	-

4) 부천시 주요 문화사업 (3대 국제축제 : 예산대비 관람객)



5) 부천시 주요 문화사업 (국제축제 : 예산 대비 유료관람객)



6) 부천시 주요 문화사업 (시립예술단)

교향곡 전곡 연주 프로젝트 : 말러, 브루크너

1999~04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 연주 / 한국 첫 시도
 2007~13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시리즈 연주

Just Marhler!

음악팬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한 부천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국내 음악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레퍼토리나 음악의 질이 급상승하였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음악계에 반향을 일으키던 부천필은 1999년 드디어, 말러 교향곡 연주시리즈(이하 「말러 시리즈」)를 통해 핵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던진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계속된 부천필의 「말러 시리즈」는 국내 클래식 공연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연주의 질이나 관객 동원, 기획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에 국내에서 잘 공연되지 않았던 '말러'라는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프렐류드 콘서트, 말러 서적 전시회, 말러 LD 감상회, 말러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시도되었다.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연과는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취하였는데, “당신이 이 음악회에 온다면 당신은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것이다.” 라는 자신만만한 문구는 잠재되어있던 말러 관객층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차별화된 마케팅과 홍보는 즉시 그 효과를 발휘했다. 1999년 11월 27일에 있었던 말러 시리즈 첫 공연에서 유료관객만 천명이 넘었다. 말러 교향곡 제2번 연주회는 「말러 시리즈」 사상 최고의 커튼콜을 기록하였고, 교향곡 제8번, 제9번, 제10번의 세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부천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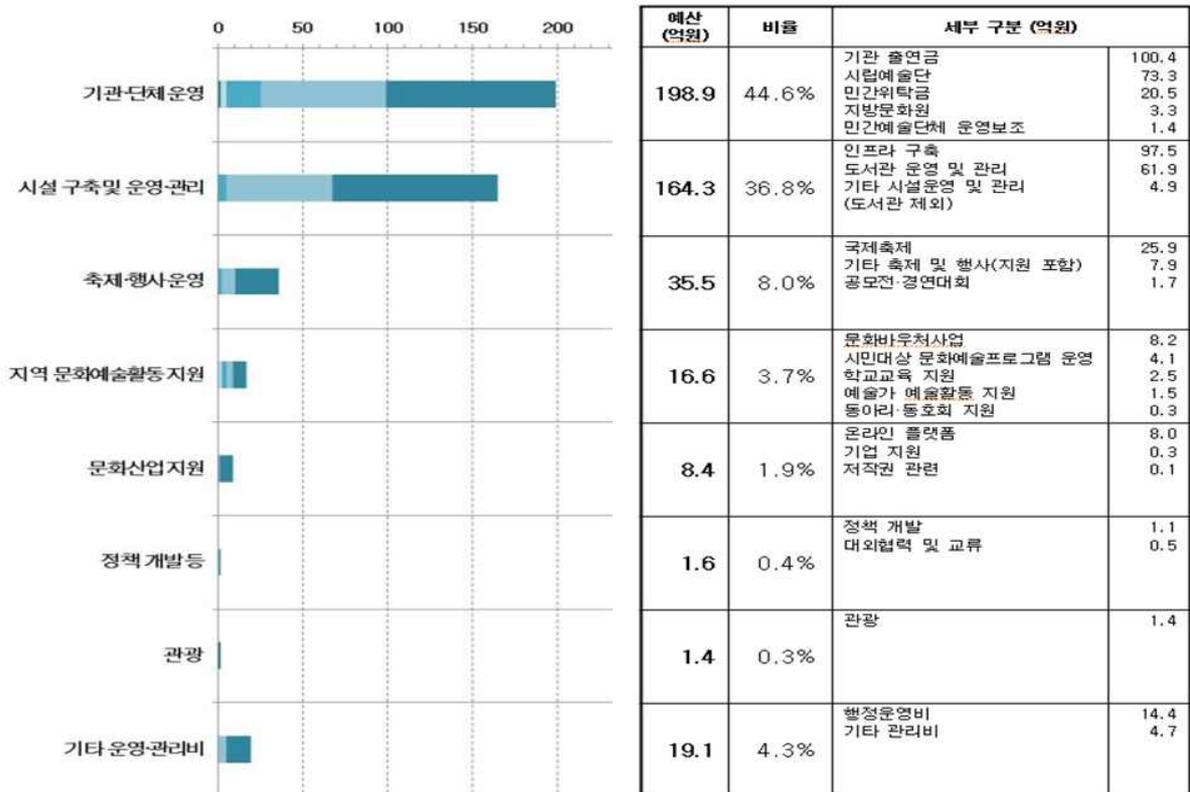
1989 임헌정 상임지휘자 영입
 1998 PC통신 나무누리 부천필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모임 '부사모' 결성
 2000 부천필 후원회 발족

7) 부천시 문화예산 (문화산업/문화예술/도서관 2007~2015)

e 재정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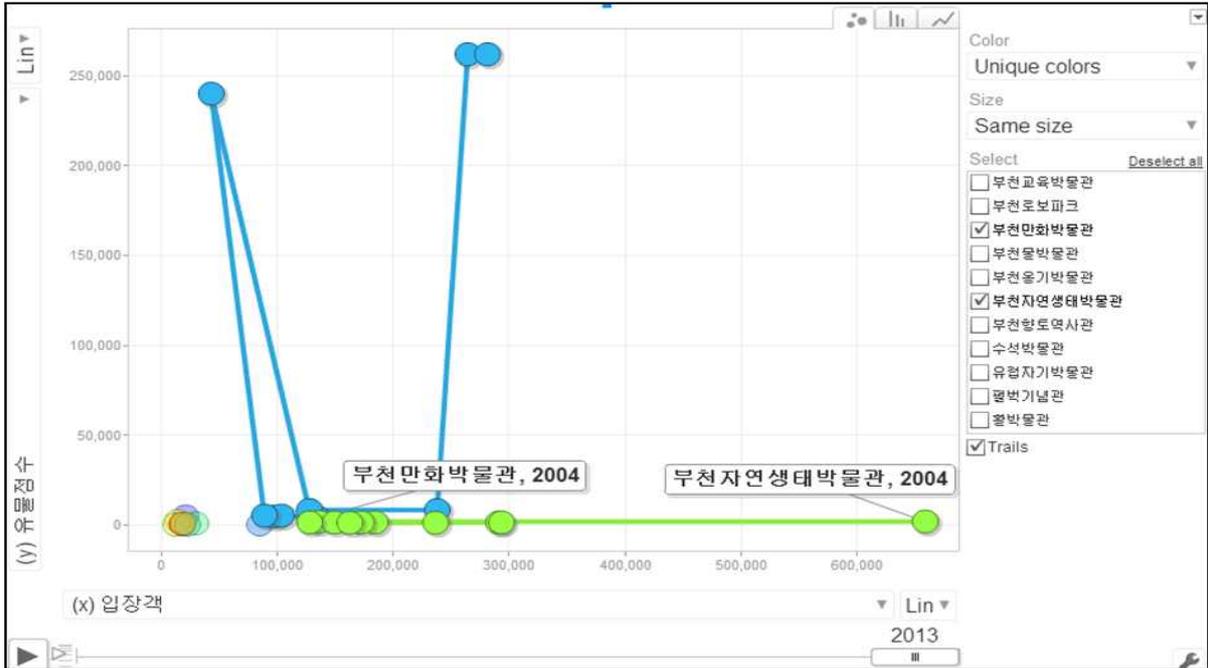


8) 부천시 문화예산 (2015 본예산)



9) 부천시 박물관 유물수/입장객

부천시 통계



10) 부천시 도서관/작은도서관

- 2011/2012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도서관' 선정(2년연속)
- 2014 한국도서협회 주관 「한국도서관상」 수상
- 2015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협정체결
- 2016 2015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도서관' 선정(꿈빛도서관)
- 2017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현장" 우수기관 선정(꿈빛도서관)
- 2018 문화관광부 주관 작은 도서관 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2019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11) 부천아트밸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수 (개교)	합계	65개교	97개교	115개교	119개교
	초	62	62	62	62
	중	2	32	32	32
	고	1	1	19	23
	특수	0	2	2	2
학생수(명)		1,410	3,672	5,721	6,131
강사수(명)		74	112	228	232
프로그램수(개)		73	128	195	205
1개 학교당 프로그램수(개)		1.12	1.32	1.70	1.72
예산액(천원)		1,413,600	1,514,000	2,120,000	1,890,000

산하기관 주요 예산 사업

	A 아카이브 (+전문도서관)	C 문화사업	E 인력육성	R 연구/개발	B 비즈니스 마켓	기타
만화 (진흥원)	만화박물관 만화도서 26만권, 회구자료 1만9천권, 만화DB 23만권	Bicof 18회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글로벌 만화 인재 육성 우리만화연대 아카데미	웹툰 플랫폼 개발 지원	만화마켓 투자펀드	
영화 (BiFan)		BiFan(Pfan) 19회 (상영작 총 3452편)			NAFF	
애니메이션 (BIAFF)		BIAF (Pisaf) 17회 (상영작 총 3311편)				
음악(부천필)		《월드클래시시리즈》 《해설음악학》, 《가족음악학》, 《이탈리아클래식》, 《스타가 있는 음악학》	-			
미디어센터	오정씨네마테크 (미디어센터 자료아관)	공동체미디어교육 노인미디어교육 장애인미디어교육 등	영상문화전문인력육성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시각예술(재단)						
공연예술(재단)		상설어린이공연 기획공연		공연콘텐츠 개발		
문학(재단)			신인문학상 필범문학상			수주문학상
융복합 (삼정동소각장)	장소 아카이브	미디어전시				

다감 소장자료 도서자료 21553, 음악자료 4903 (클래식 3803), 영상자료 5922 / 문화예술 DB 단체 200, 개인 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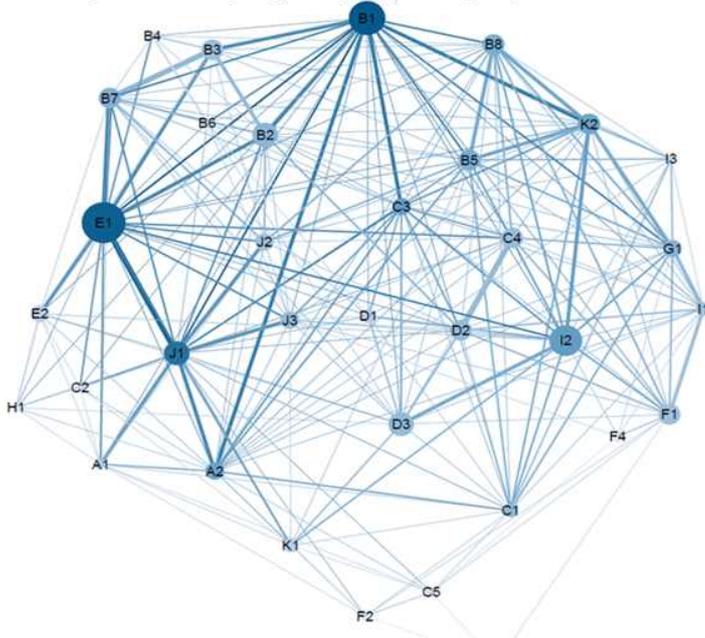
2. 문화 분야 문제진단

1) 지역사회 관찰자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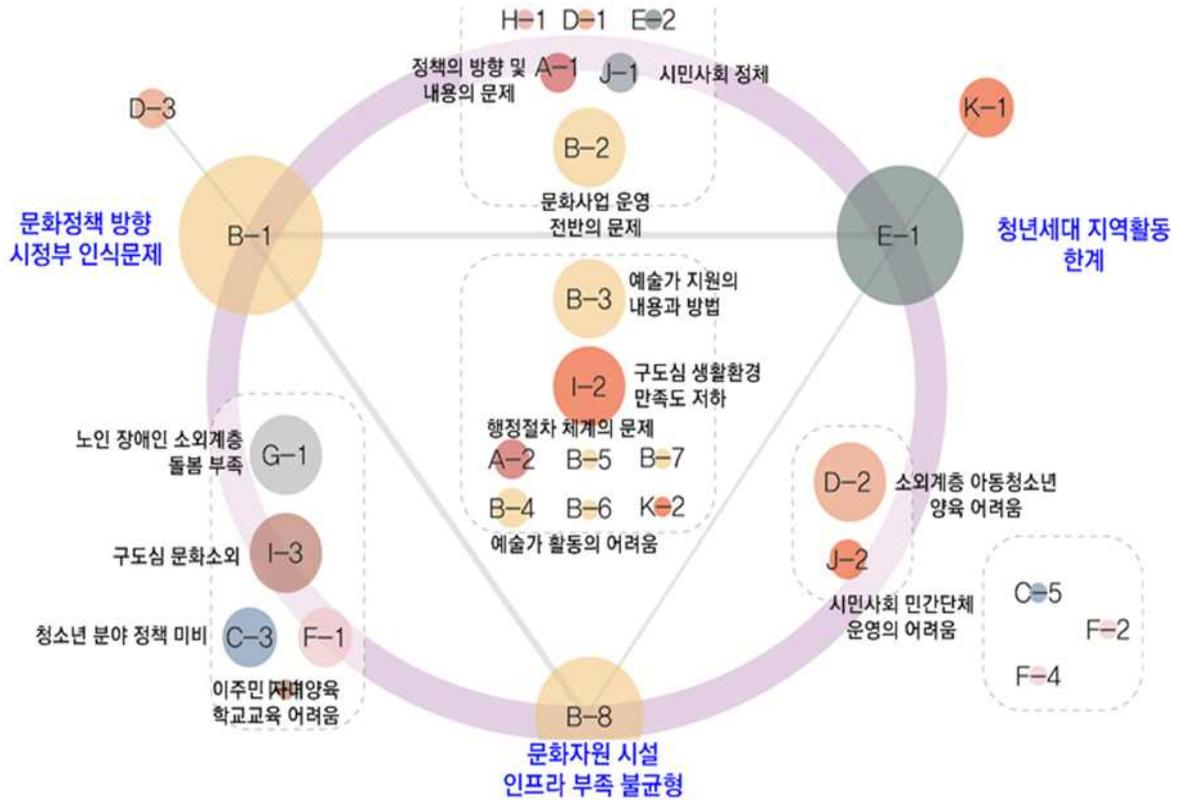
심층 인터뷰: 지역사회 관찰자 그룹 (문화, 복지, 교육 분야) 눈덩이구리기 표집 40명 /

인터뷰 내용: 지역사회 변화의 특성과 문제점

문제점 도출: 11개 분야, 34개 유형, 167개 문제점



A. 정책 일반	A-1	정책 방향, 내용
	A-2	행정 절차, 체계
B. 문화 정책	B-1	문화정책 방향이 불분명 / 시장부의 인식부족
	B-2	문화 사업 운영 전반 문제
	B-3	예술가 지원내용, 방법 문제
	B-4	예술가 활동 어려움
	B-5	지역주민 문화참여 기회 부족
	B-6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B-7	문화관련 일자리 창출 부족
	B-8	문화기행/시골민촌의 부족 및 불균형
C. 복지정책	C-1	복지정책 일반 미비점 / 시장부의 인식문제
	C-2	평생교육 분야 미비점 : 집중구로, 사업운영의 어려움
	C-3	청소년 분야 미비점
	C-4	교육복지 분야 미비점
	C-5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분야 미비점
D. 청소년	D-1	청소년 참여문제, 활동공간
	D-2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의 어려움
	D-3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모세대 인식 부족/무책임한 청소년 교육환경
E. 청년	E-1	청년 지역활동 연계
	E-2	청년세대의 사회적 문제
F. 다문화/북한이탈주민	F-1	이주민 자녀양육, 학교 진학 어려움
	F-2	이주민 생활, 지역사회 활동의 연계
	F-3	북한이탈주민 사회참여 어려움
	F-4	이주민-선주민간 갈등
G. 노인/장애인	G-1	노인/장애인 사회적응 불충 부족
H. 노동자	H-1	노동 여건 개선
I. 구도심 환경 변화	I-1	구도심 인구변화
	I-2	구도심 생활환경의 만족도 저하
	I-3	구도심 문화소외
J. 시민사회	J-1	시민사회 정체
	J-2	시민단체 운영의 어려움
	J-3	민-관 갈등
K. 지역사회 활동	K-1	지역사회 인식, 활동부족
	K-2	지역사회 권력 집중



핵심문제 1

문화정책 방향, 문화에 대한 협소한 인식 (B1)

생활문화, 평생교육, 청소년 교육 등 여러 정책들로 구성이 되나 각 정책들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B-1-1)

생활문화 정책의 경우 관주도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정보전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B-1-4)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인식적 한계 (B-1-2)

대형축제에 집중된 예산(B-1-5)과 문화시설의 합리적 이용 측면보다 규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B-1-8)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핵심문제 2

청년세대의 지역활동 한계 (E1)

젊은 세대 활동가의 생산구조가 단절되었음(E-1-1)

연구진들의 소분류 문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항목이다. 기존세대가 문화경제 생태계를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 젊은 세대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의 부재 등이 이 문제와 얽혀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청년세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장벽이 있음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E-1-5)

이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무보수 활동을 요구하는 문제, 기존 권력 집단의 승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문제 3

청년세대의 지역활동 한계 (E1)

젊은 세대 활동가의 생산구조가 단절되었음(E-1-1)

연구진들의 소분류 문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항목이다. 기존세대가 문화경제 생태계를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 젊은 세대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의 부재 등이 이 문제와 얽혀있다.

이와 연관되어 문화예술분야에 청년세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장벽이 있음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E-1-5)

이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무보수 활동을 요구하는 문제, 기존 권력집단의 승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문제 4

문화자원/시설인프라 부족 및 불균형 (B8)

지역간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의 불균등, 공공성 예산집행의 불균형이 지적된다.(B-8-2)

이는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 등 문화관련 정책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주요 정책목표였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족과 불균등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관, 시민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B-8-3)는 점이 지적된다.

아울러 대규모 문화시설이 아니라 생활권 내 소규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제기되었다.(B-8-6)

핵심문제 5

문화자원/시설인프라 부족 및 불균형 (B8)

지역간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의 불균등, 공공성 예산집행의 불균형이 지적된다.(B-8-2)

이는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 등 문화관련 정책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주요 정책목표였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부족과 불균등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관, 시민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B-8-3)는 점이 지적된다.

아울러 대규모 문화시설이 아니라 생활권 내 소규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제기되었다.(B-8-6)

3. 목표 / 전략 구상

주요문제설정 (P)		정책목표 (G)
P1 문화정책 방향, 시 정부의 인식문제		G1 문화 관련 타분야 정책을 통합하고, 프로그램부터 시설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
	관련정책 연관성 부족 생활문화정책 내용부적절 대형축제사업 예산집중 문화시설 적합성보다 규모를 중시	
P2 청년세대의 지역활동 한계		G2 지역의 청년 입장에서 문화 및 관련 타분야 정책들을 재조정
	젊은 세대 활동가 재생산구조 단절 문화예술분야 청년세대 진입장벽	
P3 문화자원/시설인프라 부족 및 불균형		G3 문화시설 배치와 문화인력 재생산체계 구축을 결합하는 문화자산 개념 도입
	지역간 문화시설 불균등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재생산구조 취약 생활권 내 소규모 공간부족	

정책목표 (G)	전략 (S)
G1 문화 관련 타분야 정책을 통합하고, 프로그램부터 시설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	S1-1 정책 제도 혁신, 문화정책을 기획하고 평가를 주도하는 조직 구성, 지식기능 강화 (정책센터) S1-2 문화 프로그램-시설의 포괄적 정책 계획 수립 (문화복지기준선) S1-3 모든 시 정책의 문화적 요소 도입 (가칭 ‘+문화’ 사업) 문화협력사업: 교육, 복지, 일자리 분야 (가칭 ‘문화+ 사업’)
G2 지역의 청년 입장에서 문화 및 관련 타분야 정책들을 재조정	S2-1 시의회 청년 거버넌스 조직 구성 S2-2 시 정책평가 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 고려 S2-3 청년 세대 위한 문화사업(축제 등) 재설계
G3 문화시설 배치와 문화인력 재생산체계 구축을 결합하는 문화자산 개념 도입	S3-1 스케일별 문화시설 배치계획 수립 및 사업 위계화 (인력육성포함) S3-2 시의 문화자산 관리제도 도입 (도시관리계획 중기재정계획 연계) S3-3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자산신탁제도

토론 1

15년 전 그리고 다시 15년 후, 부천문화재단 미래를 위한 방향 제언

※ 라도삼(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1. 15년 전, 그 분명한 기억

강사생활로 곤란을 겪던 시절, 우연한 기회로 현재의 직장인 <서울연구원>에 들어갔다. 문화정책 언저리에서 변변한 경력하나 갖고 있지 못했던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방향없이 흔들렸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았다고나 해야 할까? 지금이라고 해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 시절은 나에게 힘든 시절이었던 것만은 분명 사실이다.

그 힘든 시절,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배들과의 인연이었다. 정책은 말할 것도 문화 자체에 대한 담론이 약했던 시절, 몇몇 선배들은 나에게 분명한 정책의 지표를 제공했고, 그 도움으로 인해 나는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지금의 문화정책을 개척해 오게 되었다. 선배들의 도움이야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게 된 힘이었던 것이다.

그 선배들 중 <부천문화재단>은 단연 돋보이는 사례와 담론으로 나에게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 해주었다. 특별한 자원이 없던 부천에서 행정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내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만화/애니메이션 도시로서 위상이나 박물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 판타스틱 영화제 등은 도시 내에서 문화의 생태계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과 방향, 기술을 보여주었다. 인천과 서울 사이에 갇혀 자칫 '해먹'과도 같이 폭 꺼진 도시가 될 수 있던 여건에서 부천은 '폭 꺼진 해먹'이 '우뚝 솟은 텐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남권의 문제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인접한 문화지역이 있기에 서울로 끌어당기기보다는 부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2. 그 언제부턴가 희미해진 기억,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힘

그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던 부천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 결과 부천은 또 다시 특별한 특징이나 브랜드가 없는 '해먹의 도시'가 되었다. 인천과 서울 사이에서 부천으로 몰려오기보다 각각 인천과 서울로 분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과 인천 모두 자기 문화정책이 강해지고, 소비력이 강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해서이기도 하지만,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힘과 당시까지 쌓아오던 브랜드의 상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성장하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 단지 몇 몇 사람들이 복귀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문화도시로서 부천시 새롭게 문제의식을 정비하고, 새로이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새롭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고, 만화도시로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행정체계 내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문화가 가진 힘과 존중(감)을 확보하려는 노력 등은 부천시 새로운 문화도시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은 정책의 여건을 바꾸고, 기억을 상실하도록 만들며, 그럼으로써 그것이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또 요구한다. 곧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과 여건,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3. 너무나 변해버린, 그리고 너무나 낯선

15년 전에 비해 문화환경은 너무나 변해버렸다. 우선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이른바 문화3법으로 불리는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법>, <지역문화진흥법>이 탄생했다. 내용이야 만족스럽지 않지만, 분명 문화계에서 '민원'처럼 희망하던 법이었고,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 기대했던 법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기본권으로서 문화권과 차별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생활세계 내에서 문화권의 구현)에 대한 것이었고, 지역을 좀 더 문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사회적 공유의식, 그리고 정책 내 수단을 만드는 틀이었다.

더불어 사회와 지역의 발전방식 또한 변했다.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절벽과 제로에 가까워지는 성장을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앞에 '치유'와 '재생'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코드'가 과감히 정책적 용어로 등장했고, 지금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재생하고, 이를 위해 치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역의 생산방식에서도, 개인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치유'와 '재생'은 새로운 전략이자 정책방향이 되었다.

사람들의 세계 또한 그렇다. 어느 순간 노동보다는 여가, 삶과 자기 가치의 구현 등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혼자 무언가를 이루기보다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사회가 만들어 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공동체라는 문화적 형태로, 공유의 네트워크와 모임의 형태, 동아리의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책이 그들을 불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속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이미 잠재된 움직임으로 저 수면 아래, 1990년대 후반 과장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확산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훨씬 일찍 잠재되기 시작하였고, 소셜다이닝, 공유 카, 에어비앤비 등이 공공연히 얘기될 때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내부엔 그런 DNA와 요구(욕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흐름은 분명 개인을 향해 보인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행복, 개인의 가치, 나의 가족 등 모든 가치의 흐름이 '나' 개인에 있다. 그런 만큼, 국가나 도시에 축이 있었던 2000년대 초기의 전략과 지금의 전략은 너무도 다르다. 그 때가 국민의 시기였고, '시민'이란 개념이 움트기 시작하였던 때라면, 지금은 그 개념이 더 내려가 '주민'이란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어느 순간 바로 '나'를 가리키는 적절한 용어로 바뀔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진화, 개인의 삶의 질과 이를 위한 도시환경의 전환, 재개발의 방식에서 재생의 방식으로 곧 커뮤니티를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는 것 등은 우리가 새롭게 마주해야 할 문화의 전략이자 새로운 방향점인 셈이다.

4. 부천의 지금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보내주신 발제문에서 나는 명료하지 않지만,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부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관찰자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에 문제점을 워딩하고 그 체계 하에 정책체계, 청년문제, 문화자산 재배치와 인력문제로 유형화한 점은 새롭게 문화도시에 접근함에 있어 부천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 모두가 새롭고 신선한 작업들이고 의제들이다.

그런데 나는 9쪽에 제시된 그림에서 조금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그림은 정책방향에 대한 시정부 인식, 청년문제, 문화자원 시설 인프라의 부족과 불균형으로 보았지만, 그 내부에 널려진 워딩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시민사회, 소외(취약계층), 구도심, 청소년, 예술(가)지원 등이었다. 즉, 지역사회 관찰자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제의 측면을 집중해 본 반면, 연구팀의 해석은 문화장르적인 측면으로 환원해 문화의 관점에서 시민의 문제를 해석해 본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문화의 관점에서 시민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곧, 문화 장르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틀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틀로서 문화를 보아야만 해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11쪽에서 매력적인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했지만 나는 그보다 시민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다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변했다. 2000년대만 해도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를 얘기하는 시대였다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되 창조적인 인간 즉 도시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말했다면, 2015년인 현재는 그냥 각각의 개개인의 시민,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삶과 생활의 권리를 누리게 할 문화의 아이템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둘째, 다른 한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다. 사실 거버넌스는 매우 귀찮은 존재고 모호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번 구축해 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거버넌스이며, 대중적인 합리성 차원에서도 정책의 지지기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문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문화정책은 사실 그 주요한 대상이 없는 정책 중 하나다. 모두가 국민 혹은 시민이나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국민이나 시민, 주민 등은 누구도 문화(정책)을 우선으로 놓지 않는다. 그것은 막연함의 대상이며, 동경이기도 하고, 말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책의 주요대상은 없고, 주요한 정책 파트너만 존재한다. 예술가 혹은 문화창조집단이 그 파트너다. 이들 파트너들은 분명 파트너임에도 가끔 정책대상으로 혼재되기도 한다.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때문에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회적인 행사동원은 가능하겠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아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여할 만한 시민을 찾는 게 손쉽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문제의 해법은 접근 전략에 담겨져 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 그들의 관심을 유발했느냐 하는 것! 장르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해집단의 발굴과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판에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행스럽게도 계획에는 행정과 청년, 문화인프라라는 세 층위가 균형점을 갖고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관찰자들의 워딩에서 잡힌 바와 같이 구도심이나 소외계층, 예술가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거버넌스 체계는 보다 폭넓고 깊게 형성되리라 본다.

5. 간단하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

매우 간단하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는 전체 프리젠테이션의 방식이다. 아직 그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한편, 11쪽의 문화복지기준선이란 용어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선’은 가이드라인 지표를 말한다. 과연 문화복지의 가이드라인 지표가 가능할까?

모든 시의 정책에 문화요소 도입도 마찬가지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이를 Design thinking이라고 한다. 이 말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문화요소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뭐가 문화요소인가? 문화란 그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도 있는 것인데, 과연 문화요소란 무엇이며, 문화요소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혹 우리가 문화를 교양이나 문명, 경작하디의 의미의 cultivation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정책목표의 S2-1과 S2-2는 문화과제라 볼 수 있는가? G3-1번의 ‘스케일별 문화시설 배치계획 수립 및 사업 위계화 (인력육성포함)’은 무슨 말이며, G3-2는 문화자산 관리제도는 무엇인가?

아마도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것을 워딩하는데까지는 오래 걸린다. <부천문화재단>의 욕심이 다른 시장분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이나, 그것이 시민의 삶과 생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는 워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장르를 기반으로 한 종합발전계획이든, 시민생활을 혁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계획이든 분명한 방향은 잡아야 한다. 분명한 변화를 계획하는 그림! 이제 그 실제적인 내용이 보다 깊게 제시되었음 하는 생각이다.

토론 2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 구상에 대한 제언

※ 양원모(경기도미술관 학예실장)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 그리고 발전과제 추출 ?

오늘 이 자리 이 마당은 부천 문화정책의 성과와 비판 그리고 발전과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특히 문화정책의 발전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또렷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경기도에서 문예진흥 관련 일을 해 오면서 제 스스로 저 자신은 예술계에서 문화 거버넌스에 파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내올 때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으며, 예술 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예술 창작과 교육 그리고 보급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사회를 저는 늘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내은 문화정책의 목표와 지향은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공진화(共進化)**”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술의 종(種) 다양성**”(다기한 갈래의 다양한 예술 유파의 생성과 성장)을 중시하였으며, **“예술 서식처**”(예술 창작·교육·보급 공간 밀집지와 예인촌) 마련에 관심이 많았으며, 예술 활동이 예술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호혜적 예술 시장**” 형성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목표와 지향이 있었기에 예술가들이 자족적 예술 활동을 넘어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보다 많은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공동체의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술이 갖고 있는 긍정적 힘을 가시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를 체감 또는 체득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공동체의 **미적 대리자**, **협동생산자** 그리고 **공진화 촉진자**로 울려하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생각과 지향을 하는 분들이 문화예술계 곳곳에 있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집단 지성**이 구동되며 최소한의 **공유지식**이 축적되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역동적인 힘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 거버넌스 파트너로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도 기초문화재단의 만형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도시를 정점으로 하여 문화발전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그린(Green) 전략**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생태문화도시 지향**이 그것인데 부천시 문화정책 수립에도 이 같은 지향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부천 지역 예술가들의 꿈과 바람 그리고 제언은 어떤 것이며 이들의 제언은 어떻게 반영하려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못지않게 문예진흥이 중요합니다.

부천시는 예술가들의 창발적인 아트 프로젝트와 예술 창작·발표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모지원 사업 예산 확대 방안과 부천시 문예진흥기금 적립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요?

또한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예술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 형성과 자유로운 공론장 마련 및 협력 사업 기획이 있어야합니다. 협력 사업 기획을 위한 예산 확충이 문화발전 과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토론 3

부천문화재단 지금 해야할일....

※ 권고섭(부천예총 연극협회 지부장)

“다 같이 즐거운 문화특별시 부천”민선6기 부천시의 정책비전이다.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내포한 거창함 보다 훨씬 친근하고 목표와 방향을 가늠하기 쉽다.

정책은 그래야 한다. 한 번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 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시의 정책을 풀고, 맺으며 앞서 달려온 15살 부천문화재단이 부천문화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려한다. 재단으로의 기능과 역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한다.

발제문의 내용이나 정책대안은 잘 정리되어 있어 한눈에 이해하기 좋다.

더하여, 18대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융성”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발제문에 제시된 민선6기 부천시 문화정책에 조금 보태고, 15살 부천문화재단의 비전을 일정한 논거 없이 툭 던지는 질문형식을 빌어 가늠해 보고자한다.

1. 18대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융성”¹⁾

2013년 7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전국 9대 권역), 지역 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며, 문화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안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문화가 있는 삶' 정책에 제시된 정책방안은 수많은 문화현장의 목소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국민 밀착형.생활 문화형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문체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문화가 있는 삶'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의 키워드 아래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문화융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8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중 지역과 연계하여 몇 가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③ 문화 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단위 민간 자율 활동기구 형성 등 지역문화커뮤니티 활동의 체계화 ▲문화 분야 퇴직자로 구성된 지역단위 문화 봉사단을 구성,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가을 문화 축제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1) 부천타임 인용(2013년 10월 26일)

◆ 고궁·박물관·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전국 문화시설 작은 콘서트 개최 및 야간 개방 확대, 공연 및 영화 특별할인 등 생활 속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국민과 함께 즐기는 '가을 문화축제' 개최

◆ 서울아트마켓·서울공연예술제를 중심으로 국공립 예술기관 참여, 10월 문화의 달과 연계하여 가을 공연·전시 통합홍보, 재외문화원 연계 해외 유명 기획자 초청·지원

④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역문화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⑤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을 위해 ▲기초 예술 창작 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 등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 민간단체 자부담(비율 10%)을 개인창작지원금의 경우 제외, 예술지원금 연령 제한을 질적 기준으로 단계적 개선, 정산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계법인 활용 등 이 그것이다.

2. 부천시의 문화정책(발제 문을 중 몇 가지 제언)

1) 문화 분야 조례

문화예술, 산업, 도서관 등 분야별 조례설치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일부조례의 통·폐합이나 제·개정을 위한 LF팀의 구성이 필요함.

(정책실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조례가 오히려 제약이 되는 경우…….)

2) 부천시 시기별 주요 정책 및 사업

시기와 주요사업의 변화양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실행기구인 문화원, 예총, 문화재단의 기능 등)

3) 목표/전략구성

정책목표(G) 및 전략(S)수립에 의욕적인(안)에 그칠 우려가 다분하다.

주요문제설정(P)에서 지역의 전문가 그룹과 생활예술인 그룹의 영역구분과 역할,

내용과 기능을 현실적으로 분류해야만 대상에 따른 역할과 목표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3. 부천문화재단의 역할?

그동안 재단은 부천문화예술의 메카를 지향하며 공연, 전시, 교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운영, 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예술가와 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계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부천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앞장서 모색해 오고 있음은 분명 고마운 일이다.

하여, 향후 15년을 그려보며 재단(FOUNDATION)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해 본다. 이것이 문화도시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한 틀이 되길 바라며.....

- 1) 지역문화정책수립에 주도적인가? 제안자인가? 단순실행기구인가?
- 2) 민간기구와 시 집행부 사이의 트라이앵글은 공고한가?
- 3) 15년간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해온 프로그램이 있는가?
- 4)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이 효율적인가? 예산은 안정적이고 적정한가?
- 5) 문화예술의 허브와 메카로 자부하는가? 인정하는가?
- 6) 조직 구성원은 예술가인가? 스폰서인가?
- 7)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인적 네트워크의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

토론 4

‘문화정책 문제와 대안구상’을 중심으로

※ 손영철(나눔소리 대표)

이윤이 팀장은 기관별 예산규모와 부천시 주요 문화사업(5대문화사업)을 예산 대비 효율성을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지역사회 관찰자 면접조사를 통해 문화 분야 문제 진단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 부천시 문화 분야 기관단체 지원현황

○ 총 예산 : 228억 8천5백

<표>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예산(시비) 현황

기관	예산	기관	예산
문화재단	61억 9천	박물관	13억 9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6억 5천	시립예술단	73억 3천
부천문화원	6억 7천	예총	7천6백
경기콘텐츠진흥원	11억	부천어머니합창단	3천5백
부천시민미디어센터	4억 1천	부천비보이	3천

2. 지역사회 관찰자 면접조사를 통해 문화 분야 문제 진단

□ 문화정책 방향 시정부 인식문제

○ 문화에 대한 협소한 인식, 각 정책들 간의 연관성 부족, 관주도의 의사결정, 문화시설의 합리적 이용 측면보다 규모를 중시,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인식적 한계

□ 청년세대 지역 활동 한계

○ 젊은 세대 활동가의 생산구조가 단절, 기존세대가 문화경제 생태계를 장기간 독점, 젊은 세대가 향후 개대할 수 있는 비전의 부재,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

간 무보수 활동을 요구

□ 문화자원시설 인프라 부족 불균형

- 지역 간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의 불균등, 예산집행의 불균형, 문화예술인을 성장하기위한 교육기관, 시민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

3. 지역문화 진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문화특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이며 문화정책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 정치하는 분들이 말하곤 하죠.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토론을 하다보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많고 적음이 행사의 가부 또는 성패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보통 지역예술단체가 시보조금(약 200만원 내외)을 사용하는 행사에서 결과보고에 항상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 기획은 잘 되었는가?
 - 행사 내용(예산 집행)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예산 집행에서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가?
 - 행사에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 행사의 완성도가 높았는가?
 - 홍보는 잘 되었는가?

등등의 내용들이 평가의 항목입니다.

- 각 기관별 예산의 규모와 편성은 문화정책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천시 문화기관 전체 예산에서 약 32%(73억 3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 시립예술단도 지역예술단체처럼 평가를 받는다면 위 평가 항목에 무엇이 더 추가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타 도시의 시립예술단과 견주어 경쟁력이 있는가?
 - 대외적(국내외)으로 부천을 알리는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 경제적 수입이 발생하는가?
 - 세계적 수준의 필과 견줄 수 있는가?
 등등이 평가되어야만 할 것 입니다.

4. 부천문화재단의 역할

- 참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문화정책토론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많은 일들을 해왔겠지요. 문화재단은 10년 동안 무슨 일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언젠가 제가 부천문화재단, 부천문화원, 부천예총 3기관이 만나서 부천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얘기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각 기관의 책임성 있는 분들의 대답은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대답이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 기관끼리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거죠. 문화재단에 아쉬워요.
-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천시의 문화정책을 감독, 조율하고 평가를 통해 궁극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문화재단은 부천시의 산하기관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문화재단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 수렴창구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5. 맺는 말

- 부천시는 문화 분야 기관단체와 지역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 최근 생활문화에 대한 부천시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진흥조례, 생활문화헌장 제정, 생활문화페스티벌 등을 통해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 부천이 삶의 터전이고 지역문화진흥의 주체인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화관련 예산에 비추어 봐도 지원되는 정도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진흥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 부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한 외부전문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지역예술인은 역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부천시는 문화 분야 기관단체의 전문성에 기초한 의견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관찰자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 진단을 꼭 살펴야 합니다.
 - 문화정책 방향 시정부 인식문제
 - 청년세대 지역 활동 한계
 - 문화자원시설 인프라 부족 불균형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제한된 문화예산을 형평에 맞게 잘 배치해야 합니다.
 - 문화정책 추진 성과와 비판은 그간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발전과제는 평가의 객관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은 항상 미래만 있지 자기반성에 매우 관대합니다.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 부천시는 ‘세계지향 문화도시’에서 ‘시민이 시장’인 문화특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문화진흥을 위해 어떤 시각으로 문화정책을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6. 참고자료

- 2005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천시는 2005년에 ‘비전부천 2010’ - 장기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지향의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은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5대문화사업의 전략화와 문화예술기반 구축, 영상예술의 중심지로의 도약 등 3개 주요정책과 20개의 전략과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 5대문화사업의 전략화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활동영역 확대
 - 2006년 일본 가와사키지 초청연주, 2008년 유럽순회연주회를 통해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중점 육성
 - 200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21세기 음악도시의 상징시설인 음악홀로 건립. 국제적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음악도시 부천의 위상을 정립.
- Pidan의 세계적 전문영화제화
 - 세계적 수준의 영화제로 도약시키기 위해 멀티플렉스 상영관 확보, 영사기든 상영 장비 현대화, 영화

전문 인력 양성으로 관객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과 인적 인프라를 구축

- 차별적이고 내실 있는 영화제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유럽판타지연합회(EFF)와 연대한 국가 간 영상 문화 교류 사업을 확대.

○ PILAF 운영의 강화

-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운영을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 대학, 기업, 매니아 등으로 참여폭을 넓히고 3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정착시켜 만화예술 창작의 요람으로 국제성을 지닌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시너지 체계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운영

-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정보 전문기관으로 만화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한국만화박물관,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전문 도서관, 만화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비즈니스 기능을 위한 부천국제코믹북페어전 국내외 만화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DB구축을 통하여 정보제공 사업인 만화규장각사업, 기타 만화교육 사업 만화기획전시, 출판 및 창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육성.
- 영상문화단지 내에 (가칭)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 만화관련 시설을 집적화 하여 만화의 기획 제작 전시 판매 등 생산과 유통, 소비가 연계되는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 복사골예술제 운영조직의 전문화

- 21주년을 맞이하는 복사골예술제를 민간 기획전문가의 참여와 운영조직을 전문화하여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대표적 예술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추진방법을 모색.
- 복사골예술제를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간 민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예술 활동의 영역을 넓혀 질 높은 예술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문화예술 기반 구축

○ 전문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 85만 시민이 자랑으로 삼을 전문음악 홀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2009년까지 건립.
- 시민회관의 노후화된 대·소 공연장의 조명, 무대, 음향, 객석 및 냉난방시설 등을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종합예술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서커스단 상설공연장을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하여 한국기예의 전통을 잇고 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와 연계한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

Part II

지역문화일꾼

- ❖ 발제자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 토론자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신정호(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대리)

발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축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1.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둘러싼 사회변화

□ 사회적 가치이자 원리로서 ‘지역화’ 확산

- 지역화 흐름의 사회적 확장, 사회구조 변화 : “국가의 부분으로서의 지역”에서 “삶의 원리로서 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역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변화 : “지역 내 문화예술계”에서 “지역자치와 생활문화”로 위상과 역할 변화
-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로서의 지역화 경향성과 박근혜정부의 “국가주의+중앙집권주의” 사이의 충돌과 간극 : 중앙 정부 정책의 비현실성, 비전문성 등 심화

□ 문화 영역의 ‘일’을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

- 문화 관련 일의 질적, 양적 팽창 : “예술 장르 중심의 제한적 활동 구조”에서 “문화 전반에 걸쳐 기능별 서비스 산업 구조”로 인력 환경 자체가 재구조화
-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문화 복지, 문화콘텐츠, 대중문화,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청년문화 등 문화전문인력 구조가 다각화, 다층 화됨
- 문화전문인력 환경 자체가 교육구조를 비롯하여 노동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됨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및 실행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
- <지역문화진흥법>이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지역문화 협력체계의 필요성 속에서 새로운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의 필요성 부상

□ 지역분권 정책의 본격화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책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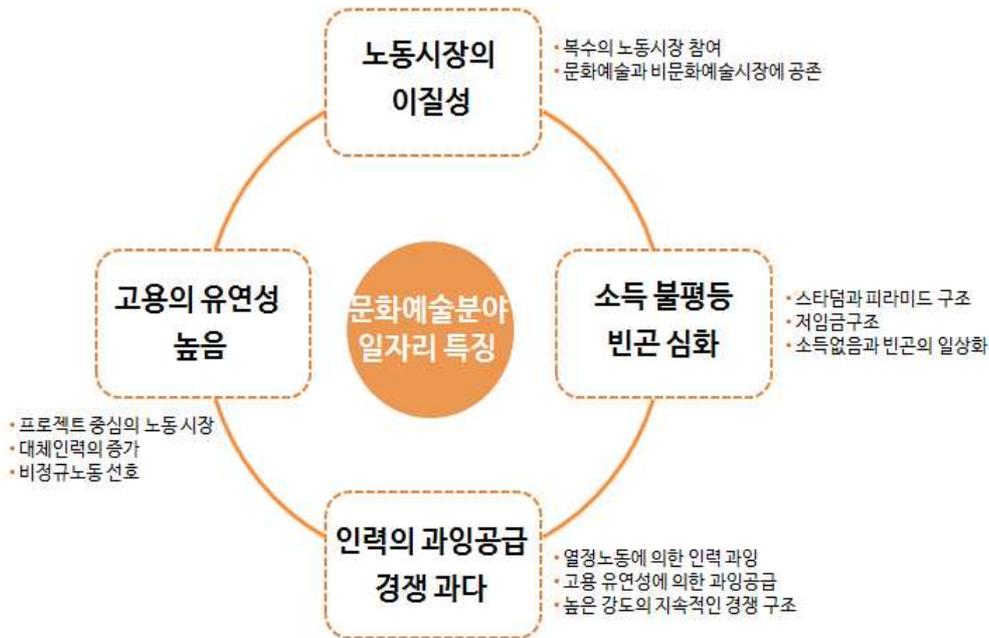
-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본격화되고, 지역문화 특성화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문 인력

정책 역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됨

- 박근혜정부의 “지역분권 없는 지방이전”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의 딜레마 심화

□ 문화를 매개로 하는 노동 문제의 부상 혹은 심화

- 문화예술 분야 노동 형태의 특이성이 그림자 노동, 불안정성 노동, 저임금 노동 등으로 악순환 되는 문제가 구조화됨
- 예술가, 예술 강사,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화인력 등을 비롯하여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노동구조의 후진성에 대한 문제의식 높아짐
-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 영역 일자리 전반에 걸쳐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을 구조화
- 문화를 매개로 하는 노동 문제의 해결과 동반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정책의 필요성 대두
- 문화전문인력과 관련하여 공공영역과 시장의 선순환 구조 부재



[그림]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의 특징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현재성

- 지역문화전문인력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관련하여 전문성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연구자, 문화매개자, 문화예술교육자, 문화해설사, 문화마케터, 문화행정가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지역문화인력을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법률에 규정된 “기획·개발·평가 등”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해당 인력의 활동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 실무운영·경영·교육·분석·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분야별로는 순수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문화예술을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 가능” (김홍규, 2014)
- 지역문화전문인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지역문화전문인력 관계 주요 법률 현황

소관 부처	법률명	주요 관련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활용), 제48조의6(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 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자 인증, 해설사 선발 등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문화인력의 양성 기반 조성 및 교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장(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학예사 구분 및 자격시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관한 시책 추진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시책 강구 및 양성기관 지정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및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촌마을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전문인력의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마을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마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시행 참여

- ※ 출처 : 김홍규·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는 5년마다 수립 시행평가해야 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 영역의 사회적 확장에 따라 공공부문의 새로운 문화인력 양성 사업도 증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마을해설사, 바다해설사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역할, 관련 양성사업의 문제와 한계, 효율적인 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 관계자(지역문화재단)와 지역문화 현장전문가 대상의 집단 면접조사”를 수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김홍규, 2014)

<표> 지역문화 관계자 집단면접 조사 결과

구분	도출 의견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 및 역할	• 지역에 대한 공간적·행정적 이해만으로는 지역문화의 개념적 모호성 극복 어려움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 및 고유기능(전문성) 확보 필요
	• 전문인력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필요
	• 단순히 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매개인력 양성 필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주체	• 광역 단위 인력 양성 필요
	• 인력 간 교류시스템 개발 필요
	• 기존 재단은 양성과정만 인정하고, 양성 이후 해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
	• 정부와 기업의 연계를 통한 실무 이해 증진 필요
	• 대학원의 차원에서라도 역시 기업 또는 민간과의 연계성을 띄는 교육체계가 필요
지역문화전문인력 수급	• 대도시와 소도시 간 전문인력 수급에 차이 존재
	•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수급 요건에 격차 존재
	• 기존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양성과정만 있는 것이 문제
	• 양성과정과 같은 인프라 구축 시, 네트워크 연결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율이 향상될 것
	•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지역문화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자격증, 수료증 마련과 같은 증빙 제도 마련 필요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출에 대한 자생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 필요

※ 출처 : 김홍규·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문화인력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전문성과 통합성 부재

- 최근 문화예술교육사 문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인력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
- 문화인력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나 정책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공급 형 인력 제도가 남발되면서 현장의 혼란 가중

□ “일”보다 일“자리” 중심의 인력 정책에 따른 부작용 심화

- “일-경제적 생존-사회적 돌봄-좋은 삶”이라는 가치 체계가 실종된 채, 오직 숫자로서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강조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함
- 문화예술분야의 특이성이 행정적 성과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과 연결되면서 “나쁜 일자리”(불안정노동, 저임금노동 등)의 구조화가 진행됨
- 문화복지사의 사례처럼 사회와 지역에 필요한 인력 정책이 아니라 무리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 반복

□ 교육 구조와 분리된 문화인력 정책

- 대학 교육을 비롯하여 교육제도와 분리된 채 별도의 문화인력 정책 진행 : 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 인증의 악순환
- 문화인력 당사자들과 지역사회보다는 대학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제도 반복
- 지역 내에서 통합되거나 연계되지 못한 채 피편화된 수많은 교육 사업들 확산 : 수용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구조
- 대학을 비롯하여 지역 내 교육 기관들과 분리된 문화인력 교육 구조
- 손쉬운 인력 정책으로서 행정편의주의에 기반 한 “인증제도”의 남용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특이성에 기반 한 교육 환경 부족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사회적 정체성 자체에 대한 합의 부재
- 지역문화전문인력 형성의 경우 기존의 전문가주의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특수성 존재 : 기존의 학문적인 (academic) 전문가주의로는 확보될 수 없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의 딜레마

- 현장 중심의, 생활친화적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교육자, 프로그램, 시설 등) 부족
-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형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 반복
 - 지역문화전문인력 정책조차 지역 생태계보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사업 중심의 공급형 사업이 대부분
 - 지역문화재단 역시 대부분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사업을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 전달체계 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수준
 - 지역 생태계의 현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구조 부재
- 지역문화전문인력 형성에 투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및 사업 구조
 - 지역 주체와 생태계의 형성보다는 단위 사업화된 각종 전문가 양성 사업
 - 개인, 커뮤니티, 지역 등의 층위별로 지속적인 교육과 양성이 불가능한 사업 구조들

4.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둘러싼 상상 또는 대안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과제 (김홍규, 2014)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치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효율적 배출 : 지역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인력의 양성, 경력 관리, 인증, 활용 등의 체계화 / 산·학·민간 간의 협치를 통한 연계체계 확립으로 효율성 제고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개선 : 법률이 규정한 기획·개발·평가와 함께 그 외 업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도모 / '지역성'이 부여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으로 지역문화의 특수성 고양과 현장연계성 증대
 - 지역문화전문인력 경력 및 전문성 인증제도 도입 : 지역문화전문인력이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지역문화전문인력 경력인증제 또는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활동이 지닌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지역문화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 : 기존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전달체계에서 전면적으로 탈피해야 함

- 생활 현장 중심의 교육 : “준비하는 인력”(취업지원)이 아니라 “활동하는 인력”(활동지원)으로 접근
 -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지역운영의 실질화 : 지역 생태계, 협력형 정책 및 사업 구조(거버넌스) 등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 양성
 - 정보 과잉의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급형 교육이 아니라 활동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 지역문화 활동, 지원 사업 등과 인력 양성 사업의 연계성, 통합성 확보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교육 제도 연계, 대학 연계” 실질화 : 지역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지역문화전문인력 생태계 조성 전략 필요
- 지역 내 교육기관(대학, 학교, 각종 인력 양성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지역 내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 환경 조성 : 공간, 프로그램, 사업, 교류 등
 -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에 대한 통합성 확보 : 평생학습에서부터 전문가 양성이카데미에 이르기까지 연계성 필요
- 지역 내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활성화 : 지역 내 문화인력 교육을 위한 거버넌 스스로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협력적 생태계 필요
 - 지역문화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대학-민간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의 경우 직접적인 교육 사업 중심이 아니라 이러한 생태계 구축 및 네트워킹을 중심적인 기능으로 설정해야 함
-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노동구조 개혁 : “일-경제적 생존-사회적돌봄-좋은 삶”이라는 지역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지향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구조 개혁 과정과 인력 양성 정책이 함께 가야 유의미함
 - 지역 내 생활임금제도의 적극적인 반영 등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둘러싼 저임금 구조 탈피
 - 인력 형성 과정에서부터 “일-경제적 생존-사회적 돌봄-좋은 삶”이라는 지역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중앙-광역-기초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 필요 : 기초에서 활동하고, 광역에서 교류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구조 형성
 - 기초문화재단 : 현장기반 활동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세스 설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지역 내 문화전문인력 커뮤니티 구축 외
 - 광역문화재단 : 협력형 거버넌스 기관으로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주체(전문가, 단체, 기관) 네트워킹 및 재교육 외
 - 중앙정부 : 문화전문인력 통합 정책(마스터플랜) 수립, 융합적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부처 간 협력 구조 마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 재정 마련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연구 및 국제 교류 외

[참고문헌]

- 김규원,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김홍규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2012.
- 이원재, <생활예술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민 생활예술 창작, '생존으로서의 행복'을 말하다』, 성남문화재단, 2014.

토론 1

지향가치, 공공의 역할, 방법론 측면에서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이원재 소장의 분석과 주장에 대해 대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지향 가치>,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개입하는 <공공의 역할>, 그리고 광역과 기초 정책주체들 사이에서 분담하여 시행할 <방법론>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본 원고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토론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1. 지향 가치 측면에서 논쟁점

- 지역문화전문인력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인력 문제의 현황 진단은 적절히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한 처방, 특히 공공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기대 부분은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것일 수밖에 없음.
- 정치가가 내리는 정책적 진단은 본인의 정치적 영토 확보²⁾를 지향하는 정책적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주로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구분됨
- 사회활동가가 내리는 진단은 사회구조 변동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기 쉽고, 그것은 사회복지나 분배 구조에 관한 문제에 가까움.
- 문화예술인력들이 위와 같은 진단과 처방에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삶 또는 노동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텐데, 이는 갈수록 각박해지는 삶의 조건에서 문화예술 또한 그 안에서 충분한 삶의 조건을 확보하려고 각축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세태를 대체할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임
- 즉 문화 분야 일자리 정책의 프레임은 인자본주의 시대에서 <문화적으로 일하며 살아가기>로 설정할 것인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노동자의 권리 찾기>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문화예술가들의 몫임.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노동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정부 정책주체도 민간 전문가 분석주체도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2)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영토 확보가 관건이라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영토는 결국 해당분야 인력들이 모여 있는 영역이 될 것임

2. 공공의 역할 측면의 논쟁점

-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에서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일 수 있음.** 공공의 역할은 그 대척점에 있는 시장의 역할과 그 사이의 예술생태계 또는 민간영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공공의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행정 언어로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생태계 자체인 문화예술인력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 당장 발제자의 논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주로 기획, 개발, 평가 등 문화기획자 중에서도 특히 공공행정 영역의 전문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창작 및 실행 인력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언급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은 문화부 차원에서 최초로 1997년에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한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김용범 외)에서 제시된 “문화/예술행정가” 정의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음.
- 해당 연구에서 김용범 등은 문화예술전문인력을 문화/예술행정가와 예술경영자로 구분하고, 다시 문화/예술행정가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세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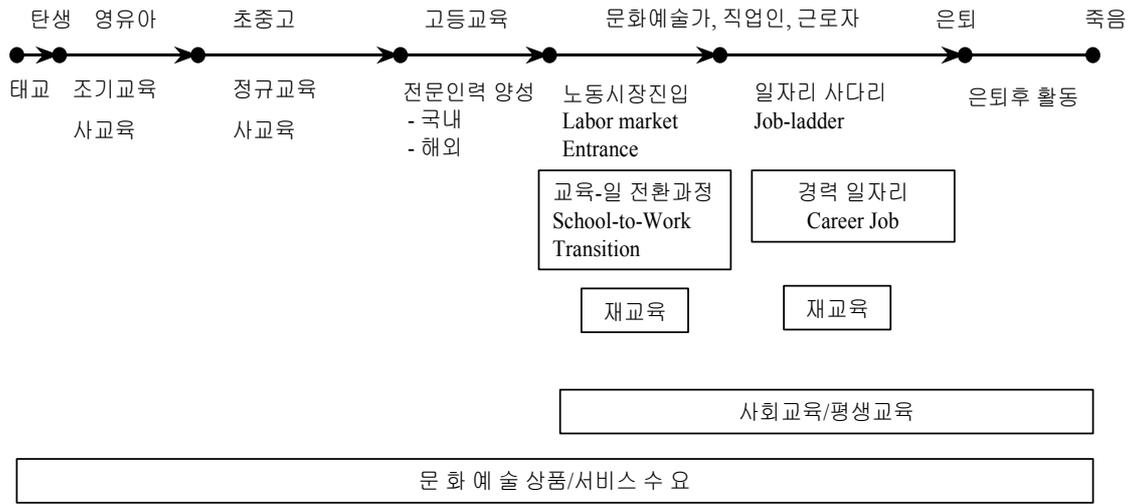
<문화/예술행정가>의 3가지 구분
<p>(1)중앙정부 (고위)관리 : 문화정책과 예산 및 관련단체의 행정을 기획 조정하는 책임 있는 관리로서 정책결정이 궁극적으로 내려지면 이를 실행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p> <p>(2)지역문화행정가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역차원에서 수행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다양한 공사단체와의 조정업무를 책임진 행정가</p> <p>(3)기관행정가 : 국공립, 비영리 문화기관 및 단체(박물관, 극단, 도서관, 오케스트라, 음악당, 문화센터 등)의 운영에 참가하는 행정가. 이들은 기관의 운영, 예산, 감독, 사무 관리의 중요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급 행정가와 그 밖의 행정요원으로 구별된다.</p>

- 이후 2005년에 시행된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황준욱 외)에서는 문화예술 인력기반 구축 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문화부문 내 비문화 직종까지 포함하여, 예술가-기획자-기술지원자-경영/관리자-교육자-행정가-단순지원직까지 포함하여, 넓은 범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표>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인력 정의와 대상

구분	대상 직종	규정
가장 협소	예술(창작/재현)+기획	핵심인력
중간	예술(창작/재현)+기획+기술+경영/관리+교육 +행정/정책	전문인력
가장 확대	예술(창작/재현)+기획+기술+경영/관리+교육 +행정/정책+기타(평론, 연구 등)+단순지원	전문인력+단순지원

- 반면, 2012년에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된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 방안”에서는 사서, 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교육사 등 자격제도로 정의되는 문화전문인력이나, 문화예술기획 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을 모두 지역문화인력으로 포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역문화정책 보다는 각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예술, 문화예술교육 정책 차원에서의 인력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 다루는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인력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즉,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민간부문에서 활동하는 예술창작자,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예술경영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책적으로 접근할 경우, 문화부 내에서 분할되어 소관 하는 부서들의 입장에 따라 분절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문제를 보임**
- 특히 “전문”이라는 말이 마치 공공정책이 개입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만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오도되거나, 실제로 성과지향의 일자리 창출형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전문성을 부여하는 오류가 행해지고 있음
- 이런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생태계의 건전한 성장 측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공공의 역할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음.** 물론 이를 잘 절충하는 것이 정책의 역량일 것임.
- 특히, <예비 인력풀 교육->전문가 양성->일자리 제공>의 사이클에서 **대학교와 현장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지나친 일반화, 막연한 연계 만능주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NCS 확대,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대변되는, 대학교의 준비된 산업역군 양성소로서 역할 설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막연한 연계 만능주의 속에서 사라지고 있음.**
- 문화예술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경로로 진입하기 전의 예비인력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실전 업무 수행능력이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자기 비전을 스스로 설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므로, **차라리 에너지 넘치는 백지 상태가 오히려 더 나은 것임**
- **공공부문은 학교의 교육을 현장에 맞추도록 추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산업 부문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배출되는 직업예비군들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함.**



[그림] 생애주기와 문화예술 전문 인력으로 직업경로>3)

- 특정 분야의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후 인력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재교육이 중요함. 공공부문에서 무료 또는 염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의 열악한 조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제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육자체가 고용기회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격증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실제 역량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의 폐단들의 출발이 바로 공공이 직접 고용 실적을 산출하여 보여주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임.

3. 방법론 측면의 논쟁점

- 광역/기초 정책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은 위에서 언급한 가치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임.
- 발제자가 주장하는 <기초에서 활동하고, 광역에서 교류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구조는 실제 인력의 활동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상황임
- 하지만, 공공 정책의 화법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돈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임.
- **공무원이 쓰는 돈은 바로 성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이든 광역이든 쉽게 카운트할 수 있게4) <중앙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집행한 돈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성과의 직접 연관성을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활동**

3) 황준욱 외, 상계서, p.126

4) 가장 쉬운 방법이 머리수를 세는 법

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인지, 이들이 광역이든 기초이든 생태계를 이루며 <교류하는지>에 대해서는, 일 자리 정책 차원에서는 관심이 가지기 어려움.

- 결국, 문화예술전문인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고되는 성과만 챙기려는 자>에게서 돈을 뺏아서, <실제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쥐어 주어야 함.
- 이와 같이 예산 차원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을 재설정해보면, <기초에서 집행하고>, <광역에서 영역과 분배의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을 할당>하는 것임.
- 그런데, 현재는 <중앙에서 할당>하고, 주로 <기초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기초 자치단체 문화정책 주체와 역할 분담이라는 것 자체가 미미함.
- 이와 같이, 정책을 예산의 할당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불필요하지만, 여론을 통한 어젠다 설정과 사례 보여주기를 통한 영역의 확보, 예산분배를 위한 논리의 개발을 정책 활동이라고 본다면, 광역문화재단들의 정책적 역할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중앙-광역-기초 정부 단계별로 각각의 정책적 역할과 성과를 분리, 존중하여 챙긴다면 서로 Win-Win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최근 일자리 정책이 민생 현안화 되면서,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들이 하나의 정책프레임으로 해당 영역의 다양한 정책의 어젠다를 포괄하고, 공공 재원의 영역별 분배 논리도 무시하고, 시혜적 정책으로서 실제 삶의 현장을 바꾸어 놓겠다는, <聖王주의 정책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를 반복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전문인력이라는 정책영역 안에도, 문화예술생태계 다양성 유지 문제, 우수한 문화예술콘텐츠 생산 문제, 공정한 문화예술 노동문제, 사회적 약자로서 문화예술인의 복지문제, 전문 인력으로서 일자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여 있음.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정책영역의 문제들을 <연계하여 진행하되> <분리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공공정책 역량이 필요함

토론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수급=고도화 인가?

※ 신정호(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대리)

지난 10년간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었고, 대학 내 관련 전공인력의 배출이 활발해지는 등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양적 확대와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가 활동이 활발해졌고,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무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문화재단 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중앙-광역 중심에서 전달되고 관리되는 사업과 예산으로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하는 것이 현장 밀착형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인력수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듯 하여 이원재 소장님의 글에 공감에 많이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현장에서 문화전문인력의 이야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 현장에서 밀착형 사업 요구되고 있고, 사업 영역(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세분화, 생활문화 진흥 등)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 인력으로는 역 부족한 상황이 인력 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초문화재단 종사자 입장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디까지를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봐야 할까요? 둘째, 질적 문제를 떠나, 노동시장에서 문화 분야 인력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셋째, 문화재단 등 문화기관 종사자들은 지역문화전문인력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첫째, 어디까지를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봐야 할까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모호한 면이 있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예술창작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4수준의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직무상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는 듯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2005)은 문화예술 분야 인력을 핵심인력, 전문인력, 단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하였고, 경영(관리)·행정 및 정책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표> 문화예술분야 핵심인력과 전문인력 개념

구분	대상 직종	규정
가장 협소	예술(창작/재현) + 기획	핵심인력
중간	예술(창작/재현) + 기획 + 기술 + 경영/관리 + 교육 + 행정/정책	전문인력
가장 확대	예술(창작/재현) + 기획 + 기술 + 경영/관리 + 교육 + 행정/정책 + 기타(평론, 연구 등) + 단순지원	전문인력 + 단순지원

※ 자료원: 황준욱 외,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5, 137쪽.

둘째, 질적 문제를 떠나 노동시장에서 문화 분야 인력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지역문화전문 인력이 희소인력(인력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 사양 업종의 희소인력 개념(예시)

기준	분야	개요
사회적 기능	침구사, 황칠, 대목장, 유기장, 국궁, 사기장, 옹기장, 한지창, 나전장, 염색장	사회적 기능면에서의 가치와 활용도가 높으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수지원자가 부족한 분야
문화예술적 가치	초서, 인장, 정가, 나전장, 각자장, 화각장, 단청장, 악기장, 족렴장, 체상장, 낙죽장, 참빗장, 갓일, 민화장, 사직대제	사회적 기능이 미비하여 인지도가 낮으나, 문화 예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필요성이 높은 분야

※ 자료원: 문용린 외, 「희소인적자원의 실태와 소멸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8쪽.

질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교육시장에서 관련 전문인력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경영 및 문화콘텐츠 관련하여 96개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강한 편입니다.

<표> 대학 내 예술경영 유관 학위 현황(2015년)

(단위 : 개)

구분		학위			전체
		학사	석사	박사	
위치	수도권	28	34	6	68
	비수도권	14	12	2	28
전체		42	46	8	96

<표> 대학 내 예술경영 유관 전공 현황(2015년)

(단위 : 개)

구분		전공			전체
		예술경영	문화콘텐츠	박물관학등	
위치	수도권	39	26	3	68
	비수도권	14	14	0	28
전체		53	40	3	96

셋째, 문화재단 등 문화기관 종사자들은 지역문화전문인력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역문화재단 (광역+기초)에 2,87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앙차원에서는 인력 재교육 정책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보다 개별적 접근하고 있어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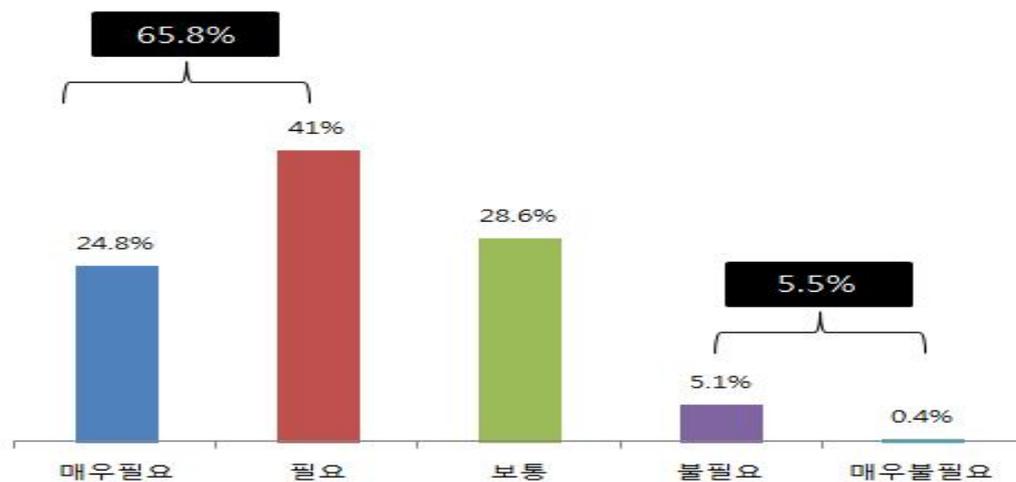
<표> 문화재단 종사자 현황(2014년)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기타(계약직등)	합계
광역	452 (58.3%)	323 (41.7%)	775 (100.0%)
기초	1,481 (70.4%)	622 (29.6%)	2,103 (100.0%)
합계	1,933	945	2,878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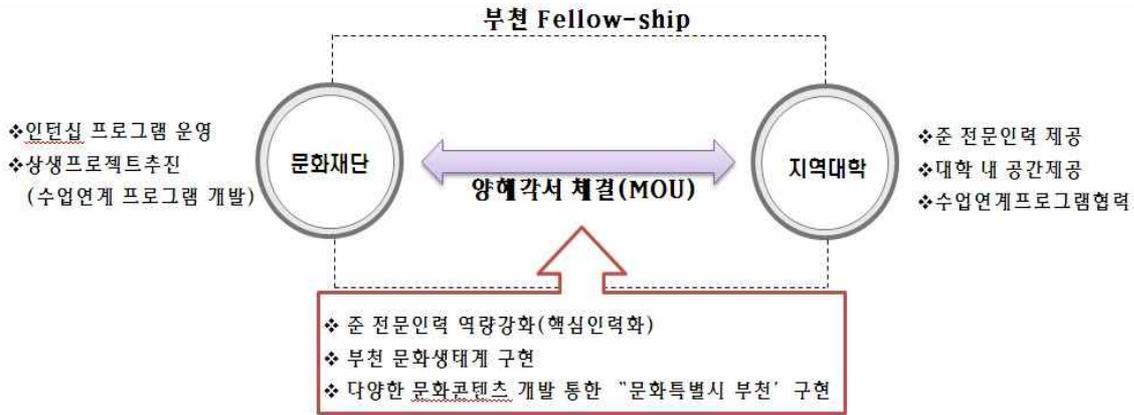
2014년 전국 기초문화재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는 결과에 따르면 기초 문화재단 종사자의 65.8%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업영역 확장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재교육 문제가 도출된 듯합니다.



[그림] 문화재단 종사자 재교육 필요성(2014년)

※ 자료원 : 춘천시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연구”, 2014. 102~103쪽 재구성.

그렇다면 광역과 기초 어떠한 내용을 갖고 만나야 할까요? 이원재 소장님의 발제 문에서 ‘교육 구조와 분리된 문화인력 정책 현실화’ 문제,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문화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관은 이를 현장에 투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듯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가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상시적 프로그램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차원에서 배출한 예비전문인력을 광역차원에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림] 부천문화재단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구조도

문화기관 종사자와 타 영역 여가문화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再教育 문제를 광역·기초가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 문화전공자 비중이 1.9%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아마도 타 지자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 부천시 사회복지 영역 문화전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정규직	105	106	108
문화전공자	3	3	2

기초문화재단에서는 그동안 문화매개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발제자 원고에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전문 인력과 그들이 만들어 낸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 합니다. 기초재단에서 양성한 전문인력이 만든 프로그램을 학교 등에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인력과 프로그램이 인증되었는지가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출되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도 현장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앙은 배출인력 및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광역은 정

보의 직접화와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면 양성 후 해당인력에 대한 활용과 양성과정만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요사례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Part III

문화예산 안정화

- ❖ 발제자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 ❖ 토론자
 - 김명희(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장)
 -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차장)
 - 이형복(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차장)

발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 조정운(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1. 들어가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체제를 위해서는 ‘행정과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1997년 국내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999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다. 그 후 2000년대를 거치며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며, 특히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으로 현재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후원금·협찬금의 모집을 위한 재정적인 유연성, 전문직원 채용에 의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 입장에서 재단 설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행정의 논리에 의하지 않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재단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에 대한 기대였다. 즉, 지역문화재단은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arm's length)을 전제로 설립되게 된다.

2. 팔길이 원칙(arm's length)에 대한 회의론(懷疑論)

지역문화재단 20년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 재단의 실제 운영은 과연 독립적,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가? 팔길이 원칙은 아직도 유효 한가?에 대한 회의론(懷疑論)이 일선 현장에서 번지고 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한·일 예술경영&문화정책 학술대회”에서 팔길이 원칙에 대한 믿음과 재단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이 여실히 깨지는 논문이 하나 인용되었다.

영국 아트 카운슬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온 팔길이 원칙(arm's length)의 신화를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오오시타 요시유키(太下義之, 2015)의 “아트 카운슬에 있어 팔길이 원칙에 관한 고찰[アートカウンシルにおける「アームズ・レングスの原則」に関する考察]”에서는 기관의 독자성을 존중, 그 기관이 스스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율성이 실제로는 세 가지 ‘정책 진화의 딜레마’에 의해 결과적으로 팔길이 원칙이 저해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정책(아트 카운슬) ‘예산이 증가’될 때, 정부에 의한 인사 개입 혹은 조직적 개입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둘째, 1964년 예술장관 임명, 그리고 1992년의 문화 유산부(DNH)설립과 1997년 현재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의 개편 등 ‘문화정책 체제의 확립’시에 정부의 권한이 증대한 점이다. 셋째, ‘문화정책의 통합 정책화’가 시도된 것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가 증가하면서 그 세력 경쟁의 소용돌이에 문화정책이 놓이고 말았으며, 결과적으로 팔길이 원칙이 저해된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또한, 아츠 카운슬의 창설자인 케인즈는 처음부터 ‘팔길이(arm’s length)’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케인즈가 주창한 것은 ‘반(半)자치적 조직’과 같은 조직이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⁵⁾

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이 증가될 때, 지자체 문화정책 체제의 확립 시, 또는 지자체 문화정책의 통합 정책화가 진행 될 때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도 역시 경험하고 있다.

행정과 갈등 혹은 과도한 개입이 있을 때 그동안 재단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으로 대응하는데, 재단의 자율성을 지켜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팔길이 원칙에 대한 환상은 이제 점점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문화재단 Catch-22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 아니 팔길이 원칙을 논한다는 자체가 최근 더욱 무의미해지는 것은 지역문화재단이 처한 ‘사업’과 ‘운영’에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 즉 모순된 규칙에 꼭 묶인 상태인 catch-22⁶⁾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재단은 역할 및 사업에 있어 모범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설립되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에 의하면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문화 사업의 문제점으로 자율적·지속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행정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주도의 사업추진, 하향식 정책 추진, 단기적 성과 지향, 하향식 예산지원을 행정(문화체육관광부)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견 자율성을 전제로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에 위협이 되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이 많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리·감독을 위한 강행규정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적 사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운영은 동법률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동법의 제25조 지도·감독, 제26조 검사·보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는 지역문화재단의 통제와 관리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⁷⁾

행정과 거리를 둔 전문적, 자율적 운영이 필요했기에 재단이 설립된 것임을 행정(문화체육관광부)은 인

5) ‘반자치적 조직 (semi-autonomousbodies)’이란, 케인즈에 따르면 ‘일상 업무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거의 자치 조직으로 활동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통해 표현되는 민주주의 주권에 따르는’ 조직이다.

6) 조셉 헬러라는 소설가가 쓴 반전 소설의 제목인데, 소설에서 catch-22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을 말한다. 그런데 이 수칙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이룰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착안하여 catch-22는 ‘진퇴양난, 모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정에 대한 비판이 녹아져 있다.

7)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무원 파견, 업무감사 등의 통제를 받아 왔으나, 동법은 지자체장의 지도·감독을 명문화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하면서도, 자율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을 대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행정(안전행정부)인 것이다. 일선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지역문화재단에 “공무원 행정과 다른 행정절차 간소화, 유연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행정은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준수를 법률과 각종 지침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화재단 Catch-22인 것이다.

4.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의사결정의 거버먼트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2015년 1월 기준)에 의하면 13개 시도 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 총액은 3,069.2억 원(2014년 총 2,829억 원 대비 약 240억 원 증액), 기관 당 평균 236.1억 원(전년 218억 원 대비 약 18억 증액)이다. 이 중 자체 충당 비율은 평균은 16% 수준으로 2014년도 19.6% 대비 3.6%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13개 시도문화재단의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출연(15.4%) 또는 위탁(32.7%)되거나, 국비지원금(35.9%)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자체 출연금이 위탁으로 전환되었고⁸⁾,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오시타의 지적대로 “예산이 증가”할 때 팔길이 원칙이 저해 된다는 점이 최근 시도 문화재단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전체 평균 출연금은 15.4%에 불과하다.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재정 출처인 지자체 출연금,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비의 3가지로 크게 분석해보면, 국비 사업이 가장 많은 평균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가의 지역문화재단 예산 부담률이 지자체와 비슷하며, 최근 설립된 재단을 중심으로 재정이 국비 사업에 종속되는 경우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정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반 한 재단 운영 보다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 되고 있다.

13개 모든 시도 문화재단이 지자체 출연금 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위탁사업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위탁사업비 위주의 재단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와 재단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 의사결정의 상의하달형 관계가 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 보다 위탁사업비 교부를 통해 더욱 재단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용이해 진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들은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한 지역문화재단의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위탁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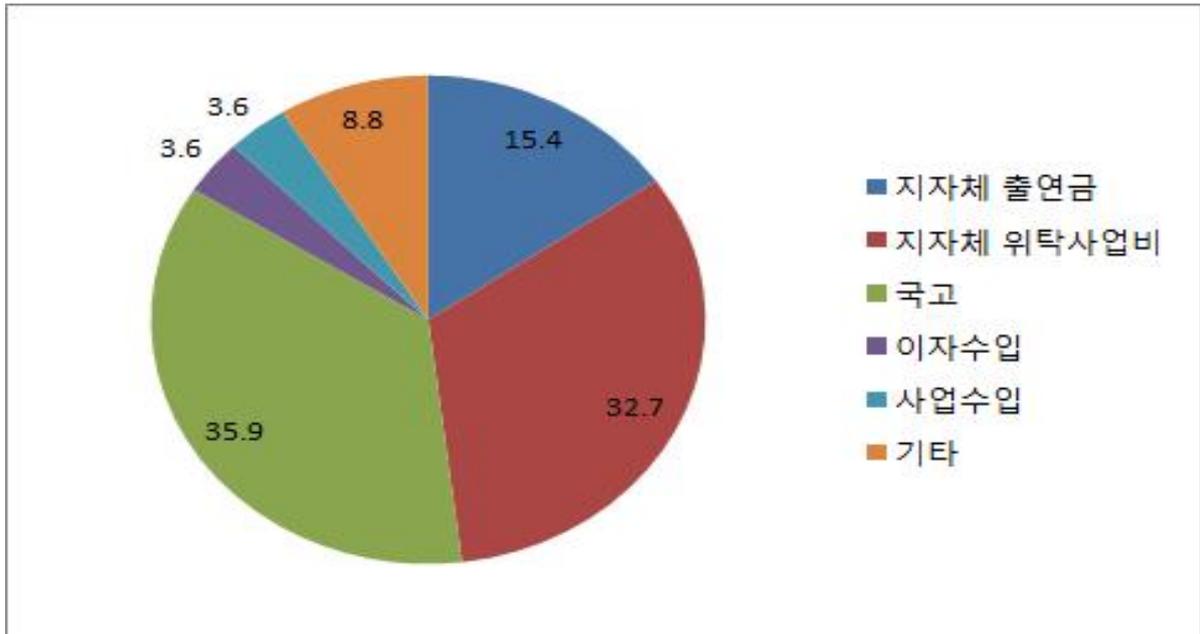
정책(policy)은 누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결국 누가 재정(Who's

8) 최근 경기도의회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자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별 예산을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지원해왔던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 도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꾸었다. 인건비나 사무보조비 등 기존의 운영비의 경우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각 산하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목을 명기하고 외부 지원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용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급,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 경기일보 2015.01.06자 기사 참조

got the money?)을 부담 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산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사업, 재정, 조직 면에서 행정주도가 강한 경향으로 재단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財物이 모인 단체인 재단(財團)이 사실상 財物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며, 재물을 채워주는 공간의 열쇠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관점으로 인해 결국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도 문화재단은 결국 재단법인 OO문화사업단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시도 문화재단 예산현황(2015년 1월 기준,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 참조)

재단	2015년 예산 현황									
	의존수입						자체수입			'15년 총액 (①~⑥ 합계) 비고
	①지자체 출연금				②지자체 위탁 사업비	③국고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 이자 수입	⑤ 사업 수입	⑥ 기타	
	기본 재산	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	-	12	-	12	34	46	5	30	15	
경기	-	-	151	151	175	180	32	66	25	629
경남	-	7	12	19	40	102	3	-	6	170
광주	5	-	28	33	82	68	2	2	0	187
대구	-	-	5.5	5.5	106.6	42.8	5.1	-	8.7	168.7
대전	-	25	16	41	49	37	2	-	12	141
부산	20	-	17	37	185	36	7	0.1	10.9	276
서울	-	104	-	104	162	207	27	6	153	659
인천	-	8	-	8	63	64	14	1	6	156
전남	-	-	23	23	32	93	0.5	5	10	163.5
제주	-	-	4	4	28	37	7	-	20	96
충남	-	-	16	16	30	96	-	-	3	145
충북	12	-	5.7	17.7	17	93.3	7.3	-	0.7	136
합계	37	156	278.2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평균	-	-	-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	-	-	15.4	32.7	35.9	3.6	3.6	8.8	100.0



[그림] 시도 문화재단 예산 유형별 비율

5. 제도개선을 통한 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1) 행정과 재단의 협력적 수평관계를 위한 신사업협정을 체결하자

지역문화재단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의 관계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과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미스매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은 규범적, 공평성, 대중성, 실적, 관례주의, 일상성인데 반해, 문화예술은 개성, 자유, 비타협, 비대중성, 다면적평가, 비일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행정과 재단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협동적 관계라는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다.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동적 관계라는 파트너십의 첫 번째 단계로 사업 위탁에 대한 명확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진흥의 사업 운영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위탁관계는 기존의 거버먼트형으로 행정의 일방적인 상의하달형 구조였다. 지역문화재단의 행정과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위탁계약관계는 거버넌스형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지자체가 본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청부형식의 쌍무계약을 베이스로 해야 한다. 본래는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할 업무를 집행의 편의성과 효율성, 기술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비를 주어 경영을 맡기는 것이므로, 그 업무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즉 이익을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쌍무성>있는 위탁계약이 아니면 안 된다.⁹⁾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사업 운영을 전문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에 지원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과 통치구조의 거버넌스형 전환은 수위탁관계를 협력적수평관계, 평면형관계, 네트워크형, 대등협동형 관계로 정착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이 단순한 산하기관으로 사업의 위탁 운영관리 역할 중심이 아닌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적 사업주체(Institute)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 지원 사업, 문화정책수립, 문화예술 연구·조사 등에 관한 명확한 업무 및 역할분담에 대한 수평적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며, 재단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업무 및 역할분담을 위한 협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제도 개혁¹⁰⁾과 지정관리자제도¹¹⁾ 도입으로 인해 행정과 재단의 이러한 명확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와 재정의 관점에서 지자체와 재단의 합의는 필수 불가결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을 경영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 조직의 자립, 운영수법의 자립(독립한 매니지먼트 체계의 정비), 의사결정권의 위양 등의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재단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재단 자체의 노력이 전제가 되나,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재단 자신만의 자조노력으로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출자 지자체와의 컨센서스와 지도력이 개혁에 불가결하다.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예술진흥재단은 협력적 수평관계를 위해 상호간 신사협정(?)을 통해 재단의 사업, 재정, 인사, 운영 등에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은 여섯 개의 조항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세 부사항이 바뀌는데 아래의 표와 같다.

9) 에이 기세이·모토스키 쇼조, 『살아숨쉬는 극장』, p.255

10) 민간 비영리부문을 사회경제 시스템 안에 적극적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공익목적사업(학술, 기예, 자선 그 외 공익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공익재단법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다수의 지역문화재단은 2009년 이래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적위치를 전환하게 된다.

11)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공단체의 출자법인 등 일부 단체의 제한으로 부터 소위 "제3섹터"가 아닌 순수 민간주식회사도 관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① 공평성 ② 효율성 ③ 경제성 ④ 안정성을 목적으로 문야분야에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예술진흥재단의 협약사항

협약사항(2008~2010)	협약사항(2011~2013)
1.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총 72건의 사업 실시한다.	2. 재단운영 시설의 이용자수를 250만 명으로 한다.
3. 「어린이의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의 참가자수를 15만 명으로 한다.	4. 지역의 시민참여 협동사업을 확대하여, 참가자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한다.
5. 재단 홈페이지의 총 액세스 건수를 1100만 건으로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시민 의견 등의 접수 건수를 600건으로 한다.	6. 어린이 대상 사업의 참가자 수를 늘려, 12만 1천명 이상으로 한다.
7. 예술문화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를 4.0(5점 만점)으로 한다.	8. 예술문화관련 국제교류사업을 확대지, 25개 사업 이상으로 한다.
9.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피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0%이상으로 한다.	10.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피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7% 이상으로 한다.
11.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능력·역할·직무·직책에 상응한 인사·급여 제도를 고친다.	12. 직원의 의욕, 능력, 실적의 적절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재단과 지자체간의 협약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는 재단의 사업, 재정, 인사에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을 철저히 보장한다. 3년 후 협약사항의 평가는 재단에서 먼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재단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행정평가를 한다. 재단 자체평가와 지자체의 행정평가는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행정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약 준수사항을 검토한다.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새로운 협약사항을 재단과 지자체는 합의에 의해 다시 결정하는 Plan-Do-Check-Action의 정책 사이클이 작동한다. 국내 지역문화재단에 요코하마시와 재단의 협약관계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법의 좋은 취지는 최대한 활용 하자

지자체는 재단에 “행정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라는 말에 재단 직원들은 “문화예술도 모르는 주제에”라고 마음속으로만(?) 받아친다. 재단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과연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 교육을 받고 있는가? 동일한 룰에 의한 플레이는 예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재단 직원들, 특히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 회계, 계약 등 행정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는 임직원의 교육훈련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실시

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연구(2014)에 의하면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해야 할 요소에 대해 외부교육 참여기회, 직원연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교육에 대한 재단 직원들의 열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 문화재단의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에 드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은 보존 받고 있으나,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 불안정(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업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아 이를 재단의 경상경비에 포함시킨다면 사업 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있어 일정부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법 시행령 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1.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사항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인정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로부터 위탁의 형태가 아닌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²⁾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제고 및 역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자

지역문화재단이 재단설립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이다. 재단의 독립성과 적정운영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독립채산, 즉 자립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예산 삭감, 재정의 건전성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 및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 문화재단은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높아 재단과 행정간 예산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최근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지자체는 재단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 문화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매년 지자체와 재단은 예산 수립 및 확정을 위해 지자체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삭감, 반대로 재단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1조에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로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절차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행정의 요구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문화재단의 일반적 인 관례이며, 재단에 꼭 필요한 운영, 관리, 사업의 예산이 삭감,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적정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방침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은 행정과의 합의를 통한 총액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 중 재단운영의 적정 예산을 퍼센티지(%)로 산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배부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자체 위탁사업 역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확정하여, 전체 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로부터 총액예산으로 출연 받은 지역문화재단은 재단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결국 전체적으로 재단 전체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사업운영의 자율성에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총액예산제도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본질적인 취지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및 예산운용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단의 적정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재단의 전체 출연금 비율로 산정하여 총액예산제도로 지원하며, 그 부족분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자원조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 총액예산제도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경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재정운영에 있어 재단 스스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총액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의 예산을 출연하고, 나머지 예산은 재단이 자주적으로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 할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은 다양한 보조금 유치, 수익사업 및 후원 기금의 다각화,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 자원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며, 정부부처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수혜를 확대시킨다. 적극적이고 전문화된 마케팅과 캠페인을 통해 후원회 및 회원 관리를 조직화·전문화·활성화 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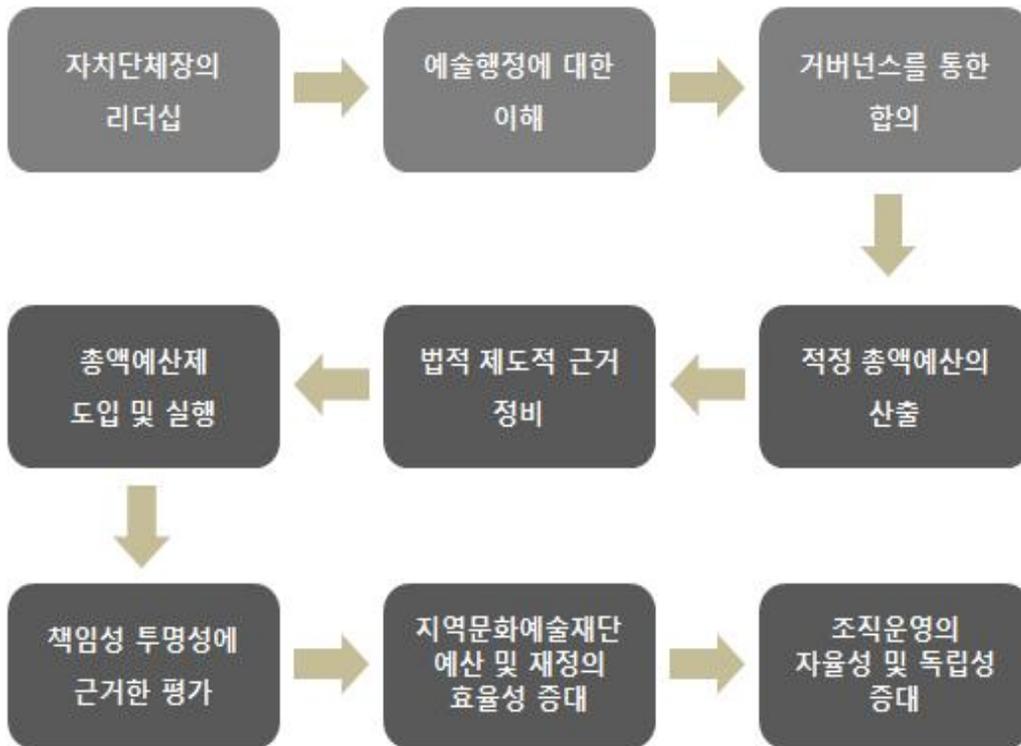
(2)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전제

지역문화재단이 총액예산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절차 및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정책적 결단이 요구 된다. 지자체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장이 아닌 문화예술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총액예산제도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문화예술과)의 문화행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행정, 의회, 시민, 재단 등 문화재단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가 요구된다. 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총액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적 합의에는 재단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액예산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사업 역시 중장기 사업에 근거하여 적정 총액예산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3) 법적·제도적 정비와 책임성·투명성에 근거한 평가

정치적, 행정적 환경변화에 민감한 지역문화재단이 총액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이를 반드시 명기하여 법적인 근거를 정비하여, 총액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총액예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문화재단은 책임성 및 투명성에 근거한 운영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이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예산 및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총액예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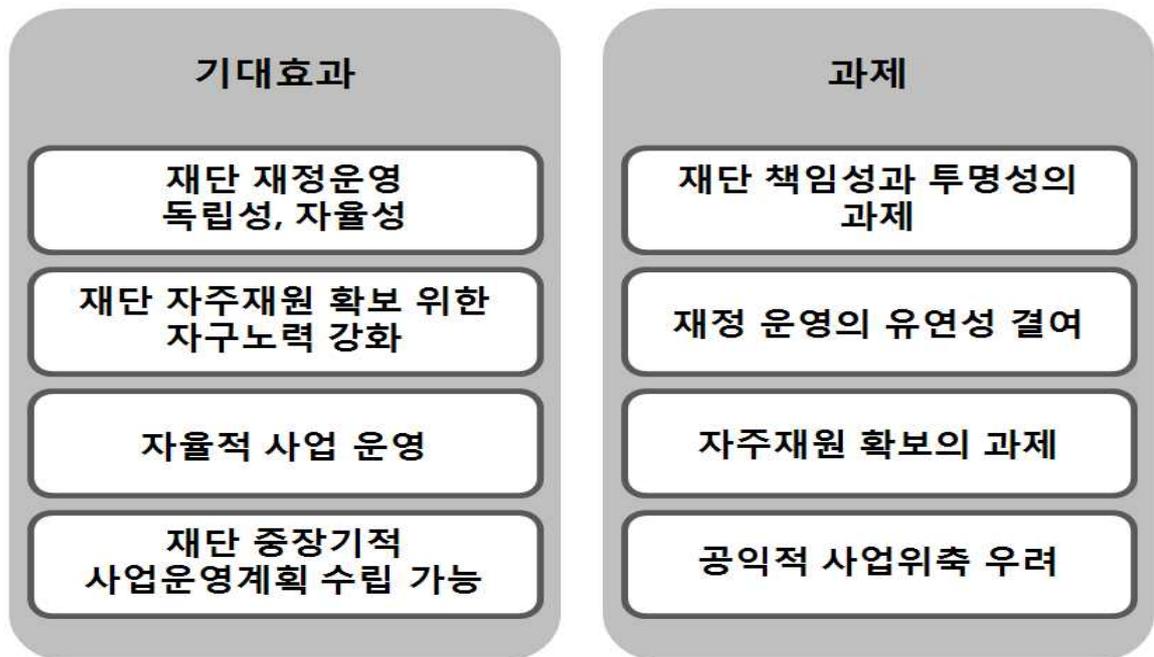
(4) 총액예산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총액예산제도가 지역문화재단에 도입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제로는 먼저 문화재단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문화재단의 재정 및 예산운용의 자율성·독립성의 전제는 책임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총액예산제도는 재정 및 예산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코 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법적근거를 가진 문화재단은 총액예산제도를 통해 더욱 강도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 및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총액예산제도는 긴급 위기 상황에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매년 일정하게 확정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총액예산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명확한 계약조건이 총액예산제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에 있어 자주재원의 확보는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재원의 소스의 발굴에서부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연구, 조사, 인력, 시간,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만약 자주재원 확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 자체의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결국은 변화하는 정책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여 고유사업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지역문화재단이 이러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사업 중 대중적인 문화 사업에 치우쳐, 결국에는 공익적인 문화예술사업을 재단 자신이 위축시키는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즉, 총액예산제도의 도입은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논쟁을 새롭게 야기할 수 있다.



[그림] 총액예산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과제

시 일반회계예산의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총액예산제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은 아직 국내에는 없으나, 현재 일본의 성공적인 지역문화재단으로 평가받는 미토시예술진흥재단은 미토시로부터 미토시 일반회계의 1%를 지원 받아 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 미토문화예술진흥재단 문화예산 1% 시스템

-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미토시(水戸市)는 미토예술관이 지역의 문화예술창조활동을 위한 핵심센터가 되도록 한다는 정책에 입각하여 동 예술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토시예술진흥재단에 매년 시 예산의 1%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일명 ‘미토방식’이라 불리는, 이 지원방식은 [운영비에 건축비의 최소 10% 정도를 매년 투입하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토시는 예산지원을 하나, 운영에는 참견하지 않는다”라는 Arm's length을 원칙으로 한다.
-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시민, 재단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 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지역 사회와의 논의 과정 속에서 재단 운영의 최소 필요경비(시 전체예산의 1%)를 산정, 그 경비를 보조금의 형태로 매년 지원하는 방식을 결정함. 2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의 1% 정도를 총액예산제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6. 맺으며

지역문화재단 자율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각 개별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전문성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였다. 행정의 권위만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이제는 지역문화재단 간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산재한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차원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No more words - It's time for action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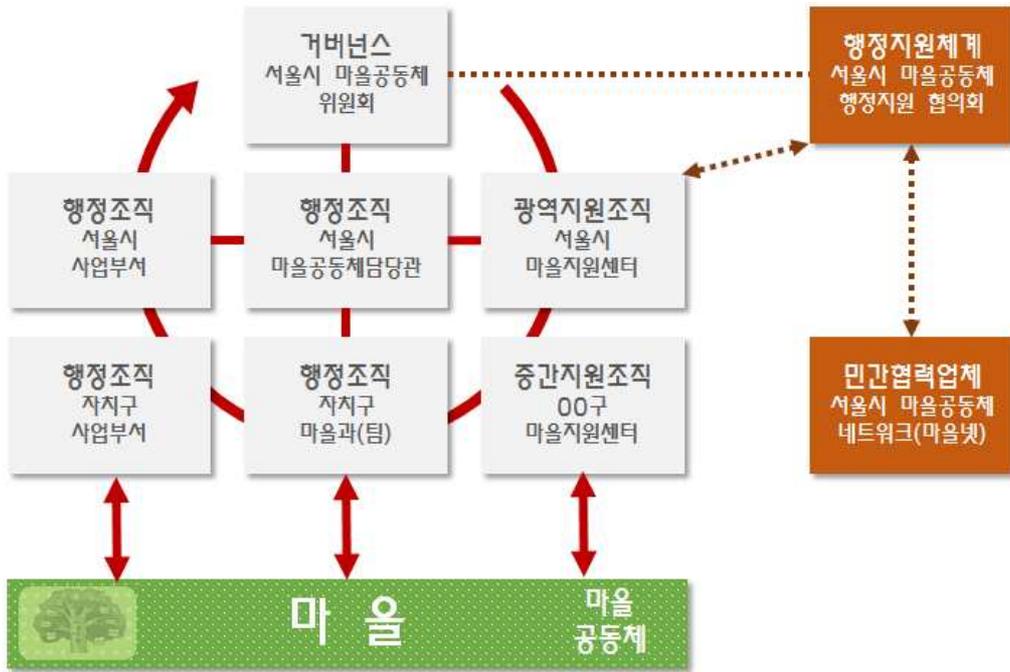
- 에이 기세아모토스키 쇼조(2007).『살아숨쉬는 극장』, 김의경·명진숙 역, 서울:연극과 인간,
- 조정운(2009)『예술경영연구 제15집, 일본의 공립문화시설의 환경변화와 운영제안 - 재단법인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사)한국예술경영학회
- (재)마포문화재단(2011) 『마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 전략 보고서』
- 조정운(2011)『일본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2012)『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 서울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고유 역할과 운영 방향성에 관한 연구 -』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 부산문화재단(2015) 『한일 예술경영 문화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중 “예술의 자유와 문화정책”(이토 야스오), “문화예술정책 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의 과제(김세훈)』
- 문화체육관광부(2015)『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2015)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일반현황』

- 太下義之(2015)『アーツカウンシルにおける「アームズ・レングスの原則」に関する考察』
- 요코하마시예술진흥재단(横浜市芸術文化振興財団) <http://p.yafjp.org/jp>
- 미토예술관(水戸芸術館) <http://arttowemito.or.jp/>

토론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지원예산 융합

※ 김명희(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기획팀장)

1.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체계



2. 주민공모사업 체계

마을 성장 단계	마을의 상황 및 욕구	관련 마을사업
교육	교육을 통한 가치와 인식의 공동체 형성	-찾아가는 마을 강좌 -지자체 마을교육 -이웃 만들기
주민모임형성 (씨앗기)	마을의 씨앗인 주민모임 형성 마을의 필요와 욕구 파악	-우리마을프로젝트 -부모커뮤니티
실행사업 (새싹기)	마을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욕구 충족	-분야별 지원 사업 (공동육아, 마을미디어, 에너지자립, 아파트마을공동체등)
공간사업 (성장기)	마을살이의 본격화, 상설화 거점공간을 통한 마을살이 확산	-공간지원사업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마을지원사업 등)
마을단위사업	연계망 형성 및 마을계획 수립, 실행	-연계망 형성 사업 -마을계획 사업

3. 2005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2015	2014	증감	비고
1	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71,000	546,000	△175,000	사무관리비 41,000
2	공동육아 (출산육아담당관)	606,770	542,690	64,080	사무관리비 9,650 민간경상보조 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7,120
3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0,000	6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4	상가마을공동체 (소상공인지원과)	0	311,630	△311,630	0
5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3,100,400	4,305,100	△ 1,204,700	사무관리비 60,000 민간위탁금 1,043,4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97,000
6	에너지자립마을 (환경정책과)	485,000	380,000	105,000	사무관리비 27,000 공공운영비 3,000 행사운영비 15,000 시설비 35,000 민간경상보조 405,000
7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653,400	694,850	△41,450	사무관리비 75,600 행사운영비 9,000 민간경상보조 51,8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7,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8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715,000	615,000	100,000	민간경상보조 715,000
9	안전마을 (도시안전과)	120,000	150,000	△30,000	사무관리비 20,000
10	아파트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845,700	1,355,000	△509,300	사무관리비 76,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9,000
11	우리마을 활동(공간) 지원 (마을공동체담당관)	3,522,000	4,048,000	△526,000	활동지원 690,000 공간지원 1,082,000 마을생태계지원 1,750,000 ※주민제안사업(2014년)
12	우리마을프로젝트 (종합지원센터)	0	299,000	△299,000	
※	마을학교 (마을공동체담당관)	1,000,000		1,000,000	※ 평생학습과 1,000,000
계		11,479,270	13,307,270	△ 1,828,000	

4. 토론쟁점

- 시민지향 행정은 협치 실현의 제도와 예산집행의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함.

(1) '시민 중심성'에 대한 행정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보장

저는 센터 일을 하기 전까지 민간단체-NPO-에서 활동했었고 센터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빠른 속도감'과 '성과에 대한 독촉'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공무원조직은 단기적 성과가 예측되지 않는 분야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길어도 3년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분명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통적인 공무원조직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조직의 제도와 조직문화가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공무원들은 시민참여 정책 사업을 대단히 피곤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수혜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함께 일하는 민간기관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갑을관계(상하관계)로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인식합니다. "시민이 계획하고 행정은 지원한다." 는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 의제는 융합 적인데 지원은 분절적 -칸막이 행정의 개선

마을공동체는 분야와 영역이 융합된 시민의 삶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복지 담당부서와 협력해야하고, 수도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수도 담당부서와 협력해야하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담당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력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때문이니깐요!

그도 그럴 것이 2012년 이전까지 서울시 행정시스템은 시민을 행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모든 제도와 규정은 투입대비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분업화된 행정부서의 독자적 완결성에 기반 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시민지향행정이 예산집행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무원조직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융합적 협력이 행정 안에서 선결되어야 합니다.

(3) 자치와 분권의 보장

서울시는 25개 자치구,423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광역단위 지원으로는 인구 4만의 행정동 한 개의

마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각 자치구의 권한과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설계권,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의 보장이 자치구에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선6기 서울시 행정혁신의 원칙을 시민과의 '협치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정책수립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이고, 예산은 시민이 수립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구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광역에 집중되어있던 지원시스템이 현장밀착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입니다. 단,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2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역할

※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차장)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은 일단 갖추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재단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이자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현실은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의 관례적인 개입과 갈등, 예산편성권과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정해지 는 사업을 무난하게 수행해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지역문화재단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과 운영의 상대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재원 확보 구조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초기에 설립된 광역재단의 재정구조가 기금의 적립 과 그에 따른 이자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으 로 인해 기금적립 방식 재정구조의 지속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과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초문화재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재원 확보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역문화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문화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문화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 정부의 책무는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 중앙 정부와의 매칭 사업조차 반 기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문화진흥법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이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그저 화려한 수사로만 남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필요조건인 ‘지역문화 진흥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재분류하고 이를 위탁사업 방식이 아닌 지속 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역에 이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절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장 제21조에 따른 복권기금 등은 기금의 재원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과는 무관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 회,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에서 일괄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금의 일부를 지역 계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지역별 1개소를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⑤항에 의거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나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행위가 법정기부금단체로 풀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표> 기부금 관련 기부자의 세제혜택 내용(기부자의 기준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의 종류	법인 기부자 (손금산입한도)	개인 기부자 (필요경비산입한도)
법정기부금	50%	100%
지정기부금	10%	30%

<표> 문화예술분야의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

법정기부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기부금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등록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재부 장관이 정한 단체

- 발제자가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의 확대가 지역문화재단이 일체의 외부 구속이나 제약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대적인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는 거버넌스에 대한 상호이해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문화재단은 존재의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문화공공성의 확대로 파악해야 한다. 문화공공성은 모든 시민이 계층, 지역, 성별, 학력, 신체조건, 소속 집단,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차이와 무관하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문화권(文化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문화재단이 문화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더디지만 지역문화재단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일 것이다.

□ 관련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토론 3

기초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지역문화발전기금)

※ 이형복(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차장)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토론문

발표자

수원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이형복



수원문화재단 조직 구성(2국6부1단18팀)



수원문화재단 운영시설

◆ 문화시설



수원문화재단 운영시설

◆ 전통시설



수원문화재단 세출예산 추이



*예산은 추경 포함, 민간위탁금 및 잉여금 제외
*연도별 결산보고서 참조



수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

- **문예진흥기금 설치 근거**
 -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999.5월 제정)

- **문예진흥기금 현황**
 - 설치연도 : 1999년
 - 적립기간 : 2000년 ~ 2010년(연평균 5억원 적립)
 - 조성액 : 53억6천만원
원금 : 5억원, 이자 3.6천만원(2015.9월 현재)



수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이자 수익금 발생 추이

- 2013.1.1 기금액 53억6.1천만원 → 이자 1억5천만원 (2.8%)
- 2014.1.1 기금액 53억5.7천만원 → 이자 1억4.5천만원 (2.8%)
- 2015.1.1 기금액 53억6천만원 → 이자 1억4.5천만원 (2.7%)

* 예탁금의 이율은 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율을 기금별 출연 지분율에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

• 재단 설립 이전 문예진흥기금 운용

- 수원지역 예술단체 연례행사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

• 기금의 용도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 지방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기금의 존속기간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처

• 기금의 사용처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율적인 창작프로젝트 지원
- 문화재단 공모 및 지원, 정산 업무

• 기금의 사용처

- 2012년: 공연 12건, 시각7건, 기타 1건 (총20건, 143백만원)
- 2013년: 공연 10건, 시각 13건, 문학 11건 (총34건, 1억5천)
- 2014년: 공연 10건, 시각 13건, 문학 11건 (총34건, 1억5천)
- 2015년: 공연 13건, 시각 9건, 문학 8건 (총30건, 145백만원)



감사합니다.



Part IV

생활 예술의 사회적 가치

- ❖ 발제자: 박승현(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 ❖ 토론자
 - 정종은(메티기획컨설팅 부소장)
 -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발제

예술의 사회적 가치('삶의 예술'을 위하여)

※ 박승현(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1.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질문

기존에는 예술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기존의 예술의 가치란, 예술은 '지고지순한 절대적 미를 구현'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다. 그래서 '고급'스럽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예술은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소수만이 예술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일진데, 예술의 창조 역시 '예술가'라고 불리는 천재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감과 천재성을 중요시하고 작품 자체에서 정제된 아름다움의 기쁨을 주는 '순수예술'은 일상생활에서의 용도나 역할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했다. 아니, 오히려 멀면 멀수록 좋다. 일상과는 전혀 연관지을 수 없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다. 이제 '순수'를 붙이지 않더라도 '예술'은 모두 고상한 것이 되어야만 했다. 실용적이고 오락적인 일상의 즐거움과는 다르게, 고상하고 관조적인 즐거움은 '미적(aesthetic)'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관객들에게는 관조적인 태도가 요구되었다. 예술은 '신성화' 되었다.

인류는 그 역사 속에서 진정한 지배세력은 '문화적 우월성'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자본'이라고 일컬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지배세력은 가치 있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의 구분('구별 짓기 Distinction')을 통해 사회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공고화한다. 어떤 문화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배화(사회일반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순이다.

18세기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는 '순수예술'에게 고매한 진실을 드러내거나 영혼을 치유하는 초월적 영적 역할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술은 상징적, 정신적, 심미적 능력을 말해주는 과시물이다. 그래서 고급예술과 저급(대중)예술이라는 구분도 나온다. 고급문화는 정교하고, 지적이며,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규정되는 반면, 대중문화는 사소하고, 지적으로 열등하고, 일시적 만족만을 주며, 퇴행적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된다. 이러한 구분은 곧 그것을 주로 향유하는 집단과 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인간의 보편적 능력과 지위의 차이로 전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200년 동안 이 새롭게 만들어진 '예술'의 개념과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68혁명'은 현 시대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68혁명'이 문제제기 한 것은 '근대'라는 사회체계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짧은 시기의 독특한 형태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예술'이라는 표현은 18세기에 탄생한 개념이다. '예술'의 어원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를 로마인들이 아르스(ars)로, 유럽인들은 이를 아트(art)로 옮기는 데서 왔다. 아르스와 테크네는 시짓기, 음식하기, 통치술을 비롯한 무언가를 만들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

또는 기예를 뜻 한다. 즉, 인류는 훨씬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예술체계를 이천년 넘게 지속해 왔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념어가 변용되어 옮겨지는 과정에서 삶의 기예였던 예술이 어떻게 삶과 멀어져 갔는가를 주목해 볼 일이다.

2. 삶과 분리된 예술

테크네/아르스는 목공예와 시, 구두 만들기와 의술 그리고 조각과 말 조련술만큼이나 다양한 일들을 포함했다. 오늘날 ‘공예(craft)’라 부르는 많은 것들이 테크네에 속한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가(artist)’와 ‘장인(artisan)’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였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예술가’와 ‘장인’은 대립하게 된다. 이제 ‘예술가’는 순수예술 작품의 창조자인 반면 ‘장인’은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단순 제작자이다. 예술 대 공예의 대립은 예술 대 사회 또는 예술 대 생활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대립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목적과 즐거움으로부터 순수예술의 독립성을 제한한다. 순수예술의 새로운 체계는 행위와 제도에만 묶여 있는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권력과 성별에도 연관된다. ‘바느질 예술(needle arts)’¹³⁾은 무수한 예 중의 하나다. 몇몇 장르를 순수예술의 정신적인 지위로 끌어 올려 제작자를 영웅적인 창조자로 만들고, 나머지 장르들은 오로지 실용성으로 평가하고 생산자를 가공업자로 끌어 내리는 일은 개념적인 변화 그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 이 대립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적 개념과 상당히 닮은 예술의 분류 방식은 그리스와 로마문화 후반기에 들어와 예술을 교양 예술과 범속(혹은 ‘종속적인’) 예술로 구분하며 나타냈다.¹⁴⁾ 교양예술? ‘교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소하고 궁금해진다. 영어로는 ‘culture’, 독일어로는 ‘bildung’. 교양의 단어나 쓰임새는 시대마다 달라왔는데, 교양 이념의 원천은 그리스 로마의 ‘파이데이아(paideia 교양)’와 ‘후마니타스(humanitas 전인적 교양)’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양은 마음과 몸, 삶 전체의 조화로운 구현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는 시민적 덕목이다.

중세시대에는 근대 세계에 들어와 공예로 좌천된 여러 예술들이 회화나 조각만큼 귀하게 여겨졌다. 5세

13) 자수로 대표되는 이 분야는 성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세에는 예술가와 장인의 범주를 차별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술 작품의 생산에 있어 뚜렷한 성 역할의 구분도 없었고, 남녀 모두 바느질 예술 부문에 종사했다. 교역이나 예술을 남성이나 여성이 독점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가지 이유는 상당수의 제작이 종교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훌륭하게 채색된 필사본이나 정교한 자수, 그리고 종교적 시와 음악적 가락들이 여성과 남성이 모인 수도원에서 나왔다. 중세 여성들은 전문적인 구두 제조업자, 제빵업자, 무기 제조업자, 금세공인, 화가, 자수가로 활동했으며 길드에도 가입돼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특정 공예 부문을 지배하기도 했다(파리의 실크제조). 오늘날 여성들의 바느질 작품이 주요 미술관에 전시되기 위해 ‘살림 예술(domestic art)’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은 순수예술 체계의 성에 대한 오랜 편견을 극복한 여성 운동의 압력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순수예술 체계에서 제외된 소수 민족들의 장르와 작품들이 문학, 미술, 음악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다문화 주의 운동 역시 정당하다. (래리 쉬너, 김정란 역, 2007. 「예술의 탄생」, 들녘, p16-74)

14)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은 단지 상류층의 교육이나 여흥의 일부분으로 존재할 때만 교양 예술로 인정되었다. 연회에서 돈을 받고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행위는 범속 예술로 간주되었다. 즉, 범속예술에는 육체적 노고로 이루어지거나 돈을 받고 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교양 혹은 자유예술은 지적이며 귀한 신분이나 교육받은 자들에게 적합했다. 자유예술은 엄격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법, 수사학, 변증법 같은 언어예술과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같은 수학적 예술이 그 핵심을 이루었다.(래리 쉬너, 2007. p42)

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13세기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예술 목록에는 회화, 조각, 건축과 함께 요리, 항해술, 말 조련술, 구두 제조, 공 던지는 묘기 등이 혼합되어 있었다. 성(聖) 빅토르 수도원의 후고(Hugh)는 7개의 교양 예술이 있으니 7개의 기계적 예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고는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기계적 예술(직조, 군비, 교역, 농예, 수렵, 의술, 연극술)을 이론적 예술(철학, 물리학)과 실용적 예술(정치학, 윤리학)의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론적 예술은 인간의 무지를 치유하기 위해, 실용적 예술은 인간의 악을 치유하기 위해, 기계적 예술은 인간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 신이 내려 주신 것이었다.¹⁵⁾ 중세에 있어서 교양 개념은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칭하는 신학 용어로 쓰였다.

17세기 근대 과학의 ‘혁명’은 마술로부터의 해방이다. 과학(scientia 지식)¹⁶⁾은 기술(techne 기예)과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그 개념을 정립하였다.¹⁷⁾ 지식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한 청교도주의의 교리는 근대적 자연관 또는 근대 과학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당시 근대 과학은 런던의 사교계 또는 교양 사회를 구성한 일부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즉 젠트맨의 지적 취향, 취미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의 17세기는 취미의 시대로 과학에 대한 취향도 여러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과학을 산업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사답게 그것을 문예·미술·음악과 같이 고상한 지식, 즉 교양으로 반기고자 했다. 기술과는 완전히 다름을 강조하면서 ‘교양’으로서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막스 베버는 근대적 사회의 성립을 전 근대적인 마술성의 극복에서 찾았다.¹⁸⁾ 근대 과학의 태동은 스킨라 철학과 함께 중세풍인 마술적 의사과학(pseudoscience)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러나 기억해보라. 교황청에 의한 코페르니쿠스의 유죄판결(1616), 갈릴레이 재판(1633)이 기승을 부렸듯이 새로운 근대 과학도 애초에는 마술(magic)과 비슷하게 이단시되었다. 철저하게 사변적인 스킨라 철학이 지배하는 중세에서, ‘실험하는 자’는 모두 마술사(magician)로 일컬어졌다. 실험적 방법을 강조한 베이컨은 당대는 물론 후세에도 마술사로 불렸다.(그가 실험과학[scientia experimentalis]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 마술사들의 방법론은 실험적 방법이었다. 파우스트 박사(그는 15, 16세기 독일에 실재한 연금술사였다)를 닮아 연금술사들은 자연학·의학·천문학·광학·기역술·인상학 등 만물의 사리를 규명하고자 한 탐구적 인간이었다. 결국 점성술이 근대적 천문학으로, 연금술이 근대 화학으로 갈 수 있는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근대 과학은 그 자양분이 가지고 있던 마술적 요소와 오컬트(occult)¹⁹⁾를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이성’으로 빛나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었다!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한 의도적 결별이 있었다. 하나는 기예이고, 또 하나는 신화적 세계관이다.

15) 래리 쉬너, 2007. p52

16)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지식(scientia)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듯이 일반적인 지식(knowledge)의 의미로 오랫동안 쓰였다. “값싼 요리의 지식”(scientia, 세네카) “내가 이 반지에 관해 갖고 있는 지식”(science, 셰익스피어)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기예(art)와 구별되지 않고 쓰였다.(이광주, 2009. 「교양의 탄생」, 한길사, p504)

17) 과학이 실험(experiment)을 수반하는 이론적·체계적 인식활동이며 그 성과인데 비해 기술은 대체로 생산현장에서 갖는 체험, 즉 실습(practice)을 통해 개별적·기계적 인식이며 성과를 뜻하게 되었다.(이광주, 2009. p507)

18) 이광주, 2009. p509-541

19) 오컬트 : 물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초자연적 현상, 또는 그에 대한 지식과 기술. 비학(祕學)이라고도 함.

17세기에 성립된 근대과학의 전문성(professional)은 세기 후반부터 여러 학문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당시에 과학자는 철학자이며 문인이었다. 과학자(scientist)란 말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철학자 휘얼이 1834년에 처음 만들고 1840년경부터 쓰였다. 이전에는 ‘men of science’란 말이 쓰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근대과학의 성립 이후에도 엘리트 계층에서는 전통적 교양 지상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그만큼 전문성이 가볍게 여겨졌음을 말해준다. 변화는 19세기 전후에 움트기 시작했다. 과학이 대학에서 전문학으로 강의되면서 과학과 지식의 전문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에 연동되어 갖가지 전문직(profession)이 태동했다. 뉴먼은 「대학의 이념」(1873)에서 “지성의 연마란 유용성이나 실리를 위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knowledge its own end)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드디어 생활과 결별할 준비로 ‘순수한 지식 자체의 목적’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뉴먼이 「대학의 이념」을 발표할 무렵 신사 계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교회 성직자, 법률가, 고급 관리, 장교 등 상류 계층 신사들이 전문직에 진출하고 이어 대학교수, 과학자, 의사, 문필가로 이루어진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이 신사 계층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들 전문직은 신사들의 클럽 출입증을 손에 넣으면서 귀족적인 우아한 삶의 양식을 선호했다. 그들은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그 형태나 직업에서도 귀족적이 되고자 했다. 즉 그들은 일 자체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고 그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종사하는 대다수 시민과 노동자 계급으로부터의 이반(離反)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근대적이라고 하는 전문직의 등장도 계층적인 사회체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19세기 중엽을 전후한 중등학교에서 시민대학에 이르는 영국 교육의 변혁도 그 본질에서 귀족과 젠트리, 전문직을 위한 것이었다. 교육의 재편성은 오히려 귀족적인 퍼블릭 스쿨과 일반 서민의 학교(그래머 스쿨)의 이질성을, 옥스브리지와 시민대학의 차별화를 심화시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계층구조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조장하는 권력이 되었다. 부르디외는 1968년 5월의 이른바 대학혁명 뒤에도 출신 계층에 의한 문화와 교육의 선별과 상속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발해야 했다.²⁰⁾ 이제 세 번째 의도적 분리가 있다. 예술은 신사다움을 구별 짓게 하고, ‘고매하고도 그 자체로 순수한 예술’을 통해 대다수의 일상적 삶과는 차별화된 우아함을 과시하는 더 없이 좋은 매개체가 된다.

3.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삶의 예술’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회원국 등 36개국 가운데 25위로 하위권이다. 심지어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에서는 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2013 세계 삶의 질(웰빙) 지수’에서는 한국의 삶의 질 순위가 135개국 중 7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14% 만이 자신의 삶이 풍요롭다

20) 이광주, 2009. p543-549

고 생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기관인 EIU²¹⁾가 2013년도에 조사한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순위에서도 서울은 최하위권인 25위에 그쳤다.

한국의 GDP 순위가 10위대 초반을 유지하지만 국민행복지수가 47위(유엔의 ‘2015 세계행복보고서’) 정도 하위권을 나타내는 것은, 경제발전이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리차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문²²⁾ 발표이후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로 불린다.

1972년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대체하는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부탄의 4대 국왕인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가 제안하면서, 전 세계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가난한 나라의 행복론이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수십년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경제지표인 GDP나 GNP 등으로는 더 이상 행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도 자각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다. “부(wealth)에서 삶(life)으로!”는 국가와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재설계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그렇다면 ‘GDP 지수’(경제지표지수)와는 다르게 ‘GNH 지수’(행복지표지수)에는 문화와 예술이 많이 들어 있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하다.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환! 행복지표지수에서 직접적인 문화 지표나 예술 지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문화와 예술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동사형으로 쓰이는 순간,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이나 재배였는데, 나중에 인간 스스로의 경작이라는 의미에서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경작, 창조) 가는 행위가 바로 문화(행위)이고 예술(행위)이다. 만들어 가는, 경작해 가는, 창조해 가는 행위는 무엇(지표)을 결과물(지수)로 나타내는가 보다는, 주체의 과정에 초점이 두어진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삶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무엇이든지 삶을 잘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행위들을 (예술이라고) 지칭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주 잘 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가 되면 “예술이야!”라며 감탄한다.

고대의 윤리학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고 가르쳤다.²³⁾ 그리스인들의 삶의 이상은 칼로칼카티아(Kalokagathia)²⁴⁾, 즉 선미(善美)였다. 칼로카가티아 속에서 미와 덕은 하나가 된다. 고대인들의 덕은 무엇

21)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분석에 정평이 있는 기관이다.

22)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edited by P. David and M.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23)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 가운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음들 중 최상의 것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데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1. p17)

보다도 우수함이었다.²⁵⁾ 푸코는 근대 주체철학을 뛰어 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스의 ‘테크네’에서 발견한다. 푸코의 관심²⁶⁾은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세우는 그 미학적 방식에 가 있다. 그리스어의 ‘테크네’는 무엇보다도 미적·윤리적 실천의 수완을 가리킨다. 따라서 푸코가 말하는 ‘자기 테크놀로지’란,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적·윤리적으로 세우고, 자신의 배려를 통해 제 삶을 예술적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존재미학의 수완이라 할 수 있다.²⁷⁾ 말하자면 예술은 행복이라는 삶의 완성에 도달하는 ‘존재의 기술’²⁸⁾이다.

이 존재미학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생활태도’였다. 사회적으로 고정된 도덕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맞춰 수동적, 자학적으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미’의 원리로 자신을 지배하며 쾌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수완이었다. 그것은 삶을 예술로 만들고,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창조적 미학이다.²⁹⁾ ‘자기’란 자신을 배려하며 자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미적 주체, 제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예술적 주체다. 그리스인들에게 형식이 없는 재료 상태의 삶은 아직 사는 게 아니었다. 그들에게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그것’이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살려면 삶에 스타일을 주어 그것을 존재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했다. 바로 이 고대인들의 존재미학에서 푸코는 근대의 만들어진 주체를 뛰어넘어 자기를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³⁰⁾

예술은 동사다.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던 단어들에 지금에 이르러서 그 결과물만을 뜻하는 의미로 굳어졌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완성된 작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이란 일련의 경험이나 실험처럼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짜 맞춰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을 탐구하며, 그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을 일상의 삶에 적극 활용하는 과정이다.³¹⁾ 즉 예술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인 셈이다. 예술이 동사가 되고 과정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예술’이 던지는 문제제기다.

24) 미(美 Kalos)이면서도 선(善 Agathos)한 것.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폴리스 시민으로서의 아레테(탁월함 Arete)를 갖춘 사람. 즉 심신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정치·군사경기에 출중한 사람을 칼로카가토스(Kalokagathos)라 불렀다. 이는 또한 경기자(아마추어)의 이상형이었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당시 아마추어란 순수하게 운동 경기를 애호하는 비직업적 경기자를 말한다. 금전 및 기타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취미·교양·오락으로서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25)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탁월성에 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행복에 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1. p46)

26) 흔히들 「성의 역사」 1권과 2권 사이에 푸코의 사유에 ‘단절’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주체를 담론이나 권력의 효과로 간주함으로써 주체를 객체화했다면, 이 책에서부터 그는 주체의 자기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담론과 권력의 말을 바라보기 시작한다.(진중권, 2013a.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p196)

27) 진중권, 2013a. p188

28)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경 역, 2013. 「성의 역사 2 - 쾌락의 활용」, 나남. p25

29) 진중권, 2013b. 「앙겔루스 노부스」, 아트북스, p40-41

30) 진중권, 2013a. p196

31) 에릭 부스, 강주현 역, 2009.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예코의서재, p16-35

토론 1

'삶의 예술'을 위한 비전, 뒤집기 그리고 전략

※ 정종은(메타기획컨설팅 부소장)

박승현 본부장(이하 발제자)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삶의 예술'을 위하여>에서 18세기 중엽 예술개념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시점을 중심으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이와 결부된 가치에 대한 논의의 변천 과정을 충실하게 추적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술 활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그 체계가 어떻게 변환되어 왔는지, 또한 '삶과 분리된 예술'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근대에 들어 정신성을 근거로 '예술가의 활동'이 여타의 테크네로부터 어떻게 증류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대적 예술개념이 '68혁명'으로 상징되는 신사회운동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균열을 겪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가 종국적으로 겨냥하는 바는 발제자의 다음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술은 동사다.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던 단어들에 지금에 이르러서 그 결과물만을 뜻하는 의미로 굳어졌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완성된 작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리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이란 일련의 경험이나 실험처럼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짜 맞춰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예술이 동사가 되고 과정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예술'이 던지는 문제제기이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시대구분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삶의 예술/생활예술/시민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이상과 같은 개념적 고찰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찰이 생산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층위에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발제자가 주장하는 바는 과연 '고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고대인의 존재미학에서 푸코가 보았던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에 수렴하면서, 발제자는 근대적인 고착화 또는 증류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를 제시한다. 이러한 '돌아감'의 필요성을 우리는 '창조산업의 부상'이라는 전지구적 현상으로부터도 유사하게 포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술, 문화산업, 첨단지식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창조산업'과 '창조경제' 개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바, 이는 예술이 그 자신의 어원이라 할 수 있는 고대의 테크네 개념을 향해서 존재론적 회귀를 추구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돌아감은 단순한 회귀가 아닐 것이다. 근대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가 21세기의 테크네 활동을 BC 5세기의 테크네 활동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삶의 예술'의 전범을 서양의 고대에서 찾는 것은 다소간 낡은 전략처럼 느껴진다. 전지구화, 디지털화, 융복합화 등을 통해 '제2의 기계시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삶의 예술

의 비전을 forward-looking이 아니라 past-looking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일까?

둘째, 발제자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예술과 일상 그리고 행복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논의, 즉 예술의 본유적 가치로서 심미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를, 그리고 예술의 도구적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는 최근의 흐름을 상기할 때, 상당히 급진적인 관점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사료된다. 심미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는 ‘예술작품’, 즉 명사적 의미의 예술에 방점을 두고 가치론을 사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구적 가치로 운위되어온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예술활동’, 즉 동사적 의미의 예술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예술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논의 역시 근대적인 관점에서 ‘본유적인 것’과 ‘도구적인 것’을 구분하는 체계를 충분한 반성 없이 채택해온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술의 본유적 가치를 오히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심미적이고 인지적인 가치는 이러한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산물인지에 관심을 두는 접근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셋째, ‘부천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전통의 강자인 ‘성남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재단들이 ‘삶의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사업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예술 또는 생활문화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결과를 낳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환경 인프라 조성, 투입인프라 구축, 가치사슬에 대한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³²⁾, 현재 지역문화재단이 삶의 예술의 번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가령 성남의 경우, 생활예술의 메카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문화재단의 전담 인력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시민예술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고 사료된다.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과 방향이 사랑방 클럽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야말로 성남의 시민예술 생태계가 ‘자율조직 생태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핵이 되었다. 또한 생활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해당 공동체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을 넘어서 기획-창작-제작-유통-향유의 가치사슬 속에서 적극적인 C&D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성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태도일 것이다.³³⁾ 부천의 생활예술 생태계가 자율조직 생

32) 산업적 용어인 가치사슬을 예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기획-창작-제작-유통-향유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은 모든 생산 활동에 ‘유비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요소 인프라는 이러한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하는 투입 요소들의 공급 기반으로서 물적 인프라, 재정인프라, 인적 인프라, 정보인프라, 기술 인프라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경 인프라는 해당 생태계 내에서 가치사슬 및 요소 인프라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거시적인 환경으로서 법·제도, 관련 연구, 사회적 인식 등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는 환경 인프라 개선, 요소 인프라 조성, 그리고 이를 통한 가치사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영체계/추진체계/전달체계 및 그 작동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3) 2000년대 들어 P&G의 사례와 함께 주목을 받게 된 C&D(Connect & Development)란 밀실에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R&D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기존 산업이나 영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필요가 대두되었을 때, 2) 익숙한 관습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잠재적 솔루션을 가지

태계, 동반성장 생태계, 개체번성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지, 성남과 서울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 오신 발제자의 혜안을 나누어주시길 기대한다.

고 있는 전문가(집단)를 물색하고, 3) 그 전문가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셔와서 함께 새로운 솔루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민예술 공동체들은 전문예술가들을 모셔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C&D를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역으로 시민예술가들은 지역사회나 지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심을 받는 것 역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민예술이 지역과 고립되어 게토화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예술과 전문예술의 C&D, 시민예술과 지역사회의 C&D를 촉진하고 매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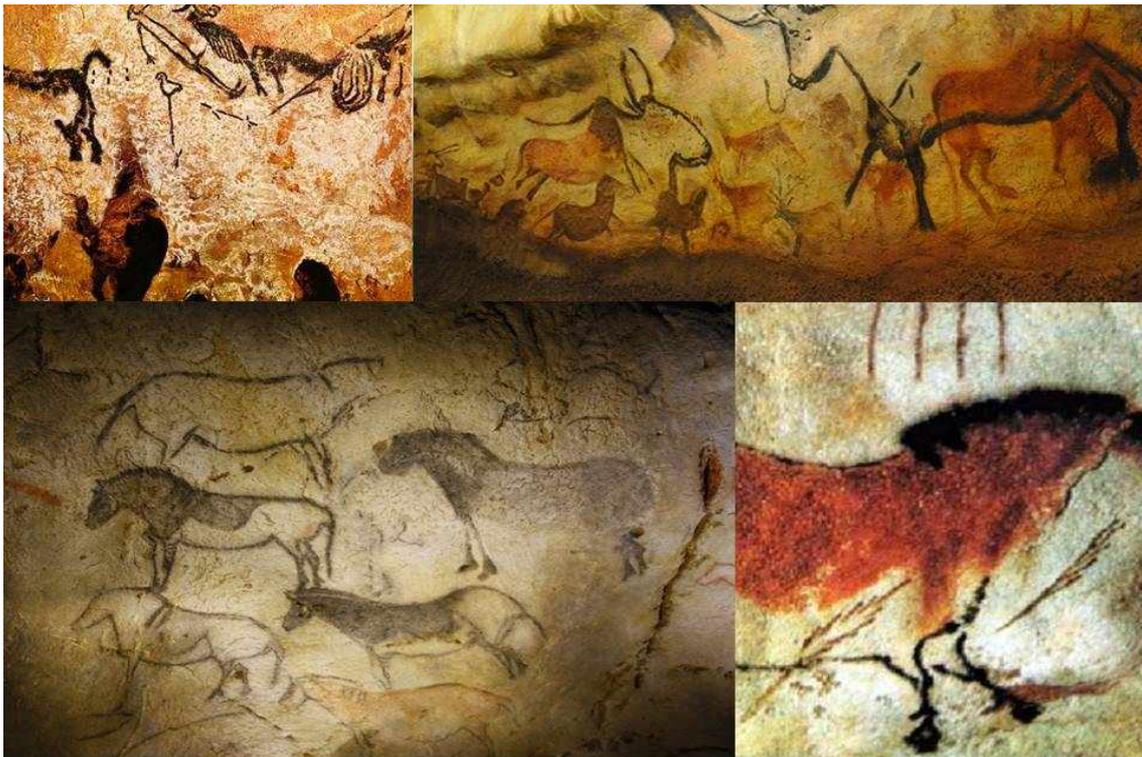
토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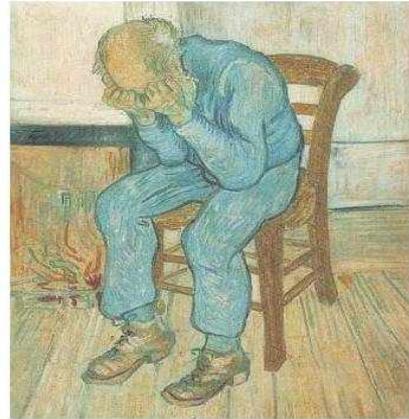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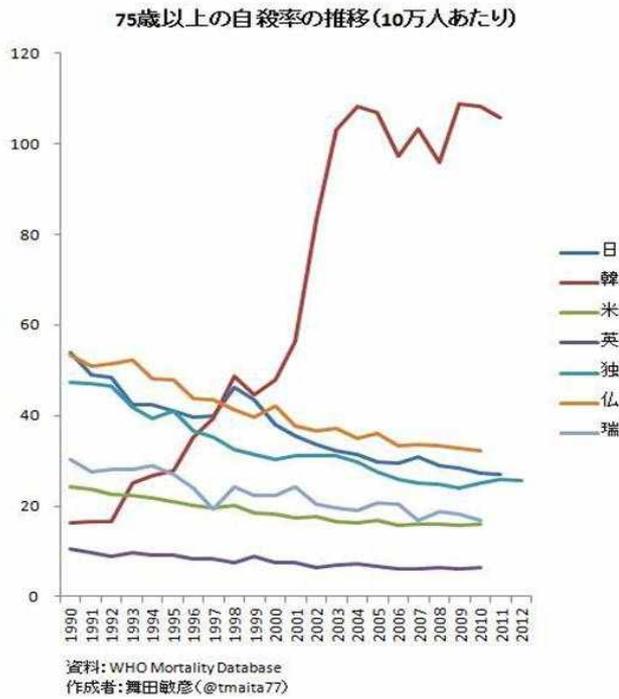
우리에게 생활예술은 왜? 아름다운가

※ 임승관(문화바람 대표)

우리에게
생활예술은 왜? 아름다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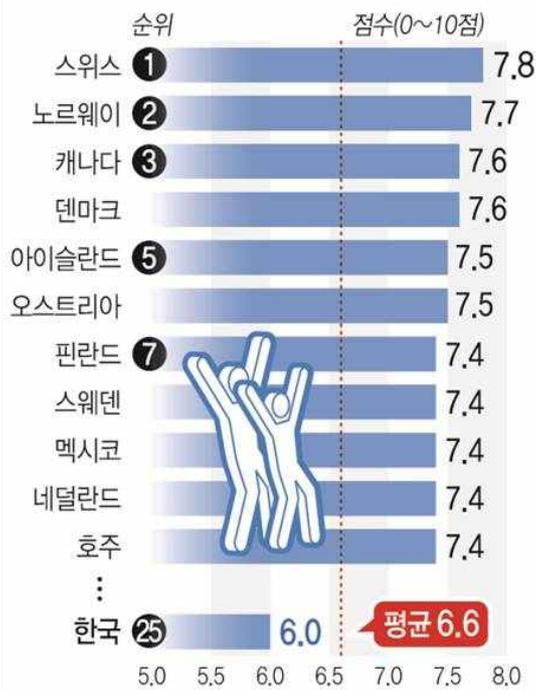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비영리민중단체 **문화리듬**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

2014년 OECD 회원국, 러시아·브라질 포함 36개국 대상



자료/OECD '2014 더 나은 삶 지수'

연암뉴스

▶ 경제 성장률

한국

2010년 6.5%~ 3%

OECD 회원국들

2010년 3.0% ~1%

▶ 삶의 만족도

2015년 지난해 보다 4계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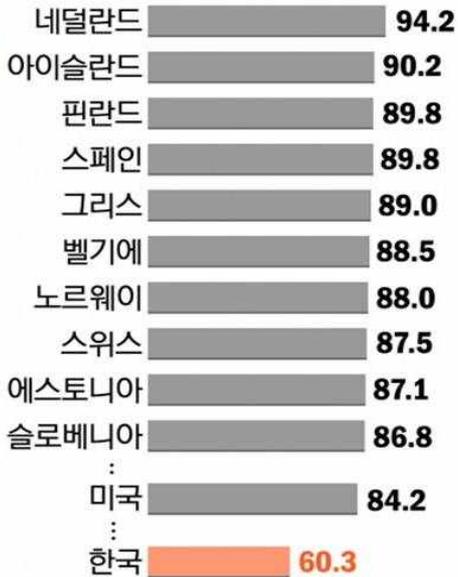
▶ 세계 (143개국) 행복도

2013년 94위

2015년 11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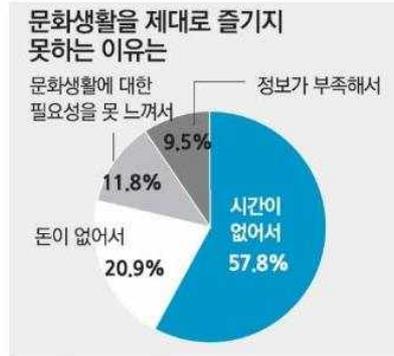
OECD 주요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비교 기준(100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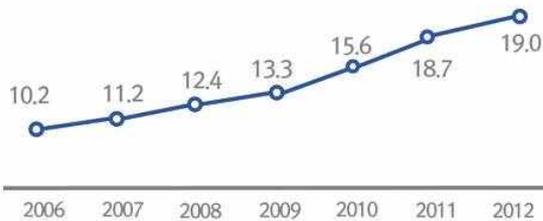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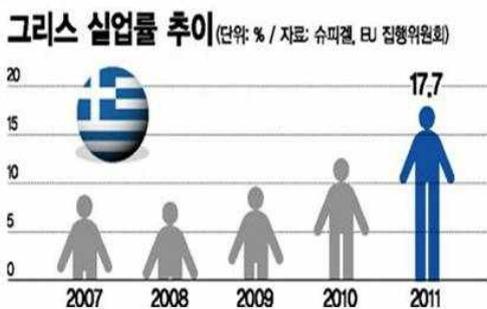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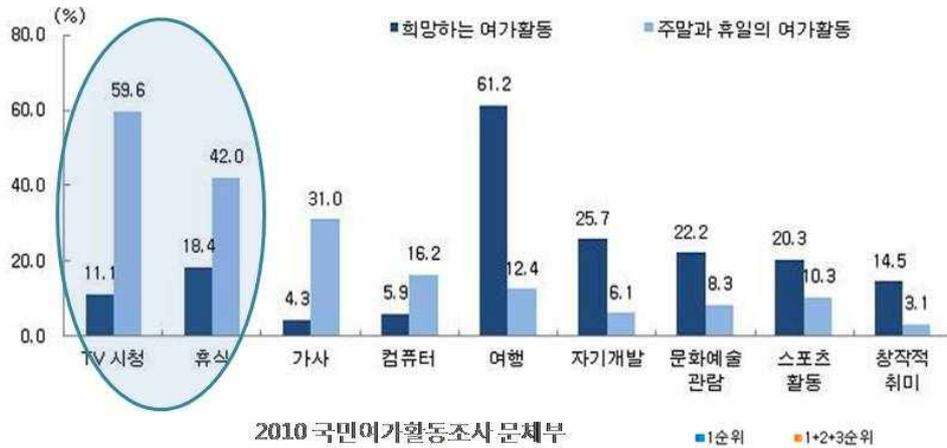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 시간 과 문화생활



취미가 없는 사람의 비율(단위=%, 전국시 단위 이상 도시에서는 11-64세 남녀만 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여가생활조사



- 그리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0만 명/ 3.2명 ~ 3.9 (2011 경제위기)
- “그리스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 삶의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 “그리스인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며...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돕기 때문에 자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

◆ 동아리 성장과정



생활예술 활동의 조건





시민은 **생활예술을 매개로**
생활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협력과 호혜의 신뢰관계를 만들어
사회자본을 쌓아간다.

마을 만들기

건강한 **문화생태계** 토대가 되어
선 순환을 이루게 한다.

문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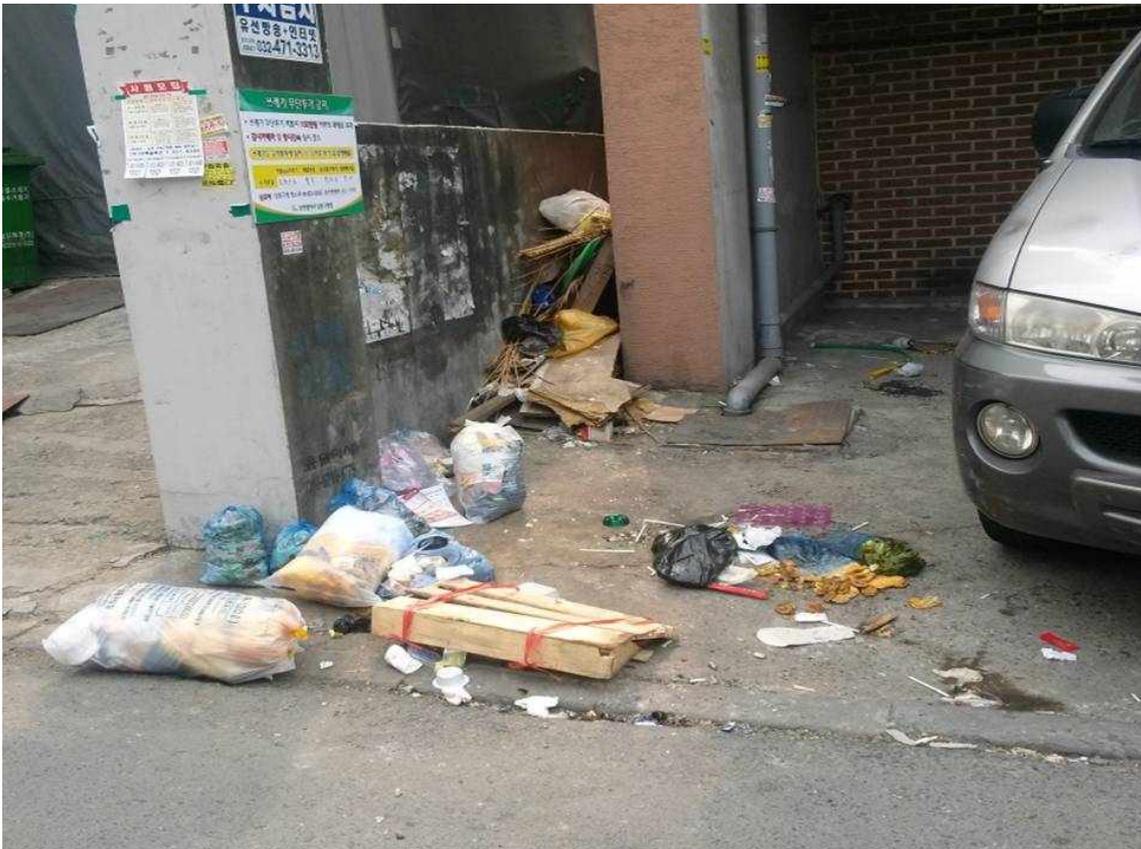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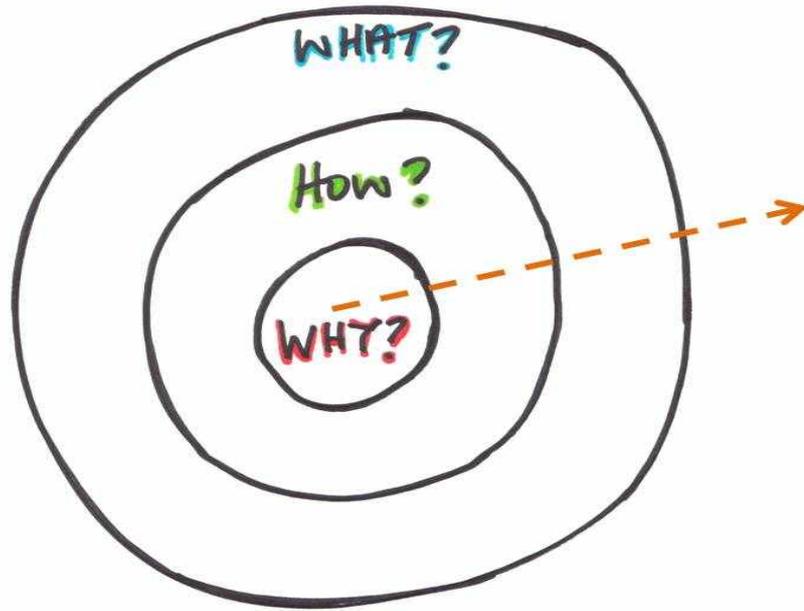
● **통제의 환상** : 권한이 없는 뭔가에 대해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
(하버드 심리학자 엘렌 랑거)

지역 **주민**과 **상인**은 미래

이 **문화거점**과 **활동을**



으로 보는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한 이유

- 공감하는 현안 해결
- 즐거운 참여와 개입으로 자존감 형성
- 투명한 과정공개로 고립감, 사회적 배제감 극복
- 갈등이나 난관을 직접 논의 해결하여 무력감 극복
- 격려와 공감 반응으로 소속감 연대감 형성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삶에 의미를 발견하고 권태감을 극복한다

첫 사업은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마을 현안

참여 주민은 동아리 활동으로 자연스런 관계와 수평적인 소통 관계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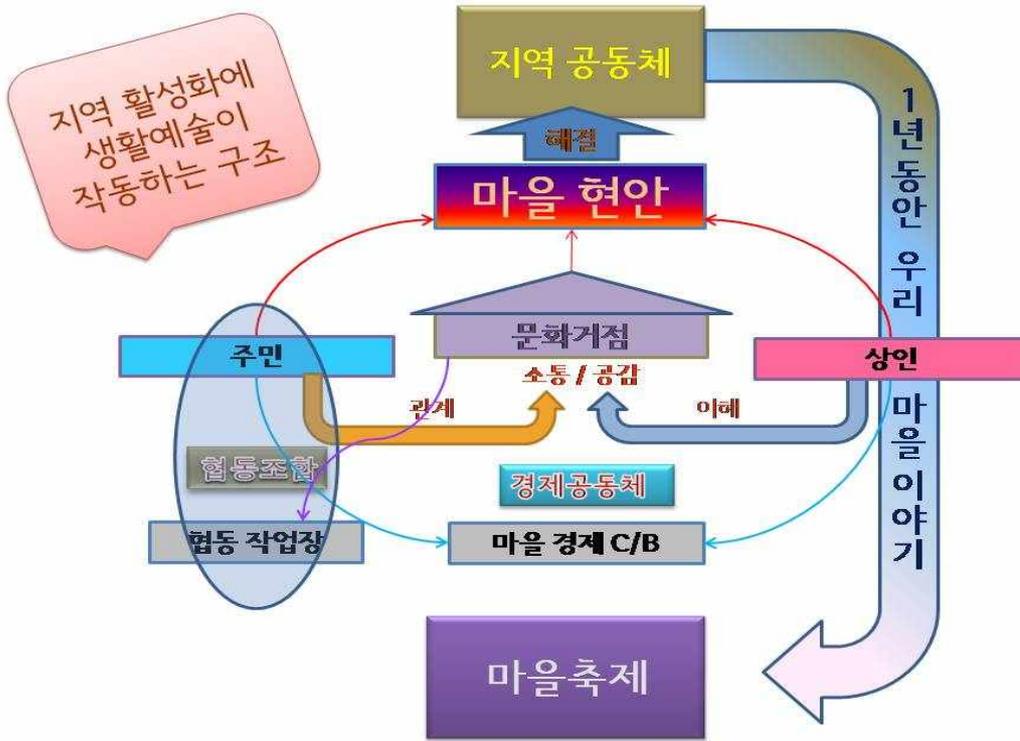
공동 작업장

마을 내 소비와 생산의 순환구조 만들어 간다.

마을경제 공동체

일 년 동안 마을의 추억(story)이 주제가 되어 함께 마을 축제를 만든다.

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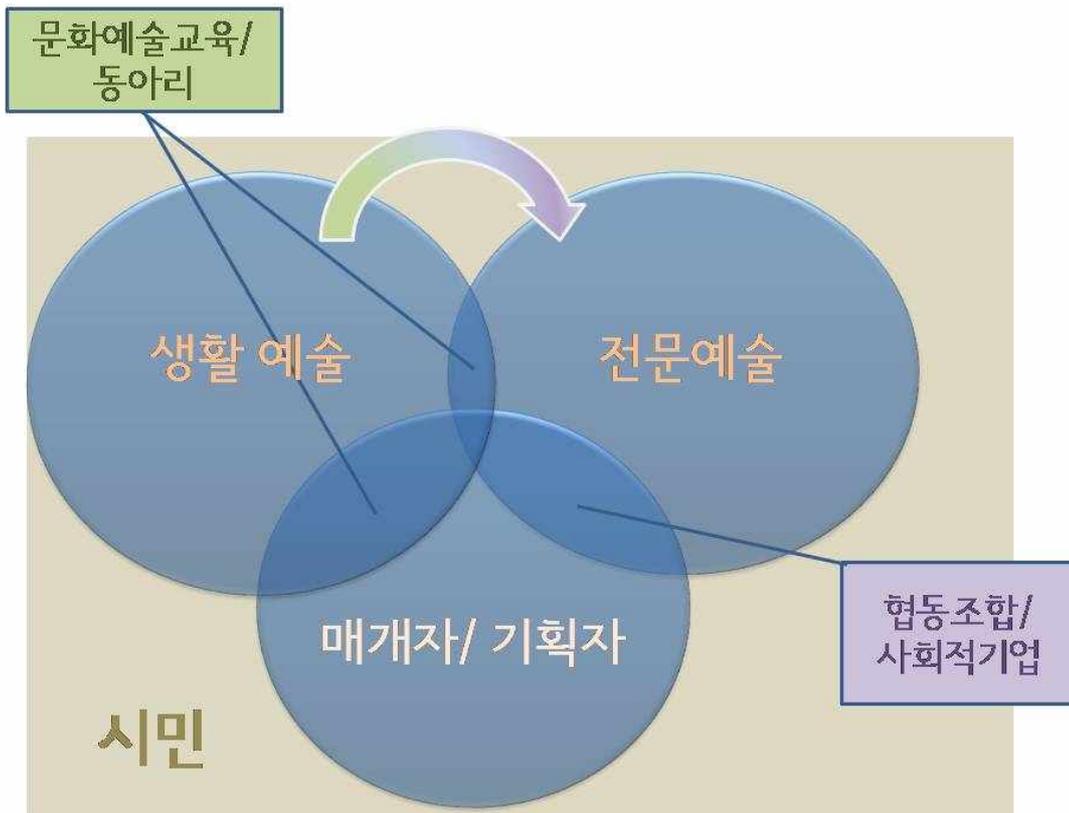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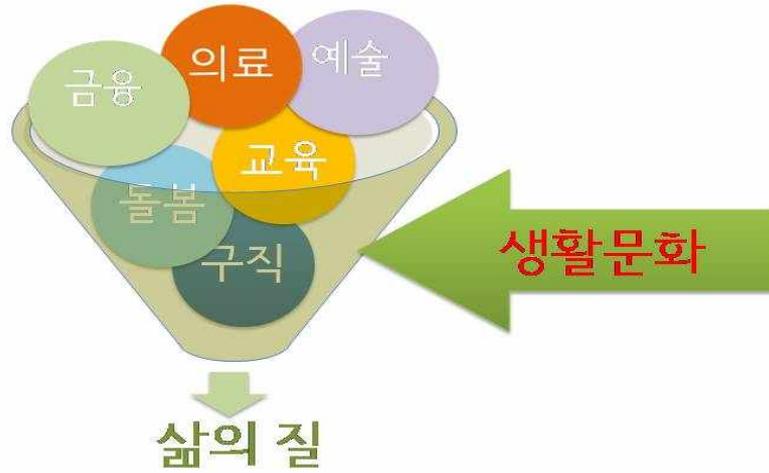
생활예술과 소통가능성



취미생활을 포함한 자아실현이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단위:%)



생활 속 예술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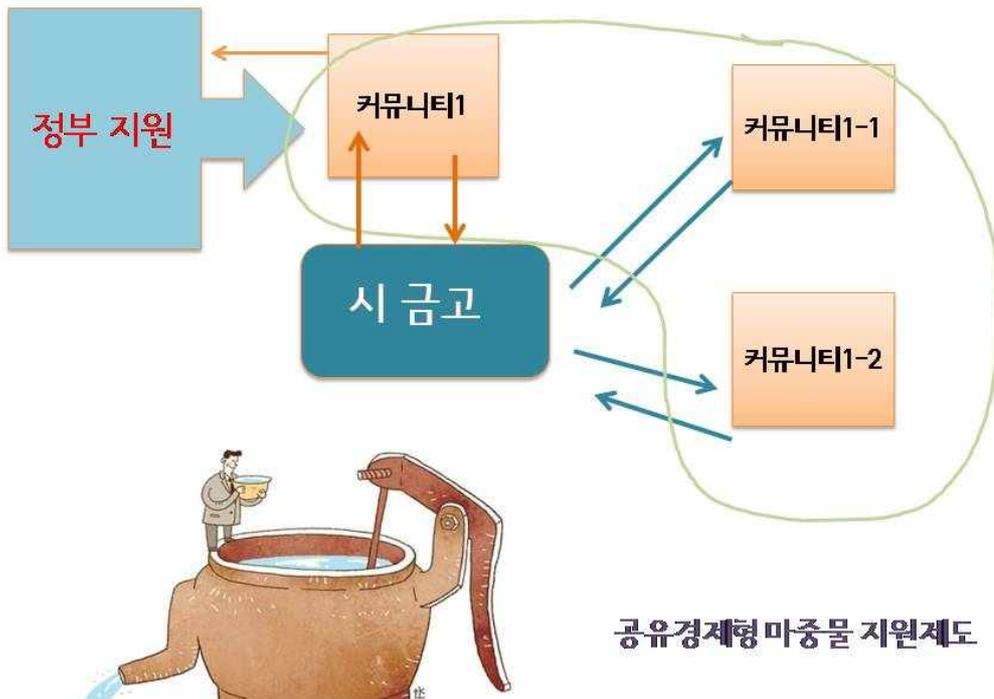
자생성은 지원할 수 없는가?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은 막을 수 없는가?

자생적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의 90%는
공간유지력이다.

그래서
공간임대는 가장 큰 매몰비용이다

주인의식/ 책임감/ 희망/ 연대/ 위기극복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기미꿈화움운네 **꿈화바람**



붙임

- ❖ 붙임 1 :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 ❖ 붙임 2 :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 붙임 3 : 예술의 사회적 가치(삶의 예술을 위하여)

붙임 1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조정윤)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조정윤

지역문화재단은 왜 설립되었는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지역문화재단 설립 유행처럼 번지다.

문화재단 설립의 3가지 관점

- 
사업
 - 장기적, 계획적 사업 추진
 - 민간적 발상의 도입과 문화적 서비스 향상
- 
조직
 - 전문가에 의한 운용
 -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직 운용
- 
재정
 - 유연한 재정 운용
 - 자체 자원 조성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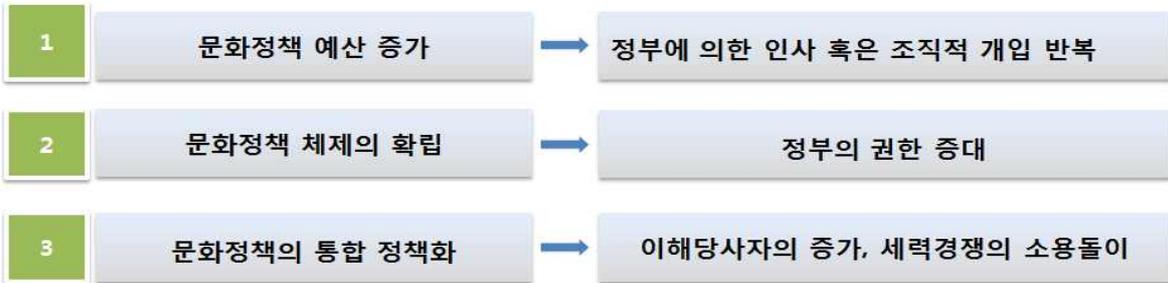
관련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팔길이 원칙은 아직도 유효한가?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아츠 카운슬에 있어 팔길이 원칙에 관한 고찰”(오오시타 요시유키)

세 가지 '정책 진화의 딜레마'에 의해 결과적으로 팔길이 원칙이 저해됨



지역문화재단 Catch-22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역할 및 사업의 모법

관주도의 사업추진, 하향식 정책
추진, 단기적 성과 지향,
하향식 예산지원에 대한 자성

“공무원 행정과 다른 행정절차
간소화, 유연한 행정”
(문화예술 현장 요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행정의 관리·감독 명시한
조직운영의 모법

지도·감독,
제26조 검사·보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행정절차 준수를 법률과
각종 지침으로 통제
(국가 및 지자체)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의사결정의 거버먼트

재단	2015년 예산 현황(단위)									2015년 총액 (①~⑥합계) 비고
	의존수입					자체수입				
	①지자체 출연금			②지자체 위탁 사업비	③국고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이자수입	⑤사업수입	⑥기타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							
강원	-	12	-	12	34	46	5	30	15	142
경기	-	-	151	151	175	180	32	66	25	629
경남	-	7	12	19	40	102	3	-	6	170
광주	5	-	28	33	82	68	2	2	0	187
대구	-	-	5.5	5.5	106.6	42.8	5.1	-	8.7	168.7
대전	-	25	16	41	49	37	2	-	12	141
부산	20	-	17	37	185	36	7	0.1	10.9	276
서울	-	104	-	104	162	207	27	6	153	659
인천	-	8	-	8	63	64	14	1	6	156
전남	-	-	23	23	32	93	0.5	5	10	163.5
제주	-	-	4	4	28	37	7	-	20	96
충남	-	-	16	16	30	96	-	-	3	145
충북	12	-	5.7	17.7	17	93.3	7.3	-	0.7	136
합계	37	156	278.2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평균	-	-	-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	-	-	15.4	32.7	35.9	3.6	3.6	8.8	100.0

열악한 재정구조로 인한 의사결정의 거버먼트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반한 재단 운영 보다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

지자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 대행기관

재단법인 OO문화사업단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전체 평균 출연금은 15.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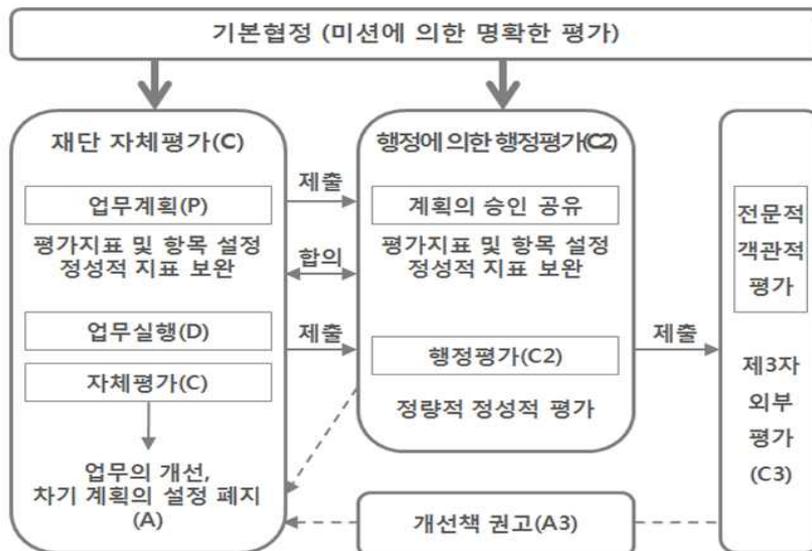
지자체와 재단의 수평적 협력관계 사례

|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예술진흥재단의 신사 협정

협약사항(2008~2010)	협약사항(2011~2013)
1.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총 72건의 사업 실시한다.	1. 재단운영 시설의 이용자수를 250만명으로 한다.
2. 「어린이의 창조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등의 참가자수를 15만명으로 한다.	2. 지역의 시민참여 협동사업을 확대하여, 참가자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한다.
3. 재단 홈페이지의 총 액세스 건수를 1100만 건으로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시민 의견등의 접수 건수를 600건으로 한다.	3. 어린이 대상 사업의 참가자 수를 늘려, 12만 1천명 이상으로 한다.
4. 예술문화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를 4.0(5점 만점)으로 한다.	4. 예술문화관련 국제교류사업을 확대시, 25개 사업 이상으로 한다.
5.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꾀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0%이상으로 한다.	5. 재단의 사업 수입 및 그 관련 수입의 증가를 꾀해 자기수입 비율(재정자립도)을 37% 이상으로 한다.
6.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능력·역할·직무·직책에 상응한 인 사·급여 제도를 고친다.	6. 직원의 의욕, 능력, 실적의 적절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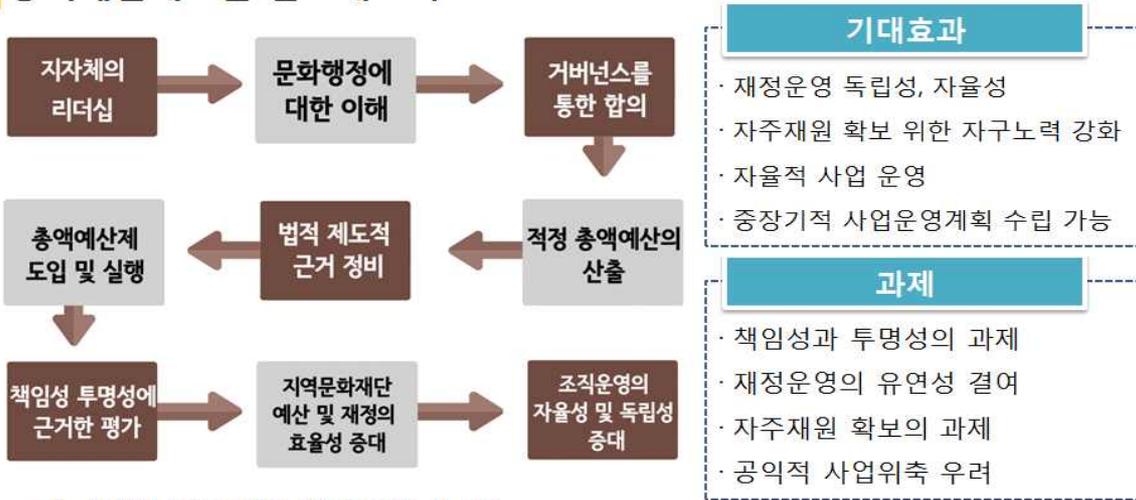
지자체와 재단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조

| 신사협정의 평가



안정적 자원 확보 방안은 없는가?

총액예산제도를 검토해보자



☞ 미토문화예술진흥재단 문화예산 1% 시스템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미토시(水戸市)는 미토예술관이 지역의 문화예술창조활동을 위한 핵심센터가 되도록 한다는 정책에 입각하여 동 예술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토시예술진흥재단에 매년 시 예산의 1%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No more words - It's time for action

붙임 2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이 혁신입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웃(차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마을의 출발과 성장을 도울 **마을사람 육성**

쑥(삶) 마을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마을살이 함께 하기

함(협력) 시민과 행정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정착하기 위한
마을지향형 민관협력 만들기



목차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배경과 흐름 | 4

1-1. 정책 배경 | 5

1-2. 정책 목표 | 6

1-3. 정책 방향 | 7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현황 | 9

2-1. 기반 조성 사업 | 10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 18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성과 | 24

3-1. 주민의 등장과 업필 | 25

3-2.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 규모 | 26

3-3. 주민과 사회의 변화 | 27

3-4. 마을활동가의 성장 | 29

4. 나가며 - 남은 과제 | 34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배경과 흐름

1-1. 정책 배경



나라는 잘 사는데 ...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OECD 국가행복지수 34개국 중 한국 24위 (2014)

- 2인 이하 가구 2012년 50.5% → 2035년 68.3%
- 65세 이상 독거노인 증가율 2012년 589만 → 2035년 1475만
- 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 2012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 증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2015년 4월 현재 전국의 마을지원센터

국토부, 전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설 추진 중,
근린생활 지역지원사업 지원 계획

21곳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인천시,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 대전시, 강릉시, 연진 남구, 연천시, 정음
시,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
동구, 광주 남구, 광주 공산구, 울산 북구

2014년 9월 전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발족

준비중인 곳 : 경기도, 대구, 광주, 제주도, 서울
시 노원구, 종로구 등

2015년 3월 목면권리금리 주제 : 중간지원조직

1-2. 정책 목표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 서울은 대한민국의 많은 자원이 몰려있는 수도이며 천만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
- 가족 간, 이웃 간, 세대 간, 계층 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
- 공동의 활동을 통해 협동의 즐거운 경험을 갖는 것이 우선
- 마을은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들의 연결을 통해 가능



1-3. 정책 방향(1)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민관협력모델 구축
-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가치 아래 진행했던 세마을 운동의 관 주도 방식의 부정적 요소 극복
-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효과적인 주민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



1-3. 정책 방향(2)



주민 주도를 위한 행정 혁신 노력

-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특별한 기관 단계 아니라도 주민 3명만 모여도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가능
- 참여자의 마을공동체 관심도와 수준에 맞는 지원 체계
초기 모임형성 지원사업부터 공간지원사업까지 주민의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
- 마을활동 촉진을 위한 전방위 활동 지원
지원금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교육, 상담,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을 통한 주민 성장
- 주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심사 과정
주민들이 모여 제안 내용 발표 및 상호 심사함으로써 주민 주도 마을 의제 형성
- 실질적 인적·물적 자원 순환을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마을활동 참여자 간 관계망이 형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활동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현장지원 체계 강화, 주민과 행정의 필요를 적절히 조정해 주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현황



2-1. 기반 조성 사업 제도적 기반 구축



2012년 1월
광역전담부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설치



2012년 3월
자치구전담부서

자치구
마을과(과) 생성



2012년 3월
법제도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



2012년 4월
면관협치기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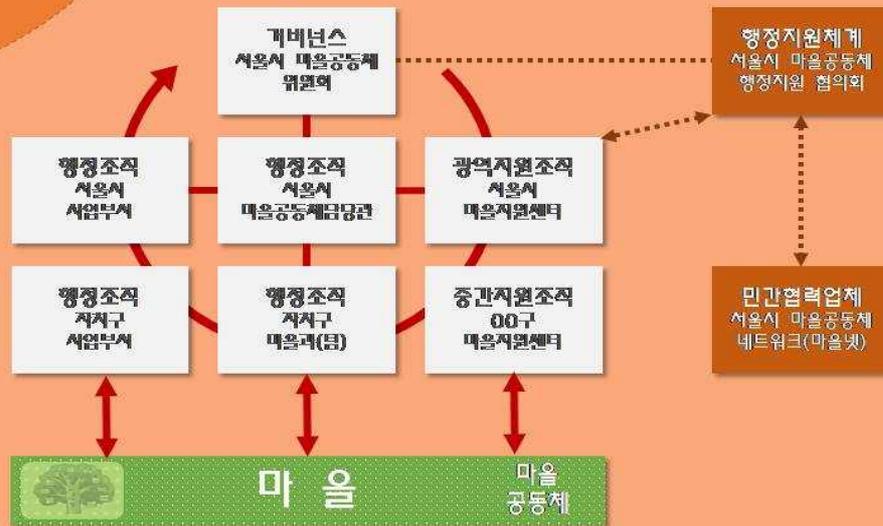


2012년 8월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2-1. 기반 조성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체계



2-1. 기반 조성 사업 주민 공모사업 체계

마을 성장 단계	마을의 상황 및 욕구	관련 마을사업
교육	교육을 통한 가지역 인식의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마을강화 지역제 마을교육
주민모임형성 (씨앗기)	마을의 특이한 주민모임 형성 마을의 필요와 욕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만들기 우리마을프로젝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치구 공모사업
실행사업 (씨뿌리기)	마을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해 욕구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지원사업 (공동육아, 마을미디어, 에너지지원, 이마트마을공동체 등)
공간사업 (성장기)	마을살이의 분기화, 상설화 거점공간을 통한 마을살이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지원사업 (마을기원,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마을지원사업 등)
마을단위사업	연계망 형성 및 마을협의 수립,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망 형성 사업 마을계획 사업



2-1. 기반 조성 사업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업무개시일 : '12. 8. 23
- 소 계 지 : 서울시 은평구 동일로 684(녹번동 5) 8동 1, 3층
- 위탁 기관 : 서단범인 마을
- 위탁 기간 : '12.8.23 ~ '15.8.22(3년)
- 인력 구성 : 총 26명
- 연도별 예산 현황

**마을생태계
기반조성**

시례희산

활동가
역량강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680	2,860	2,285	1,685

(*단위 : 백만원)

13



2-1. 기반 조성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22곳 중간지원조직 설치완료, 2016년 25곳 전체설치예정
- 초기 주민모임 형성단계 및 기 선정된 사업 권설통 및 교육
- 마을지원활동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 자원과 마을사업 연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주민 등장

주민 연결

마을
성장

거버
년스

14



2-1. 기반 조성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례(1)

도봉구마을지원센터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꿈꾼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발전이 가장 더디고 재정자립도 낮은 편
→ 2010년,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 ‘함께 Green 마을’
- 서울시보다 먼저 진행된 마을만들기, 주민 주도 모델

↓ 열주연에 한 번 마을활동가 수다 모임
↓↓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 현장 탐방



15



2-1. 기반 조성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사례(2)

광진구마을생태계 조성사업단

다양한 마을모임을 상호 매개, 촉진, 연결한다

- 1995년 성동구에서 분리된 신생구
- 2012년 무렵부터 ‘복지’로 마을만들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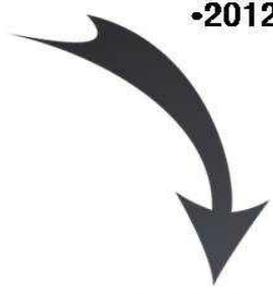
↓ 작은 도서관 추진 지역
↓↓ 마을넷 창립 당시 마을전체



16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업 분야의 변천 과정



•2012년 21개 사업으로 본격적인 시작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마을과 연계 있다고 판단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2013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성

1년 간 사업추진 경험 통해 15개 사업으로 조정

2015년
중 10개
사업

•2014년~2015년 사업 통합 및 변경, 자체사업 추진 10개사업

우리마을지원사업,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마을미디어, 다문화공동체
공동주택활성화, 에너지자립마을, 마을예술장작소, 마을학교, 안전마을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우리마을지원사업 : 도봉구 마을공간 '숲속애'

미션

서울 도심 쓰레기 야산이 생태놀이터로

→ 숲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 40여 명의 회원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동육아대학 연구센터 주관 혁신적 세고령영 연구 대회 <PROJECT INNOVATION MINDSET CHALLENGE>

*전 세계 세척혁신 사례 중 2등 수상 (2014.10.15)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도봉사람들' 의 힘으로
오래된 폐가가 방치된 야트막한 숲 속 땅을 임대
2013년 10월 주민들과 개관식

주민 30명 출자자 모집, 보증금 1천만원 마련



가게 폐업의 원천
가 마을전세, 공동육아, 김장
→ 마을 텃밭, 생태놀이터 마을 숲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마을예술장작소 조성 : 양천구 '모기동 문화발전소'

미션

공공미술프로젝트 유경험자인 젊은 문화기획자가 지역 예술가와 결합
→ 양천동 목 2동에 카페 겸 작업실 개소하고
다양한 주민 생활예술 프로젝트 진행

모기동 문화다방
연문화 강의, 공동체 영화 상영, 00씨의 밤상
등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운영
손작업자 부흥 프로젝트
나무 도예로 생활 소품과 핸드메이드 작품 제작
동네문화작업자 발굴
지역 문화작업자 발굴과 교육
모기동 마을축제



↑↑ 문화다방 마을극장
↑ 마을 텃밭으로도 이용

↑↑ 생활예술프로그램
↑ 마을 축제

19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에너지 자립마을 : 동작구 '성대골마을'

미션

마을기업으로 주택 단열개선, 에너지 컨설팅 참여 → 마을 일자리 창출 주민
협동조합 설립 → 햇빛발전소 설립



↑ 태양광이 설치된 이동식 키오스크 에너지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문제 고민
60여 가구를 시작으로 성대골 절전소 설립 후 절전운동
현재, 주민들이 에너지 전문교육 이수 후 에너지 컨설턴트
로 활동
→ 800개소 가정에 에너지 사용 현황 진단, 절약방법 교
육
→ 인근 학교 에너지 강사로 활동

20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마을미디어 : 종로구 '장신동 라디오덤'

미션 봉제공장의 특성상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는 점에 착안
→ 세계 유일의 봉제 미싱사 방송 표방



↑ 마을미디어 장신동 라디오덤 세원들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하는 라디오 방송국
장제언들을 위한 방송, 동네의 숨겨진 예술인 소개,
여인들의 수다 방송 등 동네 사람들과 소통
일주일 1회 업로드

마을미디어 교육 (1,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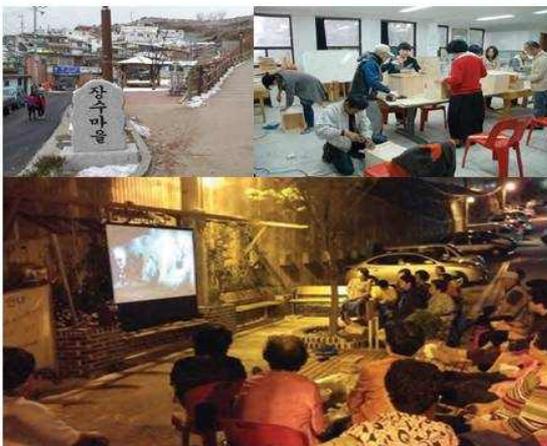
기금 조성에 장벽 마련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마을기업 : 성북구 '동네목수'

미션 삼선동 장수마을, 집과 길과 동네를 그대로 지키면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
→ 대안적인 도시개발과 마을 커뮤니티 중심



↑ 장수마을 동네목수의 다양한 활동

취약계층 집수리 활동에서 출발한 "동네목수"는 현재
주민관계망 속에서 운영되고 목조공방과 카페 운영

마을 일자리 창출
여성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일자리 창출

2-2. 분야별 지원 사업 사례



부모커뮤니티 : 구로구 '다둥이 아빠가 시작한 동네 놀이터'

미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동네 모임의 자연적 형성
→ 동네친구가 늘어나는 가족 커뮤니티 형성



우연히 시작된 동네 어린이 모임
남매 다둥이 아빠인 장O호씨가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놀다가 우연히 여갯집 옆집에도 같이 놀자고 여갯한 갯이 모임의 시작

가족 모두 참여하는 놀이 모임으로 발전
현재 가족 10가족, 40여명 아이와 부모가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 줄다리기 등 뛰고 놀고 있음

↑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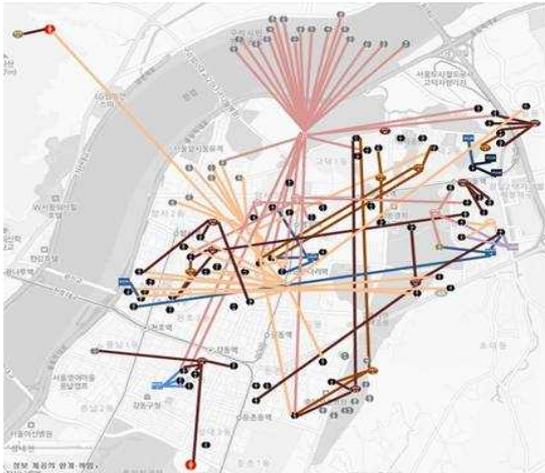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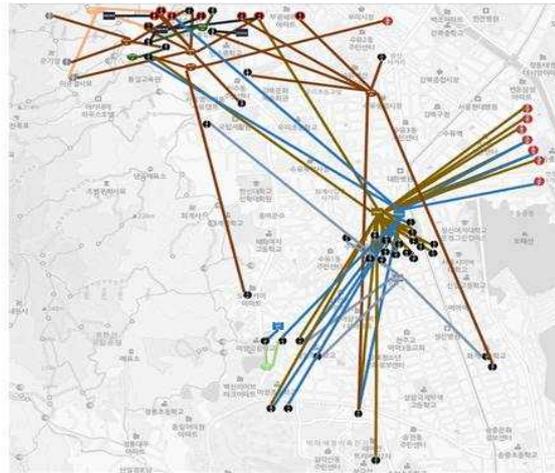
3-1. 주민의 등장과 연결



3,000여 개 마을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등장과 연결



강동구 마을공동체 주민 연결망
강동구 전역에 걸친 관계망



강북구 수유시장 주민 연결망
4.19 묘지, 수유제례시장 근처 지역 결집

3-2.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 규모



마을지원사업 통해 주민 100,000여명 주민 등장



3-3. 주민과 사회의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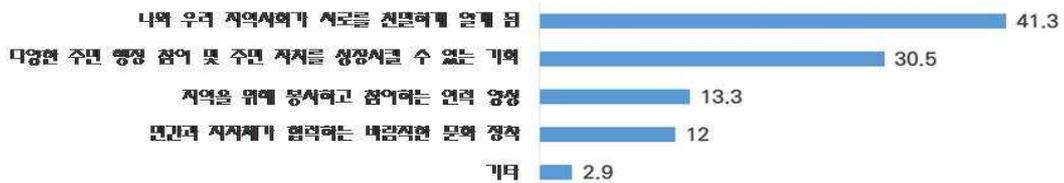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개인적 · 사회적 변화 설문 조사 결과

개인적 변화 (n=407. %)



사회적 변화 (n=407. %)



(2015. 2월. 석촌시 미디어담당관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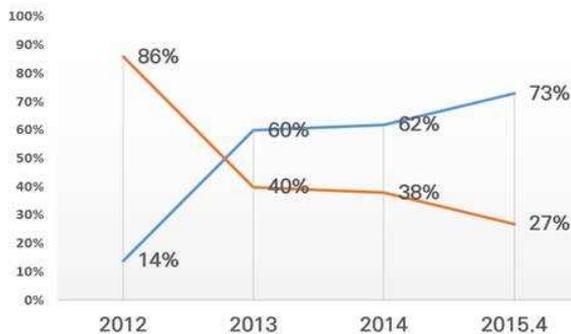
27

3-3. 주민과 사회의 변화(2)



주민 참여 문턱 낮추는 행정 혁신으로 일반 주민이 사업 주체로 등장

- 주민 : 개인 3인 이상 연대서명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구분	총지원수	주민	단체
		지원수	지원수
2012	1,187	181	1,026
2013	973	582	391
2014	714	445	269
2015.4	390	286	104

28

3-4. 마을활동가의 성장



마을활동가의 발굴과 성장

마을활동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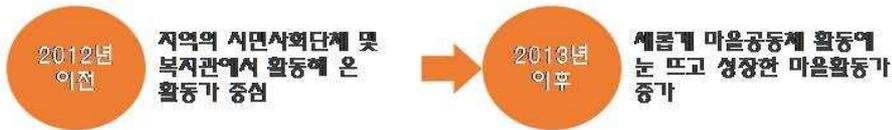
- 자신의 마을공동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마을넷 운영진, 저서구생태연구소장단 실무자, 마을기업인큐베이터, 마을지원활동가, 사업별 컨설턴트, 액티브 커뮤니티플래너 등

마을활동가 성장 과정

- 마을활동가는 교육과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
- 보조사업을 경험한 주민들이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을활동가의 변화



3-4. 마을활동가의 성장



마을지원활동가, 인큐베이터 사례

성동구 마을지원활동가 손병호

2008년 '성동주민센터'에서 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전담협력단 마을지원활동가 1호 직원

지난해 손병호 씨는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금호동, 행당동에서 성동구 전체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마을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적 오지랖의 소유자인 그가 전하는 '유쾌한 마을살이'.



서대문구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강순영

2012년 서대문구 6개 부모 커뮤니티 모임인 '사슴숲'에서 활동 시작 현재 마을기업사업단 인큐베이터

강순영어린 어름보다 '곰장어'로 더 많이 불린다. 9살, 3살 난 두 아이의 엄마. 혼자 어린이 책임을 지렀다가 멋지게 땀 흘린 경험도 없다. 그러다 친한 인니의 권유로 부모커뮤니티에 참여 하며 마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 린이집 엄마들려 힘을 모아 어린이집을 협동조합 '곰세알'로 전환시켜버렸다. '혼자 허러 면 힘든 열들어 어것이 함께하니 되는구나'를 마을에서 알게 된 후로 지난해에는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단에서 사업지원보좌장으로, 올해는 마을기업사업단 인큐베이터로 활동 중이다.



3-4. 마을활동가의 성장



아파트 사례

서대문구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 문효심

양천구 소속 커뮤니티 플래너 2년 차

서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60%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한다. 그만큼 아파트는 서울시민에게 보편적인 주거공간이다. 하지만 현관을 걸으면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아파트 생활은 독립적인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한 곳에 오래 살어도 이웃이 누군지 모를 만큼 고립적이고 폐타적으로 살게도 한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이하 '커뮤니티 플래너')는 아파트 생활의 벽을 낮추고 이웃을 만들도록 돕는, 촉매역 같은 존재다.



노원구 한신아파트 마을상담원 고창륵

아파트 입주대표로 시작해 서울시 마을상담원 활동가로

올 해에 만난 시민들이 평생 동안 만나는 시민의 수보다 많다" 고 말하는 고창륵 씨.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마을활동을 시작했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상담원으로 열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3-4. 마을활동가의 성장



마을 강사 사례

관악구 마을공동체 전문강사 박경란

선임동 15년 거주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꾸준히 활동하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임인 '문화동네' 이문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작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방법과 사례를 분석해주고 명칭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전문강사 박경란 씨. 그녀는 마을살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동작구 마을공동체 전문강사 김영림

2011년부터 상도국주도서관에서 도토리 자원봉사 활동

교과, 복지관 등에서 정(소)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마을 강의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역는 다른 강역역는 달리 강서역 수강생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강서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에는 잘 꾸미진 교연으로 정 책을 어기려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책을 거듭할수록 마을공동체 강역는 열명의 전담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사 수기 중





4. 나가며-남은 과제

4. 나가며...남은과제

낮은 시민 체감도, 다양한 주민 참여 미흡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인식 변화 지체 현상

⇒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 필요

민과 관의 사업 추진 과정 차이 존재

⇒ 성과 중심 행정 프로세스와 과정 중심 마을 사업의
간극으로 주민 피로도 발생

⇒ 민관협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주민자치위원 등 전통적 주민조직의 참여 미흡

⇒ 전국적으로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치적
여해관계로 인한 조심스러운 접근

⇒ 행정동단위 마을계획 추진으로 극복



(2015.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조사결과)



감사합니다

붙임 3 예술의 사회적 가치('삶의 예술'을 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 '삶의 예술'을 위하여 -

2015. 10. 27.

박승현(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생활문화?

● 동아리 사업

● 아마추어 지원사업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2001년 12월 제정 및 공포)

- ① 예술 :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 예술(미디어예술 제외)
- ② 미디어예술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
- ③ 전통예능 : 아악(雅樂), 능악(能樂), 가부키 등 일본의 국가 전통적 예능
- ④ 예능 : 講談, 浪曲, 漫才, 歌唱, 기타 예능(전통예능 제외)
- ⑤ 생활문화 : 차도, 꽃꽂이, 서도,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
- ⑥ 국민오락 : 바둑, 장기, 기타 국민적 오락을 말함.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8조~12조 (2001)』

제12조(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국가는 생활문화(차도, 꽃꽂이, 서도,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 국민오락(바둑, 장기, 기타 국민적 오락을 말함), 출판물 및 레코드를 보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산법) 1974년 제정

한국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

제2조(정의)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아마추어(Amateur)

(국어사전) 아마추어 :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기는 사람. '비전문가'로 순화

그리스인들의 삶의 이상은 칼로칼카티아(Kalokagathia), 즉 선미(善美)였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폴리스 시민으로서의 아레테(탁월함 Arete)를 갖춘 사람, 즉 심신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정치, 군사, 경기에 출중한 사람을 칼로카가토스(Kalokagathos)라 불렀다. 이는 또한 경기자(아마추어)의 이상형이었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되었다. 당시 아마추어란 순수하게 운동 경기를 애호하는 비직업적 경기자를 말한다. 금전 및 기타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취미, 교양, 오락으로서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대 올림픽(1894)의 창시자, 쿠베르탱

"인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척도는 그 사람이 승리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정 당당히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올림픽 운동은 세계에 하나의 이상을 심어주는 일이며, 그 이상은 바로 현실 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기쁨, 미와 교양,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근로, 이렇게 3가지이다."

올림픽에는 오직 아마추어만 참가

1894년에 IOC에서 새로 만든 첫 규정은 올림픽에는 오직 아마추어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프로 대 아마추어(Professionalism vs Amateurism)은 19세기 때 스포츠에 있어서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

(국어사전) 프로페셔널 :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프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 'Profess'에서 비롯,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과학이 대학에서 전문학으로 강의되면서 과학과 지식의 전문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에 연동되어 갖가지 전문직(profession)이 태동했다. 뉴먼은 「대학의 이념」(1873)에서 "지성의 연마란 유용성이나 실리를 위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knowledge its own end)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드디어 생활과 결별할 준비로 '순수한 지식 자체의 목적'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교양'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전문직(프로)의 취미('교양')

뉴먼이 「대학의 이념」을 발표할 무렵 신사 계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교회 성직자, 법률가, 고급 관리, 장교 등 상류 계층 신사들이 전문직에 진출하고 이어 대학 교수, 과학자, 의사, 문필가로 이루어진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이 신사 계층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당시 근대 과학은 런던의 사교계 또는 교양 사회를 구성한 일부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 즉 젠트맨의 지적 취향, 취미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의 17세기는 취미의 시대로 과학에 대한 취향도 여러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과학을 산업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사답게 그것을 문예·미술·음악과 같이 고상한 지식, 즉 교양으로 반기고자 했다.

기술과는 완전히 다름을 강조하면서 '교양'으로서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전문가의 시대

인류 역사상 하나의 분야에만 능통하다는 것이 추앙 받는 시대는 최근 200년에 동안 나타난 특이한 현상.

특히 정신적('정신성'의 분리)인 분야, 달리 표현하여 '과학'이라고 인정되는 분야의 전문가의 시대이다.

과학(scientia 지식)은 기술(techne 기여)과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그 개념을 정립하였다.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지식(scientia)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듯이 일반적인 지식(knowledge)의 의미로 오랫동안 쓰였다. 17세기 당시만 해도 과학자는 철학자이며 문인이었다. 과학자(scientist)란 말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철학자 휘얼이 1834년에 처음 만들고 1840년경부터 쓰였다.

과학이 실험(experiment)을 수반하는 이론적, 체계적 인식활동이며 그 성과인데 비해 기술은 대체로 생산현장에서 갖는 체험, 즉 실습(practice)을 통해 개별적, 기계적 인식이며 성과를 뜻하게 되었다.

토론자의 첫 번째 질문

'고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고대 그리스 시대는 노예경제 사회

고대 시민은 혜택 받은 소수의 '오이코스 전제자'(Oikosdespot : 가장)

경제(Economy) = 오이코스(oikos : 집) + 노미아(nomia: 관리)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 :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에서 유래

동양에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에서 경제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자유시민에게 주어진 폴리스(Polis)에서의 지위는 오이코스 전제자(Oikosdespot)의 지위에 기초하고 있었다. 오이코스(Oikos)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폴리스에 대비되는 사적 생활단위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이러한 '폐쇄적 가정경제에 기초한 지배 신분체제의 수직적 연속관계'는 장거리 무역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발생하면서 붕괴

근대의 혁명적 요소

인류 최초로 노동하고 생산하는 주체와 일상생활을 긍정함

근대의 이상 :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익) 추구가 상호 발전하는 사회질서를 이루며, 그러한 주체가 생성되는 과정이 '생산과 가정생활'이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됨.

일상생활의 구성요소

1. 경제(영역) : 사람들이 상호연계 되어 있는 공간
2. 가정(영역) : 경제의 재생산 단위, 내밀한 감정과 주관성의 발현

고대사회 :

고대의 지배적 윤리는 생산과 가족생활을 -명상이나 시민참여와 같이 더
고차원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들에 의해 규정되는- '훌륭한 삶'의 하위구조
로 취급

중세사회 :

헌신적인 금욕과 독신생활을 기독교적 실천의 최고 형식으로 보고, 특별
한 사람(목회자 등)을 통해서만 '천국의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사회 :

근대초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신을 따르는 일은 무엇보다도 천
직(calling)과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상의 삶이 신성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노동하는 일상을 천직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훌륭한 삶
을 선택할 수 있다." 주장했다.

근대의 위기

산업혁명을 통해, 그때까지 사회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던
경제시스템이 이탈하여 '자기 조정적 시장(Self regulating
market)'이 성립한다.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윤극대화를 오로지 추구하
는 '경제인(economic man)'이라는 자연법과 인간본성에 기
초한 '시장경제의 목적론적 기원론과 진화론'을 펴게 된다.

이윤추구라는 경제원리가 사회를 작동시키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다.

창조경제의 부상

이윤추구와 소득증대가 더 이상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

매슬로는 경제성장과 개인소득 증대와 더불어 개인의 생리적 욕구 충족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관한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계속 상승

창조경제 용어의 창시자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2001) :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함에 따라 스스로의 잠재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창조경제(창조상품과 서비스시장)이 형성된다."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 :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

개개인이 자신의 내부에 잠재된 창조적 역량을 끌어내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실현의 길을 열 수 있을 때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는 높아지며, 그것이 곧 사회적 창의성을 발현하는 밑바탕이 되어 국가경제의 미래 비전을 열게 된다. 결국 개개인의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주체는 미래 창의 역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예술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창조성을 살려내는

'일상적 삶의 기술'

토론자의 두 번째 질문

예술의 본유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뒤바뀐 것인가?

예술의 3대 가치?

예술의 3대 가치와 효과

구분	내역
문화적 가치/효과	문화자본 증가, 정체성 강화, 문화적 가치관 확산
사회적 가치/효과	건강 증진, 인적자본 제고, 사회적 자본 및 사회응집력 제고,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경제적 가치/효과	소득 증대, 고용 창출, 마케팅 강화, 투자 촉진, 성장잠재력 제고, 사회적 비용 감소

※ 문화경제학자인 아르조 클레이머(Arjo Klamer)가 문화의 가치를 문화적(내재적)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함.

질문 : 이제 우리는 예술의 본유적 가치를 오히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답변 : 예술의 본유적 가치를 사회·경제와 구분하는 것은 '예술만의 순수한 가치가 사회·경제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전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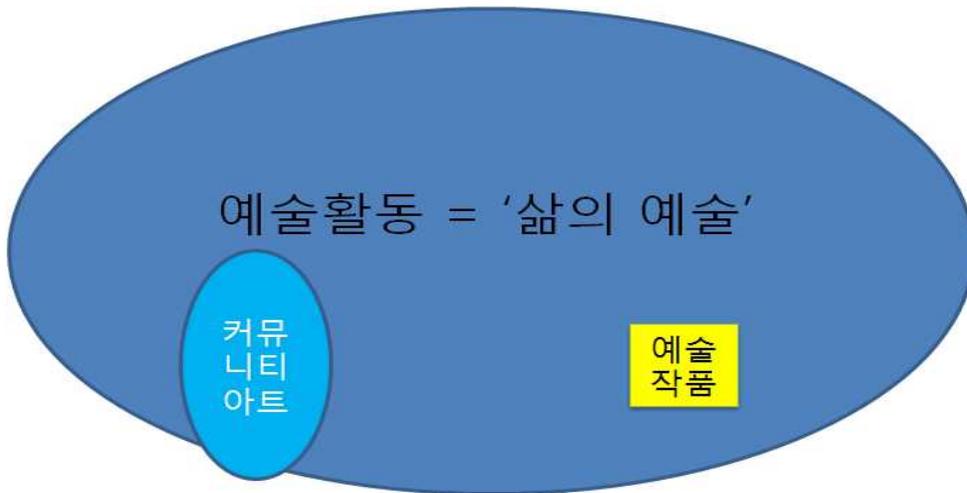
질문 : 심미적이고 인지적인 가치는 이러한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답변 : 심미적이고 인지적인 가치는 예술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예술작품은 예술활동의 부산물임과 동시에 고도의 창조물이다.

질문 :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산물인지에 관심을 두는 접근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인가?

답변 : 아니다. 본질과 부산물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 단지 예술, 경제 등의 개념이 바뀔 뿐이다.

11



인간의 경제란 원래 사회적 관계 속의 하나의 요소이며, 시장은 사회적 권위(social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 부수적 특징이다. -칼 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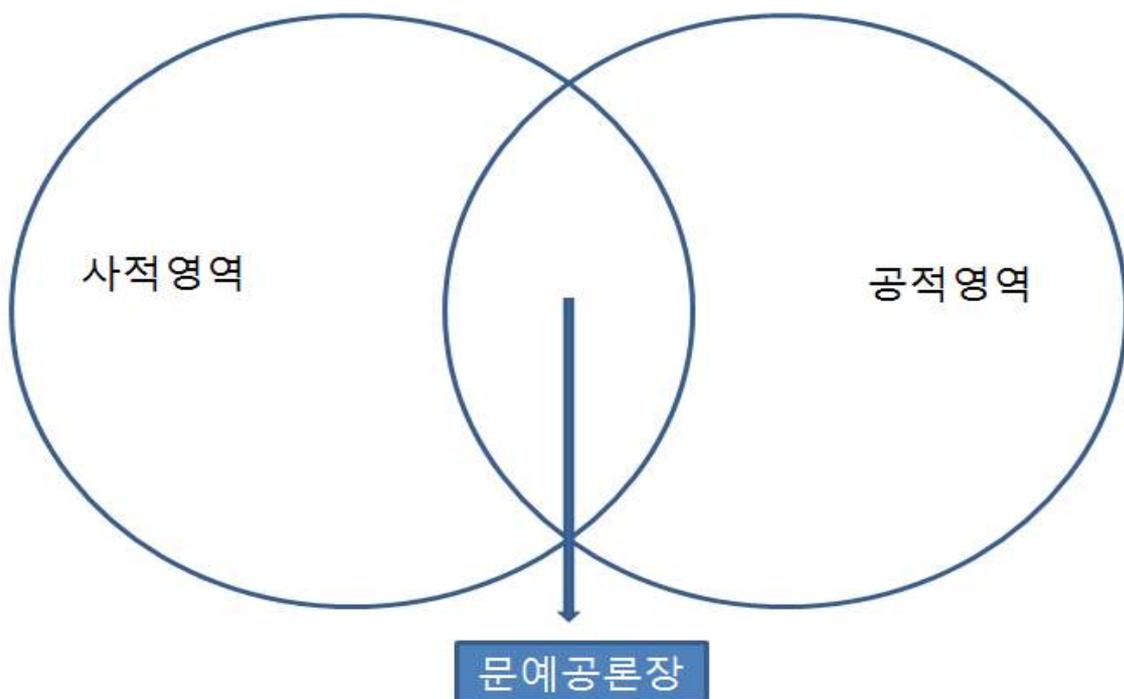
경제란 과학 및 예술을 기초로 그것들을 산업 및 소비생활 가운데 살려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인간행동의 기준(윤리)과 룰(법 포함)의 체계이다. -존 러스킨-

There is no wealth but life. (생명과 생활이 충실할 때 풍요가 있다.)

토론자의 세 번째 질문

부천의 생활예술 생태계가 자율조직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것인가?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



창조적 사회의 새로운 주체

클럽(club) : 새로운 주체 형성의 문예공론장 동아리?

클럽 club :

클럽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치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라는 뜻. 영국에서는 16세기 초부터 클럽이 형성되었다. 대부분은 상류사회의 의 단체로서, 직업별로 만들어져 상호의 친목을 도모와 상호부조.

개인단위 클럽이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은 17세기 후반~18세기인데 문학·예술 및 각종 취미 동호회 및 각종 스포츠클럽 형성.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교외에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이 골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클럽의 운영은 회원의 각출금이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며, 임원도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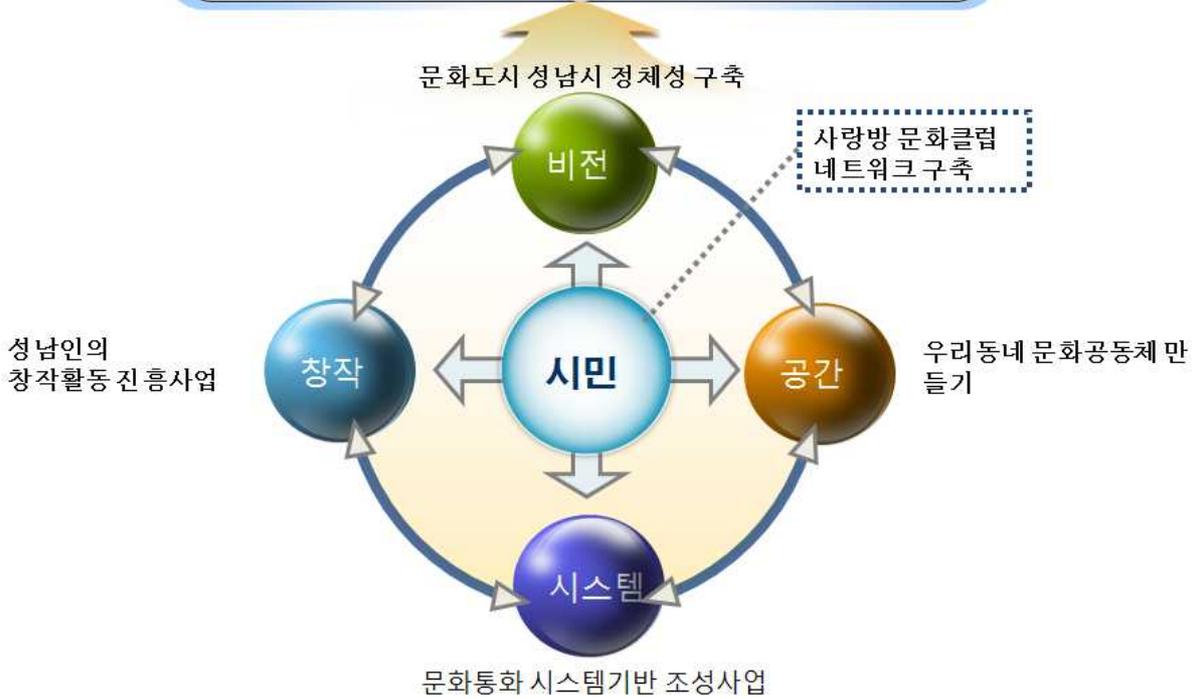
하버마스는 서구 민주주의의 기초가 '의사소통의 자유'와 '비판적 공개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공공성'이라 보고, 이 출발이 18C 유럽에 번창한 '커피하우스'와 '살롱' 등 문예공론장으로부터 탄생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살롱'을 통해 '문예'를 거쳐 신문과 정당, 의회로 공론장이 전개되었고, 이는 과거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사회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성립은 신분제 사회의 전제주의 통치와 달리 민중의 생활과 국가 사이에 두 차원의 영역을 증재하는 '공개적 마당'의 형성과 병행한다.

- 인천 문화바람의 '활동가'
- 성남 사랑방의 '운영위원회'
- 전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협의회'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문화도시' 구현



엘 시스테마의 교육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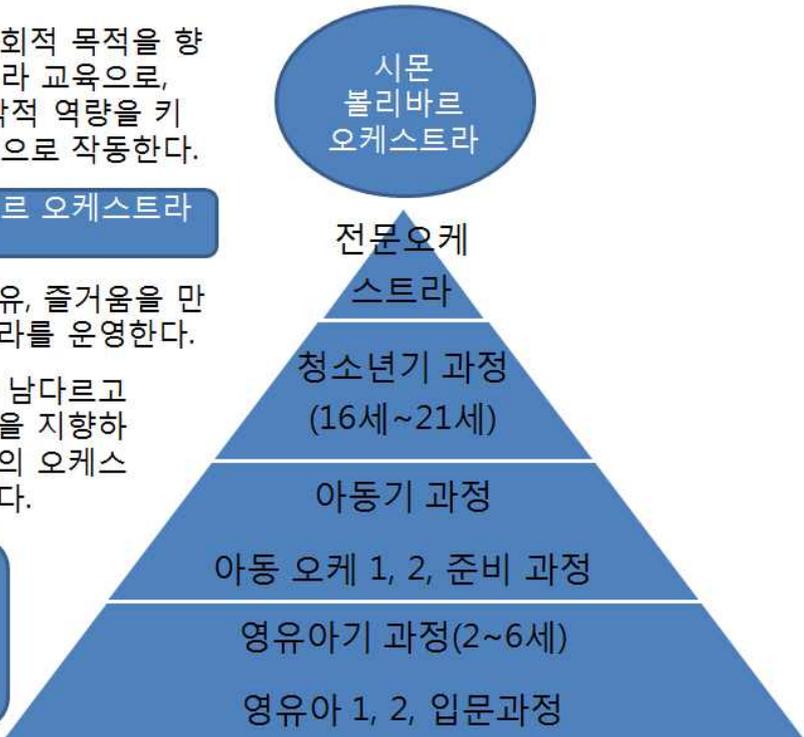
엘시스테마의 한 축은 (사회적 목적을 향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다른 한 축은 (자국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는) 전문 음악교육 현장으로 작동한다.

최정상에는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가 있다.

모든 교육에서 열정과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남다르고 더 높은 수준의 음악활동을 지향하는 아이들은 최상위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향해 꿈을 키워간다.

엘 시스테마는 음악적 수준이 높게 성취되었을 때, 사회적 미션의 성취 역시 가능하다고 믿는다!!!



To play & To f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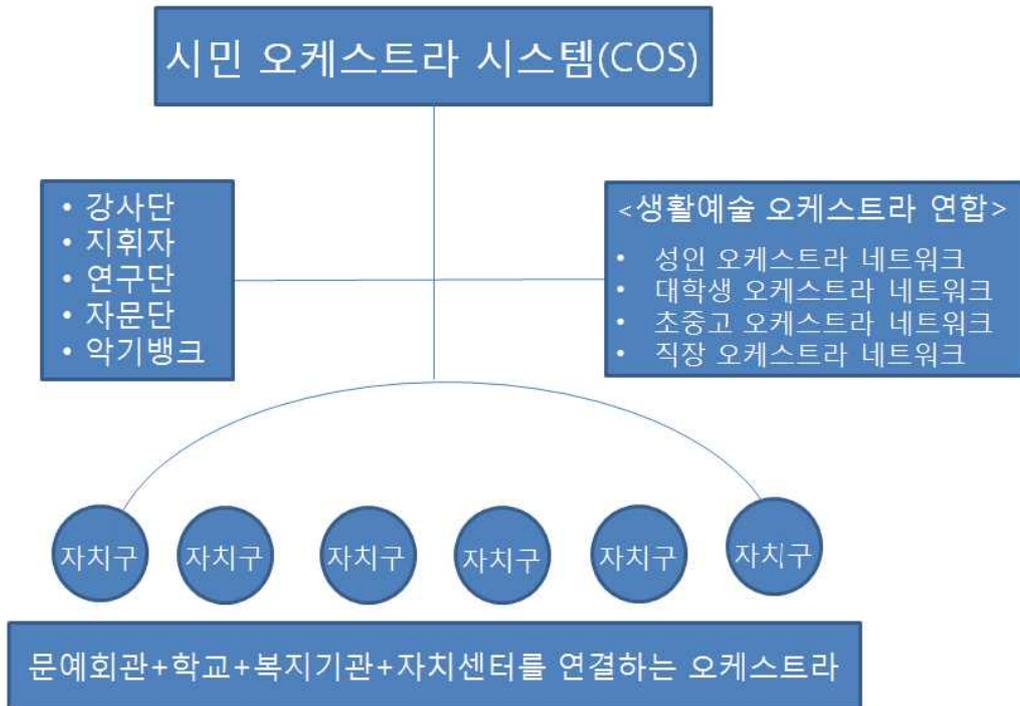
엘 시스테마 아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탁월함이다.
 그들은 위대한 음악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뛰어 넘어 탁월해
 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을 존경한다.
 엘 시스테마의 학생과 졸업생들은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문장
 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다.
 어린 음악가들은 엘 시스테마에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해간다. 또한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 안전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추구해 나간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실현
 가능한 일생의 꿈을 꾸는다.
**그들은 인생의 목표와 음악가로서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을
 배운다.**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동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Orchestra for All



시민 오케스트라 시스템



감사합니다

문화로 기(억)·상(상) 토론회 자료집

발 행 인 : 이 진 선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천시
주 관 : 부천문화재단
발 행 일 : 2015년 10월 27일
인 쇄 처 : 넥스트 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Tel 032.320.6363 www.bcf.or.kr